

2021년 서구 종합감사 결과

□ 감사개요

- 인천광역시에서는 자체 감사계획에 따라 2021. 11. 22.부터 12. 3.까지 10일간 3개반 15명이 참여하여 2018년 4월부터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한 서구 정기 종합감사를 실시하였다.
- 감사결과 총 79건(본처분 48건, 현지처분 31건)의 지적사항이 발견되어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 등 처분요구를 하였으며,
- 감사기간 중 발췌한 수범사례 15건은 대 내·외 공개함으로써 산하 전 기관의 업무추진에 참고하도록 할 계획이다.

□ 감사결과

구분	처분현황(건)			처 분 요 구						
				처분종류(건)				재정상조치(건/천원)		
	계	본 처분	현지 처분	계	시정	주의	개선 권고	계	추징 환수	환급 금액
계	79	48	31	95	44	40	11	17 / 809,919	14 / 719,892	3 / 90,027

2021년 서구 종합감사 결과

[지적사항]

인 천 광 역 시

시정 요구

제 목 취득세(대도시중과 등) 부과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서구

관 계 부 서 ○○과 외 1개 부서

내 용

1. 대도시내 법인 중과세 관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르면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하여 중과세 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규정과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6호 그리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첨단산업의 공장, 공해발생정도가 낮은 공장 및 도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장등(이하 “도시형공장”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대도시 내에 있지 않으면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등 대도시 내에서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 보아 그 업종에 직접 사용하는 조건으로 「지방세법」 제11조에 따른 해당 일반세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지방세법」 제13조 제3항 제1호 가목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 본문인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지방세법」 제20조제2항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물건이 제13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의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13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서구 ○○과에서는 대도시내 설립 5년 이내인 (주)□□ 법인이 서구 ㄱ동 ***-**-**번지, 토지 000㎡, 건축물(공장) *동 000㎡, *동 000㎡를 000원에 20**.**.*. 매매 취득하면서 도시형공장으로서 사용할 목적으로 일반세율을 적용한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였으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과 △△에 임대 하여 그 임대한 부분은 취득세 중과세 대상임에도 이에 대한 사실 확인 미흡으로 취득세 등 000원을 부과 누락한 사실이 있다.

2.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 관리

「지방세법」 제10조제5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공매¹⁾를 통한 취득 시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뿐만 아니라 채무인수액 등 간접비용까지 포함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주택임대차보호법」²⁾ 제3조제1항과 제4항 및 제3조의5에 따르면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친 때에는 그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한 효력(이하 “대항력”이라 한다)이 생기고,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으며,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임차주택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 행하여지더라도 소멸하지 않는다³⁾고

1) 공적인 기관에 의해 강제적으로 행해지는 매매와 민사상의 강제집행 수단으로 행해지는 경매를 포함

2) 상가의 임차보증금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및 제8조에 규정되어 있음

3)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함에 있어 경락인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에게 지급할 임차보증금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는 것이

되어 있으므로 낙찰자가 인수하는 대항력 있는 임차보증금은 채무인수액에 해당하여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한다.

또한 「민법」 제321조 및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에 따르면 유치권⁴⁾자는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위 채권금액도 채무인수액에 해당하여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한다.

그러나 서구(○○과, □□과)에서는 공매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낙찰대금 뿐만 아니라 낙찰자가 인수하는 대항력 있는 임차보증금, 유치권자에게 변제하여야 하는 채권금액 등을 포함한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였는지를 법원의 매각물건명세서, 임대차관계조사서 및 배당표 등에서 확인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 확인되는 경우 「지방세법」 제21조에 따른 부족세액을 부과·징수하여야 하나 서구 **동 ***-*번지 A 등 00명의 취득세 등 000원을 부과 누락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은

[시정]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부과되지 아니한 대도시 법인중과 등 00건, 취득세 000천 원을 조속히 부과·징수하시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공무원에 대한 업무연찬 및 교육실시 등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고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추후 경락인에게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대항력 있는 임차보증금 상당액은 당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비용으로 과세표준에 포함(2010.4.20. 조심2010지0210)

4)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이를 유치할 수 있는 권리

인천광역시

시정 요구

제 목 취득세(신·증축, 지목변경) 부과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서구

관 계 부 서 ○○과 외 1개 부서

내 용

1. 건축물(신·증축) 취득세 관리

「지방세법」 제6조에서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며, 제7조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고 되어 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제6항에 의하면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하고,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을 말한다)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보며, 「지방세법」 제20조 및 제21조 규정에 따라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납세의무자가 「지방세법」에서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지방세법」 제10조부터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서구(○○과, ◎◎과)에서는 신·증축 사용승인에 따른 건축물을 취득하고도 취득세 신고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ㄴ동 ***-**-****번지 등 00개소의 취득세 등 000원을 과세누락한 사실이 있다.

2. 토지 지목변경 취득세 관리

「지방세법」 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의하면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며, 「지방세법」 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세표준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과 지목변경 후의 시가표준액의 차액(다만, 「지방세법」 제10조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5조(세율의 특례) 제2항의 취득세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납세의무자가 「지방세법」에서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지방세법」 제10조부터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서구(○○과, ◎◎과)에서는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신고납부를 이행

하지 아니한 ㄷ동 ***-***번지 B 등 00인에 대하여 관련 취득세 등 000원을 과세 누락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은

[시정]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부과되지 아니한 신·증축 건축물 등 00건, 취득세 000천 원을 조속히 부과·징수하시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공무원에 대한 업무연찬 및 교육실시 등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시정 요구

제 목 주민세(재산분) 부과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서구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주민세 “재산분”은 구 「지방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부터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매년 7. 1. 현재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로써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에 해당하는 사업소용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초과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업소 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의 세율을 적용하여 매년 7. 31.까지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군수·구청장에게 주민세 재산분을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납세의무자가 주민세 재산분을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지방세법」 제80조와 제81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 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서구 ○○과에서는 매년 7월 1일 현재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주민세 재산분을 신고하고 납부하지 않은 (주)●● 등 00개 사업장에 대한 20**년~20**년 주민세 재산분 00건, 000원을 부과 누락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은

[시정]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부과되지 아니한 주민세 00건, 000천 원을 조속히 부과·징수하시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공무원에 대한 업무연찬 및 교육실시 등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시정 요구

제 목 재산세(건물분) 부과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서구

관 계 부 서 ○○과

내 용

1. 건축물(신·증축) 재산세 관리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법」 제121조에 따라 재산세 과세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재(해당사항을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장을 갖춘 것으로 본다)하여야 하며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 과세대장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07조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과세표준액에 같은 법 제111조 및 제112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방세법 시행령」 제119조에서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09조에서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1년 미만의 가설건축물은 비과세하되 1년 이상의 가설건축물은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납세의무가 있다.

그러나, 서구 ○○과에서는 매년 과세기준일까지 멸실, 신축, 증축, 개축 및

대수선 등의 사유로 건축물의 현황이 변동된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에 변동사항을 정리한 후 세액을 산출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하나, ㄷ동 *블록 *로트 건축물 등에 대하여 20**년~20**년도 건물분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포함) 0건, 000원을 과세 누락한 사실이 있다.

2. 시설물(골프장) 재산세 관리

「지방세법」 제6조에서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며,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 급수·배수시설이란 송수관(연결시설을 포함한다), 급수·배수시설, 복개설비를 말한다.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표준세율과 관련하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체육시설법 시행령에서는 체육시설업 중 회원제 골프장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골프장 안의 토지 및 건축물 중 골프코스, 주차장 및 도로, 조정지, 조정지, 관리시설 등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축물을 구분하여 등록하도록 규정하고(제20조 제3항), 그 중 특히 관리시설의 범위에 관하여 '사무실·휴게시설·매점·창고와 그 밖에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포함하되, 수영장·테니스장·골프연습장·연수시설·오수처리시설 및 태양열 이용설비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취득세와 재산세 등의 부과 대상이 되는 급배수시설 등의 시설물은 그것이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체육시설법 시

행령 제20조 제3항 제5호가 규정한 구분등록 대상인 ‘관리시설’에 해당하고, 그런 이상에는 그것이 반드시 토지 및 다른 건축물 등과 따로 구분등록이 되어야 하는 것인지, 나아가 실제로 따로 구분등록이 되었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가)목이 규정한 ‘골프장용 건축물’에 해당한다.

그러나 서구 ○○과에서는 매년 과세기준일까지 관내 회원제, 대중제 골프장에 대한 시설물을 포함한 건축물 조사를 통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하나, ◇◇와 (주)★★의 급배수시설, 가스관, 스프링클러, 열공급관 등 시설물에 대하여 20**년~20**년도 건물분 재산세 등 00건, 000원을 과세 누락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은

[시정]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부과되지 아니한 신·증축 건축물 재산세 등 00건, 000천 원을 조속히 부과·징수하시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공무원에 대한 업무연찬 및 교육실시 등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시정 요구

제 목 재산세(토지분) 부과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서구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 각 호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제1항제2호 가 목 등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 3종으로 구분하고, 분리과세대상 토지는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 등이 해당되고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이 포함되며,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나대지 등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다만, 도시지역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부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지역을 포함한다.)에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에 따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지상건축물, 「지방세법」 제104조제3호에 따른 주택(각각 그 해당 부분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을 면제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인천광역시(☉☉과)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서구 ㄱ동 ***-**-**번지 일원의 보전녹지, 생산 녹지, 자연녹지지역 총 000㎡를 용적률 000%이하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고시(인천광역시고시 제20**-***호[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20**-**-**-**)하였다.

서구 ㄱ동 ***-**-**번지 일원의 항공사진 등을 활용하여 살펴보면, 건축자재 적치장, 차고지 등으로 이용중이며 일부는 농지로 이용되고 있다. 따라서, 공공시설용지에서 비공원 시설 부지로 변경 고시된 토지에 대하여는 사권제한토지에 따른 감면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도시지역분 재산세도 과세하여야 한다.

그러나 서구 ○○과에서는 농지 미사용 잡종지 토지, 농지 등에 대하여 항공사진, 관련부서의 과세자료 및 현지출장 확인을 통해 종합합산 과세대상, 감면 미적용 등 적정한 세율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20**-**년도 토지분 재산세 등 00건, 000원을 과세 누락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은

[시정]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부과되지 아니한 재산세 00건, 000천 원을 조속히 부과·징수하시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공무원에 대한 업무연찬 및 교육실시 등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주의 요구

제 목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 미충족자 승진의결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서구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지방***** C는 20**. *. *부터 20**. *. *까지, 지방***** D는 20**. *. *부터 20**. *. **까지 인천광역시 서구 교육훈련 부서인 ○○과에서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실적을 관리하는 실무담당자로 근무하였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8조의3(교육훈련실적의 인사관리 반영)에 따르면 지방 공무원의 교육훈련시간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승진임용 등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7조(교육훈련 이수시간의 승진 반영 등)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5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별표1]의 방법 및 기준에 따라 교육훈련 이수시간을 승진임용에 반영하여야 하고,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채우지 못한 공무원은 승진심사 대상 또는 승진시험 응시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르면 공무원의 교육훈련 실적은 자치단체 인사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리하되, 동일한 교육내용 또는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동일직급에서 1회에 한하여 인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다만, 기관별·직급별 필수교육, 법령의 개폐 등으로 재교육이 불가피한 사항과 연구사·지도사 및 일반직의 경우 해당 직급 재직기간 등을 감안하여 교육이수 3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동일 교육과정이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교육실적 인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교육훈련 담당부서는 오류 또는 부정으로 입력한 경우 즉시 입력 내용을 삭제하고 부정입력자에 대하여는 필요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실적의 적정 관리를 위하여 분기별로 점검을 시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서구에서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동일직급에서 3년 이내 동일과정을 중복으로 이수한 실적 또는 중복 입력된 실적 등에 대해서는 즉시 삭제하여야 하며, 승진심사 시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 실적을 채우지 못한 공무원이 있는 경우 승진심사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금번 감사기간동안 20**. *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서구 승진의결자 중 *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실적 현황을 확인한 결과, 서구에서는 동일직급에서 3년 이내 동일과정을 중복으로 이수한 교육 실적을 제외하지 않고 승인하여 ****급 E 등 0명에 대해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 시간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여 각 승진의결일 기준 승진심사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그 결과, 해당 중복 교육실적을 제외할 경우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 시간을 채우지 못해 승진심사 대상에서 제외되었어야 할 대상자를 지방**** C는 20**. *. **, 지방**** D는 20**. *. * 승진심사 시 부당하게 포함시켜 심사를 진행하였고, 해당 대상자가 승진의결 되었을 뿐 아니라 서구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에 대해 지방**** D는 문답조사에서 승진대상자의 3년 이내 중복교육 실적을 제외하지 못한 것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며, 해당 교육실적에 대한 교육명이 상시

학습시스템에 20**년은 ◇◇사이버교육(제00기)로 20**년은 ◆◆e러닝으로 다르게 입력되어 있었고, 교육과정 하나 하나 성격을 확인하기 어려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은

[주의]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 실적 점검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주의 요구

제 목 임기제 공무원 채용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서구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인천광역시 서구(○○과)에서는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신규임용)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제17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한 임용의 요건)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으로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고 있다.

1. 면접시험 불합격 기준 적용에 관한 사항

서구에서는 ●●분야 지방◆◆급 공무원 채용을 위해 「인천광역시 서구 인사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 [별지 제2의2서식]에 따라 5개의 평정항목에 대해 각각 상(10점~7점), 중(6점~4점), 하(3점 이하)로 평정하여 20**. *. ** 면접시험을 실시하고, ‘전체 면접위원의 과반수의 면접점수가 25점 미만인 경우’를 사유로 면접대상자 *명 전원을 최종 불합격시켰다.

임용령 제50조의3(면접시험 및 최종합격자 결정 등) 제5항에 따르면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면접시험 및 최종합격자 결정의 경우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제44조제3항의 평정요소¹⁾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시험위원

1) 면접시험은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며, 다음 각호의 모든 평정요소를 각각 상, 중, 하로 평정한다.

1.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3.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예의·품행 및 성실성
5.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하였을 때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다만, 경력경쟁임용시험의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하거나, 제62조제2항에 따른 공고²⁾를 하고 제44조제3항에 정한 평정방법과 달리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평정성적이 우수한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서구 인사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면접시험 평정 및 서류전형 기준)제1항에 따르면 면접시험은 해당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의2서식]에 따라 검정하는 것으로,

[별지 제2의2서식] 경력경쟁채용시험 등 면접시험 평정표에는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와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불합격”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서구에서는 경력경쟁채용시험 등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규칙 [별지 제2의2서식]에 따라 검정하되, 합격자는 임용령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결정하거나, 평정요소에 점수를 부여하여 합격자를 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내용을 모든 응시자격자가 알 수 있도록 시험실시 10일 전까지 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 후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서구에서는 임용령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 최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했어야 함에도 ‘합격자 결정 방법

2) 시험실시기관이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려면 시험 실시일 10일 전까지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응시자격을 가진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시험실시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공고하지도 아니한 채 '전체 면접위원 과반수의 점수가 25점 이상인 경우' 라는 임의적인 합격 기준을 적용하여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면접 대상자 전원을 불합격시켰다.

그 결과 응시번호 *번 E의 경우 면접시험 점수 총점 000점(평점 00점)으로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 평정성적이 가장 우수함에도 불합격 되었고, 20**. **. ** 해당 분야 채용 재공고에도 응시하였으나 최종 불합격한 사실이 있다.

이에 대해 서구에서는 이와 같은 합격자 결정 기준은 면접심사 전 면접위원에게 배부하는 자료에 명시되어 있는 기준으로 해당 분야의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임용령에 따른 합격기준 외 합격기준을 추가한 사항으로 시험 전 응시자에게 이에 대해 알리고 있어 공정성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임용령 제44조 제3항 및 제50조의3 제5항에는 경력경쟁임용시험의 면접시험 평정방법 및 최종합격자 결정에 관하여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면접을 점수로 하여 실시할 경우 그 합격자 결정방법 등에 관해서는 반드시 모든 응시자격자가 알 수 있도록 시험실시 10일 전까지 공고하도록 하고 있는 바, 해당 분야의 적합한 인재를 선정하기 위해 공고 등 절차 없이 법령에서 정한 기준 외 기준을 추가했다는 서구의 의견은 인정하기 어렵다.

아울러, 법령에서 공무원 임용에 관하여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하고 있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간 공통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인사의 개방성 및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모든 행정기관은 응시자격을 가진 모든 자에게 공정하게 응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함으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을 임용하여야 한다.

2. 응시 자격요건 확인(서류전형 심사) 부적정

서구에서는 20**, **, ** ◇◇◇◇ 홍보 및 □□□ 활성화 분야 업무를 담당하는 일반임기제(지방*****) 채용을 위해 응시자격을 공고하고, 관련 분야 실무경력을 “○○○○ 홍보, ○○○○ 콘텐츠 개발, ○○○○ ●●●● 분석 등” 으로 한정하여 명시하였다.

임용령 제55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방법)에 따르면 법 제27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기제공무원(경력을 기준으로 하는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서류전형과 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제44조(임용시험의 방법) 및 제45조(임용시험의 단계)에 따르면 서류전형은 해당 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임용시험을 제1차 시험, 제2차 시험, 제3차 시험 등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1차 시험에 합격해야만 제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 제2차 시험에 합격해야만 제 3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따라서 서구에서 법 제27조제2항제3호에 따라 경력을 기준으로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고문에 당해 분야 인정 실무경력을 명확히 하고 응시자에게 그에 따른 경력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서류심사 시 응시자가 제출한 경력증명서 상 실무경력이 응시 자격기준에 적합한지를 면밀히 심사하여 적격자에 한해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금번 감사기간동안 서구에서 상기 분야 채용과 관련한 서류전형 심사 결과를 확인한 결과, 응시번호 *번 F의 경우 제출한 경력증명서에 20**, **, ** ~ 20**, **, **.까지 (주)□□ ◇팀에서 과장으로 근무한 사항만 기재되어 있을 뿐 담당업무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공고에서 명시한 관련분야 실무경력을 확인할 수 없음에도 서류 등 보완 없이 응시자격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심사하여 서류전형에

합격,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 임용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또한, 응시번호 *번 G의 ▼▼ 및 ■■■■ 경력과 응시번호 *번 H의 ㉠㉠㉠ ㉠ 경력, 응시번호 *번 I의 ◆◆◆팀 사원 경력은 각각의 응시자가 제출한 경력 증명서에 ㉠㉠㉠ 홍보, ㉠㉠㉠ 콘텐츠 개발, ㉠㉠㉠ ●●● 분석 등의 업무를 담당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공고에서 명시한 관련분야 실무경력을 가지고 있는 자로 판단하기 어려움에도 서류전형에 합격시켰고,

응시번호 **번 J는 경력 중 관련분야 실무경력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 겸 ◆◆◆◆와 ■■■■■ 편집을 제외한, □□에서 20**.*.**~20**.*.**. ㉠㉠㉠홍보 및 콘텐츠 제작 등에 근무한 경력이 1년 미만으로 공고에서 정한 응시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합격시키는 등 서류심사 시 응시자가 제출한 경력증명서를 제대로 검증하지 아니한 채 응시자 전원을 합격시킨 사실이 있다.

이에 대해 서구에서는 경력 인정 여부가 불명확한 지원자에 대한 합격 여부는 채용의뢰 부서장 및 해당팀장이 경력의 인정 여부 등 자격 유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고 있고, 면접에 있어서도 해당 부서장이 면접위원으로 참여하여 불명확한 경력 부분을 구두 면접을 통해 확인하고 있어 유사 경력으로 인해 문제가 없게 채용을 진행하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르면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 학력, 경력, 자격증 및 능력 등을 구체적으로 설정하여 공고하도록 하고 있고, 서구에서도 상기 분야 임용을 위한 공고 시 관련분야 실무경력을 “㉠㉠㉠ 홍보, ㉠㉠㉠ 콘텐츠 개발, ㉠㉠㉠ ●●● 분석 등”을 명확히 명시한 바 있다.

그러나, 서구의 의견처럼 경력 인정여부가 불명확한 지원자에 대한 경력인정 여부를 채용의뢰 부서장 등이 구두 면접을 통해 유사 경력으로 인정하는 것은 관련분야 실무경력을 모호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경력 등 응시자격요건을 정하여

경쟁의 방법으로 임용하는 경력경쟁임용시험 취지에 맞지 않는다.

또한, 서류전형 합격 여부는 채용의뢰 부서장 등이 아닌 시험위원이 결정하는 사항이며, 1차 서류전형 적격 여부가 불명확한 자를 합격시켜 2차 면접시험에서 경력에 대한 적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임용령 제45조(임용의 단계)를 위반하는 것으로 위 의견은 인정하기 어렵다.

아울러, 해당 서류전형은 적격, 부적격을 판단하는 소극적 전형으로 상기 응시자들이 서류전형에 합격함으로 인해 다른 응시자가 탈락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고, 최종합격자인 응시번호 *번 F의 경우 감사기간 중 경력증명서 보완을 통해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확인되어 합격자가 바뀌는 상황이 일어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서구에서 해당 서류 전형 단계의 채용 절차 운영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된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은

[주의] 앞으로 법령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시정 · 주의요구 및 권고

제 목 공무직 근로자 관리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서구

관 계 부 서 ○○과 외 1개 부서

내 용

인천광역시 서구에서는 「인천광역시 서구 공무직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감사일 현재 총00명의 공무직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다.

1. 공무직 근로자 업무분장 부적정

규정 제2조(정의)에 따르면 “공무직근로자”란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으로서 인천광역시 서구청 및 소속기관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 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말하며,

규정 제5조(직종의 구분)에 따르면 공무직근로자는 1. 단순노무원 2. 도로보수원 3. 행정보조원 4. 환경미화원 5. 청원경찰로 구분하며, 그 중 단순노무원은 시설물 관리나 공사작업인부 등 주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인력, 일일근무 시간 상 종일 내근을 필요하지 아니하는 현장근무인력과 방문민원인 접대 안내 등 단순잡역 보조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별표1]과 같은 근로자를 말하고, 단순노무원은 세입·세출, 보상업무, 회계장부관리, 금전취급, 기록검사 등 책임이 필요한 사무 등 정규직공무원이 수행해야 하는 사무에 채용할 수 없으며, 공무직근로자의 직종별·부서별 정수책정에 관한 사항은 [별표2]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서구에서는 공무원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규정 [별표2]에 따른 부서별·직종별 정수의 범위 내에서 채용하여야 하고, 직종을 임의로 변경하여 종사하게 할 수 없으며, 특히 단순노무원의 경우 시설관리, 현업종사, 지도단속, 단순조무 외 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금번 감사기간동안 서구 공무원근로자 중 단순노무원 업무 부여 현황을 확인한 결과, ○○과 소속 K는 ◇◇◇관리원으로 ▷▷▷ ◇◇◇(◆◆◆)를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야 함에도 20**. *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 이용신고 및 ■■■■ 신고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고, ㉠㉠㉠㉠관리원 ●●과 소속 L은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직종별 수행기능인 ㉠㉠㉠㉠ 시설물 관리 업무 외 ㉠㉠㉠ ㉠㉠ 미납 차량 압류 해제, ㉠㉠㉠㉠ 공공근로 관리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등 공무원근로자를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직종별 수행기능(채용목적) 외 업무에 종사하게 한 사실이 있다.

특히, ○○과 소속 K에게 부여된 “□□□ 이용신고 및 ■■■■ 신고 업무’ 업무는 「□□□법」 제7조(□□□개발·이용허가) 제6항에 따른 인·허가와 관련된 업무로써 정규직 공무원이 수행해야 할 업무에 해당되어 공무원이 아닌 공무원근로자에게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에 대해 서구 ○○과에서는 감사기간 중 서구 내 ‘□ 및 ㄴ 개발사업’으로 □□□ 개발 및 ■■■■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상기 근로자가 00년 가까이 □□□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 업무효율을 위해 상기인에게 “□□ □ 이용신고 및 ■■■■ 신고 업무’를 분장하게 되었으며, 공무원근로자에 대한 이해도가 없어 직종별 수행기능 외 업무를 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의견과 함께 규정에 맞게 업무를 부여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과 역시 ㉠㉠㉠㉠ 미납차량 압류해제 및 공공근로 관리 업무를 ㉠㉠ ㉠㉠㉠ 현장관리 업무와 연계되는 업무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업무를 부여한 사항으로 규정에 맞게 현장관리 업무 위주로 업무를 다시 부여 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2. 업무관리시스템(온나라시스템) 권한부여에 관한 사항

서구(○○과)에서는 감사일 현재 공무원근로자에게 업무상 필요한 경우 사용 부서(사용자)로부터 신청서 및 보안서약서를 징구한 후 업무관리시스템인 온나라 시스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제12조(접근권한 부여 원칙)에 따르면 정보시스템 접근, 행정정보 열람 등 모든 접근권한은 법령 또는 업무규정 등에 따라 허용된 자에 한하여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로 부여하되, 제18조(접근권한 점검·관리)에 따라 기관의 조직개편·인사발령·사무분장의 변경 등으로 업무담당자의 접근권한을 변경해야 할 경우, 권한관리책임자는 그 변경된 인사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접근권한을 변경하여야 하며, 권한관리책임자는 소관 정보시스템 및 행정정보에 대해서 접근권한 관리의 적절성 및 접근권한의 오·남용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금번 감사기간동안 서구 공무원근로자의 온나라시스템 권한 부여 현황을 확인한 결과, 감사일 현재 온나라시스템 상 직위(직급)이 ○○과 소속 K는 공무원의 직종인 지방 계약직(*****)으로, ●●과 소속 L은 서구 *급 이하 공무원의 대외직명인 주무관으로 부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5조(문서의 전자적 처리)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문서의 기안·검토·협조·결재·등록·시행·분류·편철·보관·보존·이관·접수·배부·공람·검색·활용 등 처리절차를 전자문서 시스템 또는 업무관리시스템 상에서 전자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규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4조(기안문의 구성)에 따르면 기안문은

두문, 본문 및 결문으로 구성하되, 기안문의 결문은 발신명의, 기안자·협조자·결재권자의 직위나 직급(각급 행정기관이 *급 이하 공무원의 직급을 대신하여 대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한 대외직명을 포함한다) 등으로 구성한다.

또한, 규정 제2조(정의)에 따르면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으로서 인천광역시 서구청 및 소속기관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공무직근로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서구와 공무직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서 제1조(호칭)에 따르면 조합원의 호칭은 ‘공무직’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서구 소속 공무직근로자가 온나라시스템을 이용하여 문서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 기안문 결문의 기안자의 직위·직급은 ‘공무직’으로 표시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서구에서는 상기 근로자가 온나라시스템 권한을 최초로 부여받은 날로부터 최대 00년 0개월이 경과한 감사일 현재까지도 온나라시스템 상 직위·직급이 잘못 부여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고

그 결과 기안문 결문에 기안자의 직위·직급이 오기 표기된 문서가 기안·생산되었을 뿐 아니라 기안자의 직위·직급이 오기된 문서가 서구 대내외로 시행됨으로써 서구 행정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은

- [시정]** 공무직근로자가 규정에 따른 직종별 수행기능에 맞는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업무를 다시 분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온나라시스템에 잘못 부여된 직위·직급을 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의]** 앞으로 공무직근로자가 규정에 따라 관리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고]** 공무직근로자 관리부서 및 인사부서에서는 공무직근로자 직종별 수행 업무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공무직근로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기관경고·개선·주의 요구

제 목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서구

관 계 부 서 ○○과 외 22개 부서

내 용

인천광역시 서구 각 부서에서는 「인천광역시 서구 공무직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6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및 제10조(채용절차)에 따라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등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미리 채용 업무의 내용, 채용조건, 채용자격 등을 7일 이상 공고하고, 필기시험, 실기시험, 서류전형 및 면접 등의 방법으로 자격에 적합한 사람을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고 있다.

1. 직무와 무관한 인적사항 요구 및 수집 등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에 따르면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³⁾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구직자의 본인의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기초심사자료란 구직자의 응시원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를 말함.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2017.7월, 관계부처 합동)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채용 시 입사지원서에 출신지역, 가족관계, 신체적 조건(키·체중, 용모 <사진부착 포함>), 학력 등 인적사항 요구를 원칙적으로 할 수 없으며, 채용공고 등에 직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 훈련, 자격 등 요구사항을 명확히 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2017. 6월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은 채용 시 입사지원서·면접에서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인적사항은 삭제하여야 한다.

금번 감사기간동안 20**. *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서구의 기간제 근로자 채용실태를 확인한 결과, ◇◇과 등 00개 부서에서는 응시 원서(이력서) 등 기초 심사자료에 사진 부착, 학력(학교명), 가족사항 등 평가에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항목을 요구·수집하고 있었고, ◆◆과 등 00개 부서에서는 면접심사 시 ‘용모’를 평가하거나 면접위원에게 출신학교 등 자료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5조(기초심사자료 표준양식의 사용 권장)에 따라 표준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양식을 정하고 그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서구에서는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위한 응시원서 등 기초심사자료에 대한 표준양식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감사일 현재 각 부서별로 다른 양식을 사용하고 있어 표준양식 마련 등이 요구된다.

2. 면접심사 부적정

「지방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 북」(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면접관은 원활한 면접운영과 공정하고 정확한 평가를 위해 정해진 프로세스에 따라 면접 절차를 준수하여 면접과정을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채용실시 기관의 장은

면접관이 올바른 역량평가자 및 기관의 대표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철저하고 체계적인 면접위원 교육을 필수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서구에서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위한 면접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정하고 정확한 면접심사를 위해 면접심사 전 면접위원에게 면접절차를 안내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당부하여야 하며, 면접위원은 면접 중 지원자에게 질문을 하면서 지원자의 답변내용 중 평가요소와 관련해 가점 및 감점요소를 관찰·기록하고, 지원자가 퇴실한 후 기록을 토대로 최종점수 및 면접관명을 기재하고 서명하되, 수정·훼손되지 않는 방법으로 면접심사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가. 면접위원 면접채점표 작성 부적정

서구 △△과에서는 20**년 □교사(기간제근로자) 채용을 위해 외부위원 3명과 내부위원 1명을 면접위원으로 위촉하고, 20**, **, **. 면접심사를 실시하였다.

금번 감사기간동안 20**년 □교사 응시자 중 합격자에 대한 각 면접위원 면접채점표를 확인한 결과, 외부위원인 M의 경우 모든 응시자(합격자)의 면접채점표에 면접점수를 수정·훼손이 가능한 연필로 기재하였고, N 면접위원은 ◆◆◆◆-①①①① 응시자 O 등 *명의 응시자(합격자)의 면접채점표에 서명을 누락하였으며, P 면접위원 역시 모든 응시자(합격자)의 면접채점표의 면접점수 뿐 아니라 서명을 연필로 기재하는 등 면접위원별 면접심사표 작성이 부적정하게 이루어진 사실이 있다.

그러나, 서구 △△과에서는 위와 같이 면접위원별 면접채점표가 부적정하게 작성되었음에도 보완 등 조치 없이 채용절차를 진행하였고, 20**, **, ** 최종합격자를 선정하였다.

나. 면접위원 임의 변경(조정)

서구 ▽▽과에서는 서구 내 ㉠㉠ 확충 등 00업무 확대에 따라 서류전형(30

점)과 면접심사(70점) 점수를 합산한 점수의 최고득점자를 합격자로 선정하는
결로 하고, 내부위원을 3명을 면접위원으로 하여 20**년 〇〇 확충 등 00업무 지
원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위한 면접심사를 20**.**.*. 실시하였다.

금번 감사기간 동안 상기 분야 응시자의 면접채점표를 확인한 결과, 면접위원
Q가 서명한 면접채점표에 응시번호 *번, *번을 제외한 나머지 응시자의 점수가
기재되지 않아 면접위원별로 부여된 점수가 명확하지 않음에도 응시번호 **번
R을 합격자로 선발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에 대해 서구에서는 Q 면접위원은 당시 ▽▽과장으로서 서구내 〇〇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면접심사 도중 자리를 비우게 되어 응시번호
*번부터는 나머지 면접위원 2명이 면접심사를 진행하였고, Q 면접위원의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2명의 면접위원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면접시험 점수를 산정하였다
는 의견과 함께 응시자 *번, *번을 제외한 나머지 응시자에 대해 Q 면접위원의
점수를 '0'점을 부여하여 3명의 면접위원의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면접심사 점수를
산정하는 경우 해당 응시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어 모든 응시자의 점수에서 Q
면접위원의 점수를 제외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채용일정 및 채용과정의 고지)에
따르면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채용일정, 채용심사 지연의 사실, 채용과정의 변경
등 채용과정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서구 ▽▽과에서는 위와 같이
면접 심사도중 면접위원을 변경하여 채용절차를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응시자
에게 알리고 문서로써 결재를 받아 이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그러나, 서구 ▽▽과에서는 면접위원 변경(조정)에 대해 문서로써 명확히 하
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면접위원에서 제외된 Q 면접위원이 서명한 면접채점
표를 문서로써 보존하고 있었으며, 면접시험 점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도 응시자
00명 중 00명의 점수를 잘못 집계하는 등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다. 면접심사항목 임의 변경

서구 ◆◆과(◆팀)에서는 ‘20**년 B 분야 기간제근로자 운영·선발 계획’에 따라 ‘전문성(20점), 책임성 등(20점), 기타사항(10점)’ 면접심사 항목으로 하고, 채용분야별 실기시험(체력검증)과 면접시험 점수를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순으로 합격자를 선발하는 걸로 하여 20**, **, ** 실기시험과 면접시험을 실시하였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에 따르면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같은 법 제8조(채용일정 및 채용과정의 고지)에 따라 구인자는 채용일정, 채용심사 지연의 사실, 채용과정의 변경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같은 법 제7조(전자우편 등을 통한 채용서류의 접수)에 따라 홈페이지 게시,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우편, 팩스, 전화 등으로 알려야 한다.

따라서, 서구 ◆◆과에서는 채용과정의 내용 등의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공고 등을 통해 이를 응시자에게 알려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과정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금번 감사기간동안 상기 분야 채용 면접시험 채점표를 확인한 결과, 서구에서는 채용과정의 면접심사항목 중 ‘자격증 항목’을 ‘협동심 항목’으로 변경(조정)하여 면접시험을 시행하였음에도 면접항목 조정(변경)에 대한 변경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응시자에게 이를 알리지도 아니하였다.

이에 대해 서구 ◆◆과에서는 감사기간 중 구직자들에게 좀 더 세분화되고 변별력 있는 면접점수를 제공하고자 면접심사항목을 변경한 사항으로 종전 기타사항에 따른 자격증 점수를 심사점수에서 제외하고 면접시험 시 면접위원들이 ‘전문성’ 항목에서 추가로 평가하고 우대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면접시험은 합격자를 결정하는 중요한 전형절차로, 채용과정 중 계획 상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문서로써 그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명확히 하여야 하고, 특히 본 면접항목 조정은 응시자가 제출한 자격증에 관한 점수를 조정(삭제)하는 사항으로 응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인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변경(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반드시 공고 등을 통해 응시자에게 이를 알려하여 한다.

3. 가점부여에 관한 사항

서구 ◆◆과(◆팀)에서는 20**년 ㅂ 분야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위해 20**. *. * 자격요건을 공고하고, 우대사항에 대한 가점 부여를 위해 응시자에게 해당 항목 증빙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였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에 따르면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같은 법 제8조(채용일정 및 채용과정의 고지)에 따라 구인자는 채용일정, 채용심사 지연의 사실, 채용과정의 변경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같은 법 제7조 (전자우편 등을 통한 채용서류의 접수)에 따라 홈페이지 게시,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우편, 팩스, 전화 등으로 알려야 한다.

따라서 서구 ◆◆과에서는 공고에 기재한 바와 같이 선발 우대사항에 대해 가점부여 기준을 마련한 후 채용절차 중 가점을 부여하여야 하고, 채용과정의 변경사항의 있는 경우 공고 등을 통해 이를 응시자에게 알려야 한다.

그러나, 서구 ◆◆과에서는 공고에 기재된 우대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가점부여 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하였고 우대사항에 대한 증빙을 제출한 응시자에게 가점을 부여하지도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이를 응시자에게 알리지도 아니하였다.

또한, ○○·▲▲ 관련 자격증에 한해 면접심사 시 10점(자격증 5점, 수료증 5점)을 부여하고자 하였으나, 이 역시 채용과정 중 부여기준의 불명확성을 이유로 시행되지 아니하였다.

4. 예비합격자 채용 부적정

서구 ◎◎과에서는 서구 내 ㅅ 관련 민원 증가에 따라 빠르고 친절한 민원서비스를 20**년 ○팀 업무보조 기간제근로자를 공고하여 1차 실기시험(50점), 2차 면접시험(50점)을 거쳐 실기시험과 면접시험 점수를 합산한 점수 고득점 순으로 20**. *. ** 최종합격자 1명과 예비합격자 2명을 선발하였다.

그러나, 서구 ◎◎과에서는 20**. *. ** 최종합격자인 R이 중도포기하자 예비합격자로 선발한 자가 아닌 면접점수 차점자인 S를 합격자로 대체 채용하였다.

이에 대해 서구 ◎◎과에서는 감사기간 중 ㅅ팀 기간제 근로자 채용 및 운영 계획에 따라 중도포기자 발생 시 면접점수 차점자를 예비합격자로 선정한 사항으로 20**. *. ** 최종합격자 선발 시 선발한 예비합격자는 최종합격자가 채용을 포기하는 경우 대체 선발을 위해 선발한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예비합격자’란 최종합격자로 선정된 지원자 임용포기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 대비하여 최종합격자 외에 추가로 예비적인 합격자를 두는 것으로 서구와 같이 최종합격자와 예비합격자의 합격기준을 달리 정하여서는 아니되며, 중도포기와 채용포기를 구분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구분의 실효성도 없어 예비합격자를 중도포기와 채용포기로 구분하여 운영했다는 서구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그 결과, 실기시험과 면접시험 점수 합산이 00점(실기 00점, 면접 00점)으로 최종합격순위 **위(00명 중)인 S가 임용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아울러 금번감사기간 동안 서구 각 부서의 기간제근로자 채용 현황을 확인한 결과, 대부분의 부서에서는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를 대비하여 예비합격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예비합격자의 운영에 대한 공통적인 기준이 없어 예비합격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채용 공고에 명시하지 않음은 물론 예비합격자를 공고하지도 아니하고 있었다.

그러나, 채용의 투명성을 위해서는 예비합격자 제도 운영 여부 및 내용에 대해 공고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고, 예비합격자 제도를 운영할 경우 예비합격자의 배수, 유효기간 등에 대한 기준도 필요한 바 서구에서는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 예비합격자 운영에 관한 공통적인 기준 마련이 요구된다.

5. 지원분야별 합격자 선정 부적정

서구 △△과에서는 20**년 ㄱ 분야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위해 채용인원 및 담당업무를 공고하고, 응시자로부터 지원분야 및 근무가능시간대를 표기하도록 하여 채용분야별로 신청서(응시원서)⁴⁾를 접수받은 후,

각 모집분야 1순위 응시대상자 중 서류심사와 면접심사 합산 점수가 고득점인 순으로 합격자를 선발하되, 미달분야 발생 시에는 2순위 지망대상자 중 서류심사(40점)와 면접심사(60점) 합산 점수가 고득점자인 순으로 충원하는 것으로 하여, 20**, **, ** 면접심사를 실시하였고 채용분야 중 전일근무자와 단시간근무자에 대해 합격자(채용예정자)를 선발하였다.

그러나, 서구에서는 면접시험에 참여한 응시자 중 응시번호 00. T, 응시번호 00. U, 응시번호 00. V는 1순위로 ㄷ 분야-단시간 근무를 지원하여 해당 채용분야가 미달되지 않았음에도 전일제와 단시간을 모두 표기한 응시자 중 3명(응시번호 00. W, 응시번호 00. X, 응시번호 00. Y)을 단시간 2순위로 하여 해당분야 최종합격자로 선정하였고, 그 결과 단시간 근무에 지원한 상기 3명이 부당하게 탈락하는

4) 지원분야는 3순위까지 표기, 지원분야별 근무가능시간대는 모두 표기토록 함.

결과를 초래하였다.

6. 시험위원 선정 부적정

서구 ▼▼과(■팀)에서는 20**년 ㄱ 분야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위해 실기시험 및 면접시험에 대한 시험위원을 위촉하고, 서류전형(10점), 실기시험(40점)과 면접시험(50점) 점수를 합산한 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3명을 선발하였다.

채용실시기관의 장은 공정하고 정확한 채용을 위하여 응시자와의 관계(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가 없는 자를 시험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하며, 시험위원은 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등이 있는 응시자에 대해서는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서구 ▼▼과에서는 상기 분야 응시자 중 Z의 경우 20**.*.*~20**.*.*.까지 서구 ▼▼과에서 공무원 근로자로 근무한 자로 실기시험위원인 AA, BB 및 면접시험 위원인 CC는 응시자와 근무경험 관계가 있어 해당 응시자 시험 시 상기 위원을 제척했어야 하고, 해당 시험위원은 기피·회피했어야 한다.

그러나, 서구 ▼▼과에서는 상기 분야 실기시험 및 면접시험 시 시험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없이 채용절차를 진행하였고, 해당 응시자인 Z를 합격자로 선발·임용한 사실이 있다.

아울러, 금번 감사기간 중 서구의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위한 면접 등 시험위원 구성현황을 확인한 결과, 20**년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한 ▼▼과 등 00개 부서에서 면접위원을 내부위원으로만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었고,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는 모든 부서에서 시험위원에게 제척·기피·회피 제도를 안내하거나 이에 대한 서약서를 징구하지 아니하고 있었다.

인사혁신처 공정채용가이드북(2019)에 따르면 채용단계별 공정성 확보방안의

하나로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위원 위촉 시 외부위원을 반드시 1/2 이상 위촉하도록 하고 있고, 지원자와 제척·기피대상에 있는 사람은 위원 위촉시 배제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서구에서도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위한 시험위원 구성시 외부위원 위촉에 관한 공통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할 뿐 아니라 시험위원의 제척·회피·기피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은

[기관경고]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 수집, 채용절차 이행 소홀 등 기간제근로자 채용 업무에 전반적으로 소홀함이 있어 기관 차원의 관리가 필요한바 엄중 경고하오니,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선] 서구 기간제근로자를 총괄하는 부서는 채용 관련 매뉴얼을 제정하여 응시원서 등 표준양식을 전파하고,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 등 채용절차를 정비하는 등 공정한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위한 개선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공정하게 채용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기간제근로자 채용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시정·주의 요구

제 목 사회복지법인 임원 선임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서구

관 계 부 서 ○○과 외 1개 부서

내 용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제1항, 제6항,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르면 법인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7명 이상과 감사 2명 이상을 임원으로 두어야 하되, 이사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이사 정수의 3분의 1 이상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추천기관이 3배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이 때, 법인은 외부로부터 이사의 추천을 받으려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8조의2 제1항에 따라 법인의 설립 취지, 목적사업 내용 및 이사가 갖추어야 할 사항 등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이사 추천을 요청하여야 하되, 선임사유가 이사의 임기만료인 경우에는 임기만료 3개월 전부터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법인이 이사 추천을 요청하는 단계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요청할 것인지는 법인의 정관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다만, 추천받은 사람 중 이사를 선임할 때에는 반드시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며,

임기가 만료된 외부추천이사가 연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최초 선임 시와 동일한 추천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0조에 따라 2개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한다.

아울러, 사회복지법인 임원 중 감사는 이사와 특별한 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를 선임 하되, 감사 중 1명은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을 선임해야 하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지침에 따라 법인은 선임된 임원에 대한 임면보고를 위해 법인임원임면보고서에 이사회 회의록 사본, 취임승낙서, 이력서, 특수관계부존재 각서, 결격사유부존재 각서, 이사추천서(외부 추천이사에 한함) 등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임원의 임면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5]에 따라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복지법인 ■■■에서는 감사 2명을 선임함에 있어 임기만료일로부터 00일이 지난 시점에서야 이사회를 개최하여 감사연임을 의결하였으며, 이사회 의결을 거쳐 선임된 임원의 임면사항에 대해 지체 없이 시장에게 서면으로 보고 해야 하나 감사일 현재까지 이를 보고하지 않았음에도

해당법인의 관리부서인 서구 ○○과에서는 법인의 감사선임·보고에 대한 시정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

또한, 사회복지법인 ■■■의 외부추천이사 재선임 절차에 대하여는 반드시 최초 선임 시와 동일한 추천절차를 거쳐야 하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기관의 추천 절차 없이 임기만료일로부터 00일이 경과한 후에 이사회를 개최하여 외부추천이사 재선임을 의결 처리하고, 이에 대한 임면보고도 하지 않았음에도 ■■■과에서는 법인의 이사 선임 및 보고절차 준수 등 법인의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였다.

서구 ○○과에서는 사회복지법인 ▲▲에서 감사 중 1명은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지식을 갖춘 사람을 선임해야 함에도 자격요건이 미충족된 대상자 0명을 20**. *월 이사회를 거쳐 감사로 재선임하고, 이에 대한 임면보고서가 20**. *. *에 제출되었음에도 시정조치 없이 관련문서를 접수처리 하였으며,

사회복지법인 ▲▲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에 따라 이사 정수의 3분의 1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기관에서 추천받은 사람 중에 선임해야 함과 법인 정관상 이사 정수가 *명임을 감안하여 *명의 이사를 외부추천이사로 선임해야 하나, 외부추천이사 임기 만료 이후, 외부추천 및 이사회 의결 등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으나, 관리부서인 ○○과에서는 감사일 현재까지도 이사 선임에 대한 시정 등 조치를 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은

[시정] 사회복지법인 ☐☐, ◆◆의 감사 및 외부추천이사 선임 부적정 사항에 대해
관련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선임 및 임면보고 등 시정조치 하시기 바라며

[주의] 추후 동일한 위반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회복지법인 임원의 구성 및
임면절차 준수 등 법인의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주의 요구

제 목 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판정 관리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서구

관 계 부 서 ○○과

내 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보장기관은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자활지원계획을 고려하여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실시할 수 있으나,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2호에 따라 질병, 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수급자 중 근로능력평가를 통해 군수·구청장이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한 사람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서 제외한다.

근로능력 판정을 위한 평가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은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4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을 받고자 하는 대상자는 근로능력평가 신청서,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진료기록지 사본 등 의학적 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서류를 제출받은 군수·구청장은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6조~제11조에 따라 소득·재산 확인이 끝나는 대로 국민연금공단에 평가의뢰하며, 공단의 의학적·활동능력 평가를 거쳐 통보된 근로능력 평가 결과를 토대로 군수·구청장은 근로능력판정을 실시한다.

이러한 근로능력 판정의 유효기간은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12조에 근거하여 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의학적 평가결과 단계 등에 따라 1년~3년으로 할 수 있으며, 판정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근로능력 없음”판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의학적 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군수·구청장은 이와 같은 근로능력 판정 유효기간 만료예정자의 관리를 위해서 「근로능력판정사업 안내」 및 「자활사업 안내」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유효기간 만료 예정일 70일전에 행복e음에서 대상자를 확인 추출하여 유효기간 만료일 30일전까지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진료기록지 사본 등 구비서류 제출을 대상자에게 안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일 대상자가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유효기간 초과’ 대상자로 변동되고, 이는 근로능력 있음 처리 대상으로 하여 상담, 자활지원 계획 수립 등 자활사업 대상자 선정·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며, 혹은 유효기간 만료 30일 이전 제출하였거나 만료 30일미만~만료일 이전에 제출하였으나, 만료일 이후까지 평가 미완료인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판정 완료일까지 ‘근로능력 없음’ 유효기간을 연장 처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서구 ○○과에서는 근로능력판정 유효기간 만료예정자 00명을 관리함에 있어, 유효기간 만료일 30일전까지 근로능력판정을 위한 구비서류를 제출하도록 만료예정일 70일전에 안내해야 함에도 유효기간 만료예정일로부터 00일~000일이 경과된 시점에서야 통보하였고, 유효기간 만료예정자 CC, DD에 대하여는 재판정 통보조차 하지 않았다.

또한,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아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근로능력 있음’ 처리 대상으로 하여 자활지원계획 수립 등 자활사업 대상자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재판정 관련서류가 00일~000일 이후 제출되어 근로능력판정 유효기간이 초과된 대상자를 “근로능력 있음”으로 변동처리 하지 않고 0일~000일을 초과하여 재판정 처리하는 등 유효기간 만료예정 근로능력판정 수급자에 대한 관리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은

[주의] 근로능력판정 유효기간 만료예정자에 대한 예정통보 기한 준수 및 유효기간
초과자 변동관리 등 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판정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시정 요구

제 목 장애인 의무적 재판정 관리 업무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서구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군수·구청장은 등록 신청한 장애인이 같은 법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로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을 내주어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군수·구청장은 장애인의 장애 상태를 확인하여 장애 상태에 맞는 장애 정도를 유지하도록 해야 하는 바, 장애인의 장애 상태 확인을 위해 [별지 제7호서식] ‘장애 정도 재판정 통보서’를 해당 장애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때, 군수·구청장은 「장애인복지사업안내」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장애 상태의 확인, 즉 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장애인에 대하여 재판정 기한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에 재판정 안내를 해야 하며, 만일 장애인이 재판정 기한일 1개월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장애 정도 재판정 촉구서’를 통지하되,

군수·구청장이 장애진단 대상자가 해외체류, 입원치료, 천재지변, 수감, 거주 불명 등 또는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 범위에서 치료 등에 필요한 적정기간을 정해 재판정을 유예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재유예가 가능하다.

그러나, 위와 같은 재판정 유예대상이나 유예기간이 아님에도 재판정 통보 및 촉구기한 내에 재판정을 이행하지 않은 대상자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 제27조에 근거하여 청문시작 10일 전 [별지 제9호서식] 처분사전 통지서(청문실시통지)와 [별지 제11호서식] 의견제출서를 송달하되, 의견 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10일 이상으로 고려하여 통지하는 등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청문실시 결과 장애인등록을 취소할 수 없는 상당한 이유가 확인되지 아니하면 청문결과 결정(장애인등록 취소)을 토대로 장애인 등록을 취소하고, 장애인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등록증을 받은 사람과 법정대리인등에게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3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근거하여 반환기한 2주 전까지 [별지 제8호서식] 장애인등록증 반환통보서를 송달하여야 하고, 장애인 등록증 반환 통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환기일까지 등록증을 반환하지 아니하면 「장애인복지법」 제90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다.

아울러,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지침에 따라 장애 정도 재판정 결과 장애 정도 미해당 판정을 받은 자에 대한 급여 중지 처리 등 자격변동에 따른 급여지원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며, 장애수당의 경우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달까지 지급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일, 수급자에게 잘못 지급된 급여가 있을 경우 처분내용, 당사자의 성명 및 주소, 부당이득환수 원인 및 내용, 환수금액 및 적용법령, 의견제출 안내 및 의견 미제출 시 처리방법 등이 기재된 ‘사전처분 통지서’를 통지일로부터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환수 결정 전 사전통지 하고, 사전통지 이후 30일 이상의 기한을 설정하여 서면으로 환수 결정 및 납부통지하고,

기한 내 환수금이 납부되지 않은 경우 납기일 경과 후 10일 이내에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독촉고지 하고, 독촉일까지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압류, 경매처분 등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도록 한다.

그러나, 서구 장애인 의무적 재판정 대상자 관리현황을 확인한 결과, EE 등 00명의 대상자에 대하여는 재판정 기한일 3개월 전에 재판정 안내를 해야 함에도

재판정 기한일로부터 최소 0일에서 최대 000일이 경과한 시점에서야 통보하였고, FF 등 00명은 재판정 기한일 1개월 전 해야 할 재판정 촉구통지를 0일~000일 경과 시점에 하였으며, 재판정을 이행한 00명 중 00명은 재판정 기한일로부터 0일~000일을 초과하여 재판정 되었다.

또한, 장애정도 미해당 판정 또는 재판정 불이행에 따른 장애인등록 취소 대상자 GG 등 00명에 대하여는 장애인 등록 취소 전, 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분 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송달해야 함에도 이행하지 않거나, 청문실시에 대한 안내 없이 처분사전통지만 하였으며,

장애인 등록이 취소된 경우 취소자에게 등록증 반환을 명하기 위해 ‘장애인 등록증 반환 통보서’를 반환기한 2주전까지 송달해야 하나 장애인등록 취소자 00명 중 00명에게 반환 통보를 하지 않았고, 장애인등록증 반환통보를 한 0명 중 0명은 장애인 등록취소 2주 경과일로부터 00일~000일이 지난 시점에서야 통지하였다.

장애인등록증 반환에 있어서도 등록 취소자 00명 중 00명은 미반환 되었거나 반환여부 조차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등록증을 반환하지 않은 대상자에 대하여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함에도 부과한 사실이 없다.

장애수당 지급대상자인 HH의 경우, 재판정 기한일인 20**. *. **까지 재판정을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재판정 및 촉구통보를 하지 않았고, 20**. *. **에 청문실시통지는 누락한 채 처분사전통지만 하고 20**. *. **에서야 장애인등록 취소처리를 하였으며, 장애인등록 취소 이후인 20**년 *월까지 월 00천원의 장애수당을 지급하였고,

서구 장애인복지과에서는 감사일 현재시점에서야 HH가 장애수당 환수대상임을 인지하고 장애인등록 취소일로부터 00일이 경과된 시점인 20**. **. **에 환수 결정 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통지 없이 환수결정 및 납부 통지하는 등 철저를 기해야 할 장애인 진단 의무적 재판정 대상자 사후관리에 대한 업무전반을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은

[시정] 장애인등록 취소자 HH에게 기 지급된 장애수당 00천원은 환수하시고, 향후 장애인 의무적 재판정 대상자 관리업무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시정요구

제 목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수익금 사용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서구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르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일반 작업환경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을 말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및 제42조 관련 [별표 5] V.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설치·운영기준을 근거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이용 장애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하는 ‘근로장애인’과 시설에서 운영하는 작업활동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훈련장애인’으로 구성하되, 시설별 최소 이용장애인수, 설비 및 직원배치 등 기준에 따라 장애인 직업적응훈련시설, 장애인 보호작업장, 장애인 근로사업장으로 구분하여 설치 운영된다.

또한, [별표 5] V.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설치·운영기준 - 7. ‘수익금 및 임금의 관리’ 규정의 (가)목에 따라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금은 근로장애인에게 보다 많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근로장애인의 복리후생 개선을 위해 우선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는데,

이 때, 근로장애인의 임금은 객관적인 기준에 근거하여 지급해야 함은 물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장애인 보호작업장에서 작업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소정의 훈련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만일 [별표 5] 수익금 및 임금의 관리 규정 (가)목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의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및 시설의 일반적인 관리운영비 또는 기능보강비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시설 운영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근로장애인 임금지급 요건 충족시설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2020년과 2021년 「인천시 장애인복지사업안내」 지침에서 군수·구청장은 시설 운영의 불가피한 사유로 종사자 인건비 등을 운영수익금에서 사용하도록 승인코자 할 경우 시장과 협의 후, 승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군·구에서는 연례·반복적 사용이 예측되는 운영 수익금 항목은 군구가 정하는 방법으로 일괄 승인요청 할 수 있는데, 시설에서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예산, 사업계획을 상신하여 군·구가 행복e음에서 승인한 경우도 수익금 사용승인을 일괄 득한 것으로 간주하고, 비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기능보강비 등)은 개별 건별로 승인요청을 해야 하는데,

유념해야 할 것은 일괄 사용승인과 개별 사용승인 모두 운영수익금의 승인 신청시, 전년도 결산서 상의 수익금 규모를 제시한 후, 각 사용 항목별 수익금 사용이유와 사용항목, 산출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요청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운영 수익금 사용승인 신청을 접수한 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에 사용승인 여부를 회신하여야 한다.

서구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에서는 20**년부터 20**년 *월까지 운영 수익금 중 일부를 시설장 등 종사자 0명의 수당(ㄱ수당 : 000천원, ㄴ수당 : 000천원) 지급에 사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운영수익금 사용을 위해 □□에서는 이사회 의결 후, 사회복지시설정보

시스템을 통해 추경 예산서를 제출하였고, 서구 ○○과에서는 행복e음에서 이를 승인하였다.

그런데, □□으로부터 제출된 추경예산 내역서를 확인한 결과, 수익금 사용 승인 신청 시 전년도 결산서상 수익금, 사용항목과 사용 이유, 산출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요청해야 하나,

예산 증감 사유 제출 총괄표에 ‘인원 변동에 따른 연장수당 외 제수당 증액’으로만 간략히 기술한 채, 운영수익금에서의 종사자 직책보조 및 업무수당 사용승인을 요청 하였고,

서구 ○○과에서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운영으로 발생된 수익금이 근로장애인의 임금향상 및 이용장애인 복리후생 개선을 위해 우선 사용되어야 함을 충분히 숙지하고 관련지침에 따라 수익금 사용 신청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용승인을 해야 함에도 운영수익금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내역 없이 추경예산에 포함하여 일괄승인 요청된 보고서를 승인 처리하는 등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수익금 사용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은

[시정]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수익금에서의 종사자 수당지급 사항에 대해 시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쳐 시정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권 고

제 목 지역아동센터 후원금 모금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서구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에 따르면 후원금은 아무런 대가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자산을 뜻하며, 기부금품의 모집자나 모집종사자는 다른 사람에게 기부금품을 낼 것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됨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규정하고 있고, 사회복지시설에서는 후원금 모집 및 사용 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과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에 따라 적정하게 접수·관리하여야 함은 물론, 이와는 별개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상 기부금품 모집절차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지역아동센터는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사회복지시설 중 아동복지시설에 속한다.

또한,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보건복지부)」에 따라 3명 이상 다자녀 가족 및 맞벌이 가정에 속하는 일반아동 외에 총 정원의 60% 이상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 가정, 차상위계층, 등록장애인 가정, 기초연금을 받는 조손가정, 초·중·고 교육비 지원 대상 가정, 다문화가정 등 돌봄취약아동을 이용아동으로 선정토록 하고 있고, 이용아동으로부터의 이용료는 무료를 원칙으로 하되,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일반아동에 한해 시설장이 매년 운영위원회와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거쳐 월 5만원 한도 내에 수납가능하며, 수납 시 반드시 해당아동의 이용료 책정 근거, 월별 수납액을 운영비 신청 시에 지자체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후원금 관리분야의 ‘후원 제한’사항으로 이용아동의 60% 이상이 돌봄 취약아동인 만큼 이용아동 및 아동의 보호자로부터의 후원금(물품)은 가급적 지양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서구 지역아동센터 00개소 후원금 모금현황 확인결과, 20**년 *월부터 20**년 *월까지 00개 지역아동센터에서 이용아동 및 이용아동 보호자 000명(돌봄 취약대상 00명, 00% / 일반대상 00명, 00%)으로부터 총 000천원의 후원금을 모금하였고,

일부 후원자는 000천원을 일시금으로 후원하였으며, 지속적으로 후원한 대상자는 월 00천원부터 월 000천원씩 후원하여 후원자 개인으로부터 최대 000천원을 모금하는 등 방과후 돌봄을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보호·교육은 물론, 정서적 지원 및 문화 체험활동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지역아동센터가 이용아동세대에게 센터이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킨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 지도점검을 담당하고 있는 서구 ○○과에서는 감사일 현재까지도 이러한 후원금 모금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등 지역아동센터 후원 제한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은

[권고] 지역아동센터 후원금 모금 시,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 지침 상 이용아동 및 아동의 보호자로부터의 후원금은 가급적 지양하도록 명시하고 있음을 반드시 공지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시정 요구

제 목 지연배상금 부과 부적정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서구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지연배상금을 내도록 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하 ‘예규’라 한다)에 따르면 계약기간을 지나서 완료 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계약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삽입하여야 한다. 다만, 납품기한의 말일이 공휴일(토요일과 관련 법령에 따라 발주기관의 휴무일인 경우 포함)인 경우는 납품기한이 다음날로 종료되고 지체일수는 그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아울러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에 따르면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을 부과받은 자는 수의계약 배제 대상이므로, 지연배상금 부과 후 즉시 관련기관에 수의계약 배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서구 지연배상금 부과 현황을 감사기간 중 확인한 결과 계약기간을 지나서

용역 완료보고서를 제출한 계약상대자에게 지연배상금을 부과 시에는 계약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삼입하여 지연배상금을 부과하여야 하나, 용역 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날까지 부과 기간으로 산정하여 지연배상금을 정상부과 금액보다 과소부과하고 이를 준공대가에서 상계처리 하였다.

이로 인하여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에 따라 10일 이상 지연 배상금 부과대상자에 대하여는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지연배상금 관리업무를 소홀히 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의계약 참가를 제한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였다.

서구 ㄷ 용역계약 상대자 (주)㉠㉠는 계약완료일인 20**년 *월 **일 이후인 20**년 *월 **일에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감독부서인 ㉡㉡과는 준공검사(감독)조서에 준공검사 완료 일자를 20**년 *월 **일 자로 작성하여 ㉢㉢과에 제출하였다.

예규에 따르면, 용역수행기한의 말일인 20**년 *월 **일(일)은 공휴일에 해당되어 용역수행기한이 다음날인 20**년 *월 **일에 종료되고 지체일수는 그 종료일의 다음날인 20**년 *월 **일부터 검사에 합격한 20**년 *월 **일까지의 기간을 기산하여 총 00일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에 상계 처리하여야 하나, ㉢㉢과는 ‘지연배상금 부과 및 세외수입 조치’ 내부결재 시 [㉢㉢과-(20**.*.**.)] 용역수행기한이 종료되는 20**년 *월 **일부터 ㉢㉢과에서 계약상대자의 완료보고서를 접수한 20**년 *월 **일을 준공검사 완료 일자로 작성하고 지체일수를 0일로 계산하여 부과함으로써 지연배상금을 00일 과소 부과하였다.

서구 ㉣㉣과는 ㄷ 용역계약 준공검사(감독)조서에 준공검사 완료 일자를 20**년 *월 **일 자로 작성하여 ㉢㉢과에 제출하였으나, ㉢㉢과는 ‘지연배상금 부과 및 세외수입 조치’ 내부결재 시 [㉢㉢과-19590(20**.*.**.)] 준공검사 완료 일자를 사업부서에서 제출한 준공검사조서의 검사완료일자로 하여야 하나, ㉢㉢과에서 계약

상대자의 완료보고서를 접수한 일자(20**.*.*일)로 준공검사 완료 일자를 작성하여 지연배상금을 00일 과소 부과하였다.

이와 같이 감독부서에서 준공검사 후 준공검사(감독)조서의 준공검사 완료일자를 작성하여 ○○과에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과는 지연배상금 산출내역 작성 시 감독부서의 준공검사 완료일자가 아닌 ○○과에서 완료보고서를 접수한 일자를 완료일자로 기입하여 지연배상금을 과소부과하였으며,

그 결과 (주)○○ 등 0개소 업체는 실제 지체일수가 00일 이상으로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하여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임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나, 지연배상금 부과 업무를 소홀히 하여 지체일수를 00일 미만으로 처리하여 수의계약 참가 제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은

[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과소부과한 지연배상금 000원을 조속히 부과·징수하시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공무원에 대한 업무연찬 및 교육실시 등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시기를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주의 요구

제 목 ㅅ 물품 구매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서구

관 계 부 서 ○○과 외 1개 부서

내 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며,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하며,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하 ‘예규’라 한다) 제1장 제1절 제5항(분할계약의 금지)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물품 계약에 대하여 단일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누어 체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지방계약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일정한 기간 계속하여 제조·구매 등의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을 때는 해당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미리 단가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9조에 따라 단가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입찰 전에 계약목적물의 특성, 계약수량 및 이행기간 등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야 하며, 이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조달청 고시 「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 제25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이면서 주문 업체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 기업인 경우에는 벤처나라를 이용하여 주문 요청할 수 있으며, 동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또는 제6호 라목의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벤처나라와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납품을 지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이하 ‘MAS 2단계경쟁 기준’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르면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된 물품에 대한 수요기관의 1회 납품 요구대상 구매예산(한번에 다수의 세부품명·품목에 해당하는 물품들을 구매할 경우 각 물품별 금액 모두 포함)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1억원 이상,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 아닌 물품 5천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MAS 2단계경쟁 기준’ 제6조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을 거쳐 납품대상 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MAS 2단계경쟁 기준 제5조에 따르면 수요기관의 장은 2단계경쟁 회피를 목적으로 1회 납품요구대상 구매예산을 제3조 제1항의 기준금액 미만으로 분할하여 납품요구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구에서 발주한 B 사업은 연간사업비 0억원 상당의 동일시기에 단일 품목을

구매하는 사업으로 통합구매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함에도, 20**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스을 20**년 *회(000천원), 20**년 *회(000천원), 20**년 *회(000천원), 20**년 *회(000천원)에 나누어 매년 각각 분리 발주·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집행한 사실이 있다.

서구 ☒☒과는 동일 품목(스)에 대하여 20**년 *월부터 *월까지 약 *개월 동안 *회(000천원)에 걸쳐 조달청 벤처나라를 이용하여 수의계약 방법으로 각각 동일 업체인 ◇◇(주)를 계약상대자로 나누어 발주하였다.

또한, 20**년 *월부터 *월까지 약 *개월 동안 ◇◇(주), 주식회사 ▲▲, 주식회사 ⊕⊕와 각각 *회씩 나누어 조달청 벤처나라를 이용하여 총 *회(000천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년 *월부터 *월까지 약 *개월 동안 *회(000천원)에 걸쳐 조달청 나라장터 제3자 단가계약을 이용하여 동일 업체인 (주)△△를 계약상대자로 나누어 발주하였다.

아울러,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구매하는 경우 MAS 2단계경쟁 기준에 따르면 스 물품은 세부품명 ●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5천만원 이상 구매시 MAS 2단계경쟁을 거쳐 납품대상 업체를 선정하여야 하나, 20**년도에 시기적으로 *회(000천원)로 나누어 구매한 사실이 있다.

이처럼 ☒☒과는 매년 특정 시기(*~*월)에 동일사업에 필요한 단일 품목(스)을 구매하면서 정기 수요조사를 통하여 추정물량에 따라 물품을 일괄 발주하여야 하나, 물품 수요조사를 수시로 실시하여 각각의 수요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요청하고, 요청 수요에 맞추어 소액으로 발주하여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이 가능한 2천만원 이하로 분할하여 수의계약 또는 제3자단가계약을 함으로써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은

[주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내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단일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누어 계약체결하지 않도록 하고, 계약체결 사항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관리, 감독하여 중복되는 품목은 통합발주를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이 체결되도록 담당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권 고

제 목 행사용역 수의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서구

관 계 부 서 ○○과 외 1개 부서

내 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며,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라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의 경우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이하 ‘예규’라 한다) 제5장 제2절 수의계약 유형별 구분 주요 내용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 원 이하(다만, 3.부터 6.까지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의 경우에는 취약계층 고용비율 30%이상인 경우만 해당)는 수의 1인

견적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예규 제3절 제4항에 천재지변 등에 따른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대상에 관하여 규정되어 있으며, 사업부서에서는 수의계약 요청 시 <별지 5>에 따른 수의계약 요청 사유서를 작성하여 사업부서장의 확인을 거친 후 계약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체결하는 계약은 일반입찰을 기준으로 하되 수의계약은 일반입찰의 예외적인 사항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특히 1인 견적 제출 수의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 선정에 있어서 재량이 많은 만큼 계약 수행이 가능한 자격을 갖춘 다양한 업체를 객관적으로 비교·검토하여 입찰참여 기회를 확대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서구 ○○과는 「○」사업 추진을 위하여 20**년~20**년 기간 동안 사회적기업과 1인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

서구 ○○과는 ‘20**. ○ 축제 기획단 추진계획을 수립하였다. 이후 ‘20**. ○ 축제 개최계획’에 소요예산 000천원에 대하여 계약방법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겠다는 내용을 삽입하여 구청장까지 결재를 득하였으며, 동 개최계획 및 수의계약요청사유서를 첨부하여 ●●과에 수의계약을 의뢰하였다.

이처럼 20**년~20**년까지 매년 동일사업의 동일 행사 대행용역을 모두 특정 업체 □□과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년도에는 동일한 수의계약 사유로 다른 업체인 (주)■□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

20**년~20**년 각각 수의계약 의뢰시 제출한 수의계약요청사유서를 확인한 결과 수의계약 요청 근거로 특정한 장소나 위치에 있는 사업장을 보유한 자와 그 사업장의 이용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계약목적물 달성하기 곤란한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

기업으로서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는 경우를 기재하였으며, 자의 직접 주도적 참여를 통한 축제 개최를 위해서 운영 중인 ○축제기획단의 사전 축제기획 활동과 ○축제와의 연계성 유지를 위해 기획단 운영업체와의 수의계약을 요청한다고 작성하여 수의계약을 의뢰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동 용역 사업인 ‘○ 축제’ 계획 및 결과 보고를 확인한 결과 20**년~20**년도까지 매년 동일 장소인 ㄷ에서 모든 연령의 자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참여형 축제 사업으로 추진한 것으로, 축제 개요 및 주요 프로그램 내용만으로는 수의계약 요청 근거로 주장한 특정한 장소나 위치에 있는 사업장을 보유한 자와 그 사업장의 이용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자축제기획단의 기획활동 제안사항과 축제당일 지원 등의 과업이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용역계약의 경우에 해당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특정 업체만이 ‘○ 축제’ 행사용역을 수행할 수 있다는 사유로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은 적정하다고 볼 수 없다.

아울러 만약 축제 행사용역을 위해 필요한 사전단계로 자축제기획단을 운영하는 것이라고 하면, ‘○ 축제’ 행사용역 과업 범위에 자축제기획단 운영 사항 및 그에 따른 소요 예산을 포함하여 통합발주 하여야 했으나, 20**년도에는 특별한 사유 없이 동일사업을 비슷한 시기에 기획단 운영과 축제 운영으로 각각 나누어 소액 수의계약으로 발주하여,

기획단 운영단계에 특정 업체가 참여하게 하여 동 행사사업을 쉽게 수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객관적인 계약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이와 같이 사업부서에서 매년 반복되는 동일사업의 동일 행사용역에 해당 업체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수의계약을 의뢰함에도,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진행

하면서 사유 및 관련 근거에 대한 검토 및 보완 요청을 하지도 않은 채 그대로 계약 체결하였다.

또한, 금번 감사기간 중 행사용역 계약에 관한 서류를 확인한 결과, 「사회적 기업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 기업과 수의계약 체결시 관련 규정에 따라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는지 사회적기업 증명서 발급기관인 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발급한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를 통하여 확인하여야 하나, ‘20** ○ 축제 행사대행 용역’ 등 일부 계약 체결 서류에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을 뿐만 아니라, 법령에 따라 확인해야 할 서류를 계약상대자에게 요청하지도 않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은

[권고] 관련법령에 따라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되더라도 경쟁계약이 불가능하거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수의계약을 최소화하여 주시고, 특정업체에 편중하여 수의계약이 체결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의 범위 내에서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시정 요구

제 목 체육시설업 손해보험 가입 부적정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서구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체육시설업자¹⁾를 제외한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되거나 그 체육시설 안에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체육시설업을 등록하거나 신고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을 보장하는 손해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책임보험 또는 책임 공제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 금액을 피해자 1명당, 사망한 경우 1억 5천만 원, 부상한 경우 1급 기준 3천만 원, 후유장애의 경우 1급 기준 1억 5천만 원의 범위 내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30조제8호에 따르면 체육시설업자가 제26조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 및 별표7에 따르면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3일,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10일, 3차 위반 시 영업정지 20일, 4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0조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1) 소규모 체육시설업자 : 체육도장업, 골프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및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을 설치·경영하는 자

별표4에 따르면, 법 제26조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최근 1년간 같은 행위를 했을 경우 1차 위반 시 25만 원, 2차 위반 시 50만원, 3차 위반 시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체육시설 안전점검 지침(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0-65호)」에 매년 6개월에 1회 이상 체육시설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보험가입 의무 준수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서구에서는 손해보험 의무가입대상 체육시설업자가 법령에서 정한 금액 이상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고 동일한 내용의 위반을 하는 경우 차수에 따라 행정처분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그런데 서구에서는 매년 6개월마다 체육시설에 대한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면서 0개소에서는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고 0개소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 금액에 미달하는 보험에 가입했으며 0개소는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이 아닌 재물보험을 가입하고 있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못해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체육시설 안에서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에게 손해액을 제대로 보상해 줄 수 없는 상황 발생이 우려된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은

[시정]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 금액에 미달하는 손해 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체육시설업체에 대해 법령에서 정한 금액 이상을 보장하는 손해보험에 가입하도록 조치하시고 앞으로 손해보험 의무가입대상 체육시설업체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보험에 가입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주의 요구

제 목 ㄷ 행사 추진 부적정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서구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인천광역시 서구에서는 ㄷ 행사 예산을 20**~20**년 행사운영비, 20**~20**년은 민간행사사업보조로 편성하였다.

1. 행사운영비 수의계약 부적정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5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세부집행기준에 따르면 행사운영비는 자치단체가 직접 주관하는 행사 운영을 위한 초청장, 홍보유인물, 현수막, 상패제작 등 일반수용비와 행사개최를 위한 시설·장비·물품의 임차료 및 행사지원을 위한 강사료, 행사지원을 위해 참여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식비로 사용할 수 있고 행사는 자치단체가 직접 주관하고 예산을 직접 집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내용이 복잡·다양하여 사실상 자치단체가 직접 주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민간 위탁이 가능하며 민간위탁 계약 시에는 「지방계약법령」 및 관련법령을 적용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집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계약의 방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입찰공고)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부치려는

경우에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필요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공고를 병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용역·물품계약 시 단일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누어 체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서구에서는 20**년 ‘츠대회’를 행사운영비로 집행하면서 행사용역과 물품 구입을 0건으로 분할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ㄱ 행사용역의 과업내용에 운영부스, 부대행사, 시설물, 장비, 무대 및 소품, 행사용 부스 등 관련 행사에 필요한 물품이 포함된 것을 볼 때 행사운영비를 용역과 물품으로 0건으로 분할하여 계약할 사유가 없다.

2. 보조금 교부 소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르면 민간에 대한 지방보조금 통장은 자부담을 포함한 보조금만 관리 할 수 있도록 1개 사업에 1개의 통장(계좌)을 별도 개설하고 자부담이 있는 경우 자부담금 예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방보조금 교부 전 통장 사본을 제출받은 후 보조금을 교부하도록 되어 있다.

‘20** ㄱ 대회’ 정산서류를 확인한 결과 자부담 통장의 입금 내역은 20**. **. **.부터 20**. **. **.까지 참가 선수의 참가비 0만원을 입금 받아 자부담비용을 마련하였으나, 서구에서는 보조금 교부 시 행사 보조사업자인 (주)☆☆의 자부담금 000천 원이 보조금 교부 전 전용 통장에 예치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교부하여야 함에도 자부담의 예치 유무를 확인하지 않고 보조금 교부결정(20**. **. **.) 및 지급(20**. **. **.)하였다.

3. 수익금 교부 조건 명시 소홀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사업의 완료로 인하여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의 발생이 예상되는 때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에 반환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부담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보조사업자인 (주)☆☆에서 제출한 교부금 신청서의 사업계획서에는 자부담 000천 원으로 되어 있으나, 대회 참가비는(20**년 비대면으로 참가비 000천원) 000천원*000명=000천 원으로 수익금 000천 원이 예상되었으나 ○○과에서 보조금 교부 조건에 수익금의 반환 또는 사용 용도를 명시하지 않고 교부함으로써 수익금을 서구로 반환 조치 할 수 없게 되었다.

4. 외부회계감사 비용 정산 부적정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및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 심사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으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8조에 따르면 같은 회계연도 중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교부 받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총액이 10억 원 이상인 보조사업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이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경우 보조사업자가 해당 보조금을 당초 교부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하였는지를 확인하여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0**년 ㄸ 대회’ 보조사업자인 (주)☆☆는 보조금 정산 내역 중 정산검사를 외부 회계법인에 의뢰하여 000천 원의 예산을 불필요하게 집행하였으나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정산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은

[주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주의 요구

제 목 관급자재 설계 및 구매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서구

관 계 부 서 ○○과

내 용

1. 특정업체·특정규격의 관급자재 설계

행정안전부 지방계약법령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하 지방계약예규라 한다) 제1장 입찰 및 계약 시 금지사항으로 입찰공고나 설계서(도면·시방서·물량내역서·현장설명서)·규격서·사양서 등에 부당하게 특정 규격·모델·상표 등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계약을 하고 품질·성능 면에서 동등 이상의 물품을 납품하더라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례(특히, 특정업체와의 수의계약 및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특정 규격·사양 등을 명시하는 사례)를 금지하고 있고 동일구조물 공사 또는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구조별 공종별로 분할하지 아니하고 일괄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용역·물품 계약에 대하여도 단일 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누어 체결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서구에서는 지방계약예규에 설계서 등에 특정 모델 등을 지정하여 계약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특정 규격·특정 모델명 및 물품식별번호를 관급자재 시방서에 명시하거나 설계내역서에 특정제품의 물품식별번호를 명시하여 설계하였고 관급자재로 구매 요청하는 등 설계와 관급자재 구매 검토를 소홀히 하였다.

2. 다수공급자 계약 물품 구매 검토 소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다수공급자 계약)에 따른 다수공급자 계약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조달청 고시)」 제3조(2단계경쟁 대상) 및 제5조(2단계경쟁 회피금지), 제6조(2단계경쟁 제안요청)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한 1회 납품요구대상 구매예산이 1억 원 이상인 경우 2단계경쟁 대상(한 번에 다수의 세부품명·품목에 해당하는 물품들을 구매할 경우 각 물품별 금액을 모두 포함)으로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물품을 임의로 선택하여 구매하는 대신 5인 이상의 계약 상대자를 대상으로 제안 요청한 후 선정 기준에 따라 납품업체를 선정하여 구매해야 한다.

또한 동 업무처리기준 제10조에 따르면 제안을 요청받은 계약상대자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계약가격 이하로 제안하여야 하고 등록된 계약가격의 10% 범위 내에서 가격을 할인하여 제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이를 통해 수요기관은 최대 10%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고 제5조에 따라 수요기관의 장은 2단계 경쟁 회피를 목적으로 동일한 물품²⁾은 납품요구 금액이 1억 원 미만으로 분할하여 납품요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서구에서는 관급자재를 구입하였으나 LED가로등기구, 디자인형울타리는 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 품목으로 물품분류번호와 세부품명(품명이 동일하고 용도, 형태 등이 같은 것)이 동일한 관급자재로 구매예산이 1억 원 이상일 경우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업무처리 기준을 적용하여 제안요청서를 받아 2단계 경쟁을 실시하여야 하는 관급자재임에도 다수공급자 계약 2단계 경쟁에 대한 검토 없이 고효율인증, KS인증 등 인증여부 및 인천지역 업체라는 사유로 분할 계약으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제3자단가로 구매하였다.

2) 동일한 물품 : 물품분류번호(8자리)와 세부품명(10자리)이 동일하고, 제안대상 세부품명이 복수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서구 ○○과에서는 ㄱ 사업 관급자재인 ㄷ 구매 건은 기존 가정공공주택지구 조성 시 사업시행자인 LH가 미관 등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한 디자인 ㄷ으로 설치했던 사항으로 ㄱ 사업 실시설계용역 시행 중 ㄷ의 경우 특색있는 디자인을 고려하여 설계 및 시공하고자 하였으며 개선(안)에 대하여 주민의견 수렴(20**.*~20**.*) 절차를 거쳐 디자인이 선정되었던 사항이라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설계용역 결과에는 ㄷ에 대한 업체, 디자인에 대한 비교검토가 없으며 최종 계약한 0개의 ㄷ에 대한 자료만 첨부되어 있고 주민의견 수렴 결과 관련 공동주택별 접수 문서를 확인 결과 교통개선계획(안)에 대한 찬반에 대한 결과일 뿐 개별 ㄷ 디자인에 대한 의견 수렴이라 볼 수 없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은

[주의] 법령 및 규정 등을 준수하여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다수공급자계약 물품 구매 시 다수공급자 2단계 경쟁 업무처리기준을 준수하여 분할구매로 인한 예산 낭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주의 요구

제 목 공유재산 관련 세입의 체납관리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서구

관 계 부 서 ○○과 외 1개 부서

내 용

인천광역시 서구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도로법」 등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대부계약 및 도로점용허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변상금의 징수) 제1항에 따르면 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를 한 자에 대하여 변상금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97조(「지방재정법」 등의 준용) 제2항에 따르면 제81조제1항에 따른 변상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도로법」 제66조(점용료의 징수 등) 제1항에 따르면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제69조(점용료의 강제징수) 제2항에 따르면 점용료의 납부가 연체되는 경우에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제4항에 따르면 점용료를 내야 하는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점용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징수법」 제3장 체납처분에 따르면 압류, 매각, 청산, 결손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한 「지방세외수입 업무 해설집」 IV.체납처분에 따르면 체납관리의 절차 및 처리요령을 정하고 있다.

한편, 「지방세징수법」 제106조(결손처분) 제1항제3호에 따르면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 기본법」 제39조(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제1항에 따르면 5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는 10년, 그 외의 지방세는 5년의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및 도로 점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미납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징수의 예에 따라 독촉, 재산조회, 압류, 매각, 청산 등의 절차를 이행하여 소멸시효 완성에 의해 결손 되지 않도록 체납액 확보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그러나 감사대상기간(20**. *월 이후) 공유재산 관련 세입의 결손처리 자료를 확인한 결과, ○○과 및 ●●과에서는 공유재산변상금 및 도로 점용료(차량출입 시설) 관련 체납사항의 결손처리에 앞서 체납액 확보를 위한 독촉 전·후 납부대상자의 재산조회를 실시하여 압류 등 체납절차를 이행하여야 했음에도, 독촉 이후 소멸시효 완성 시기가 경과한 후에 재산조회를 실시하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재산조회를 실시하지 않아 체납액 확보를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하였고, 이로 인해 00건, 000천 원의 공유재산 변상금 및 도로 점용료 체납액(부과액)을 시효소멸의 사유로 결손 처리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은

[주의] 관련 규정에 따른 공유재산별 세입징수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고, 체납액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결손처리를 최소화하시기 바라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사항에 대한 업무연찬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주의 요구

제 목 국유재산 실태조사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서구

관 계 부 서 ○○과

내 용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이하 “행정위임위탁규정”이라 한다) 제4장 행정기관 간 위임·위탁사항 제41조(국토교통부 소관) 제2항에 따르면 「도로법」, 「하천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또는 「항만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하는 재산과 관리기관이 따로 지정된 재산을 제외한 국토교통부 소관 국유재산의 관리사무를 광역시장 등에게 위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규칙」(이하 “사무위임규칙”이라 한다) 제2조(재위임 사항) 제1항 별표1에 따르면 인천광역시 △△과에서 수입한 국토교통부 소관 국유재산 중 공공용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일부 권한은 구청장에게 재위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 서구 ★★과 및 ○○과에서는 감사일 현재(20**.**.**, 기준) 국토교통부 소관 국유재산 중 공공용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있다.

한편, 행정위임위탁규정 제41조제2항제2호러목 및 사무위임규칙 제2조제1항 별표1에 따르면 구청장이 수행하여야 하는 국토교통부 소관 국유재산의 관리사무 중 「국유재산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소관 국유재산 실태 조사는 매년 실시하여

대장을 정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구에서는 20**. *. **. 조직개편을 통해 기존 ◇◇과에서 수행하던 국토교통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 사무를 □□과(2021. 5. 3. 조직개편, 現 ★★과) 및 ○○과 소관 사무로 각각 이관함에 따라 감사대상기간인 20**. *월부터 조직개편 전인 20**. *. **.까지는 ◇◇과에서 국토교통부 소관 국유재산의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였고, 조직개편 이후부터는 □□과(現 ★★과)에서 △△과 소관 국유재산(지목이 ‘도로’ 등인 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였다.

그러나 ○○과에서는 20**. *. **. 조직개편 이후 ◇◇과로부터 이관된 국유재산(지목이 ‘하천, 구거, 유지 등’인 재산)에 대하여 20**년과 20**년 0년간 실태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관리대상인 국유재산의 실태조사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은

[주의] 조직개편 등으로 인한 사무의 이관시 소관 사무의 범위를 명확히 확인하시어 국유재산 실태조사 등 소관 사무의 처리가 누락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사항에 대한 업무연찬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주의·개선 요구

제 목 정수관리대상물품의 취득 절차 이행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서구

관 계 부 서 ○○과 외 11개 부서

내 용

인천광역시 서구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인천광역시 서구 물품관리 조례」(이하 “물품관리조례”라 한다) 등에 따라 소관 물품의 취득·사용 및 처분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공유재산법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수로 정한 물품의 취득·사용 및 처분에 관한 수급관리계획을 세워야 하며, 수급관리계획에 따라 물품을 취득·사용 또는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유재산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정수관리 대상 물품에 대한 정수와 사용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정수관리대상물품 중에서 정수가 배정된 물품의 구입을 정수관리대상이 아닌 물품의 구입보다 우선하여 예산에 반영하여야 하고, 정수관리대상물품 중 정수가 배정되지 않은 물품은 취득할 수 없으며, 그 구입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소요 경비를 예산에 반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물품관리조례 제9조에 따르면 주관 실·과, 소, 동 및 의회사무국의 장이 물품매입 요구를 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정수책정물품에 포함 되었는지 여부와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하여야

하며, 본청 물품관리관은 직속기관, 출장소, 동 및 의회사무국의 정수물품 구입 시 정수책정 요구서를 제출받도록 하고 있고, 재무관은 정수책정물품에 포함 되었는지 여부와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의 매입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서구 각 실·과 및 직속기관, 출장소, 동 등에서 정수물품을 취득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과에 정수물품 책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과에서는 정수책정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정수책정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과는 정수책정 승인 사항을 확인하여 해당 물품 구입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고, 주관 실·과 등에서는 재무관에게 해당 물품의 구입을 요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감사대상기간(20**.*월 이후) ▲▲ 외 0개 부서에서는 00개 000천 원의 정수관리대상물품을 구입하며 정수배정 승인 전 예산에 편성하여 구매하였으며, ■■■과 및 □□동에서는 0개 000천 원의 정수관리대상물품을 무상귀속 또는 임차물품의 소유권 전환에 따라 취득하며 물품의 취득 전 정수책정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취득 이후 정수물품 책정을 요청하여 승인 받음으로써 정수관리대상물품 취득을 위한 절차 이행을 소홀히 하였다.

더욱이 서구에서는 20**년도 인천광역시 종합감사 결과 20**~20**년 0년간 00건 000천 원 상당의 정수관리대상물품을 정수승인 전 예산 편성하여 구입 후 정수승인 받은 것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음에도, 이번 감사대상기간(20**.*월 이후)에도 정수관리대상물품의 취득과 관련하여 정수 승인 전 예산편성 및 구입 후 정수 승인된 사항이 유사하게 발생하였다.

다만, 20**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주의’ 처분요구 사항으로 ▲▲과에서는 정수 승인 결과를 사업부서 및 ○○과에 동시 통보하도록 하고, ○○과에서는 정수취득 사전절차 이행 후 예산편성 하도록 하는 내용이 있었으며, 이에 대하여 ▲▲과에서는 각 사업부서 등에 매 예산수립 이전에 정수관리대상물품에 대한 정수물품 배정 신청 안내 문서를 시행하였고, 정수배정 승인 사항을 ○○과에 통보하였으며, ○○

과에서는 예산편성요구 서식 상 사전절차 이행여부를 표시하는 항목을 추가하여 정수관리대상물품의 구입 예산 편성 요구 시 정수승인 사항을 표시하도록 하여, 처분요구사항의 이행을 위한 ▲▲과 및 ○○과의 노력이 소홀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각 사업부서 등에서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전에 해당 사업과 관련한 정수관리대상물품의 취득 여부를 고려하여 정수책정 요청을 하고 정수 승인 후 관련 예산 편성 요구 및 예산 편성 후 취득하여야 했음에도 여전히 이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은

[주의] 정수관리대상물품의 취득에 있어 관련 법령 등의 규정을 준수하시어 정수 책정 승인 이후 예산편성 및 취득하시기 바라며, 특히 사업 추진 시 정수 관리대상물품의 포함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시어 정수책정 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개선] 사업추진 부서 담당자의 주의 소홀 및 인사이동 등으로 정수관리대상물품의 취득절차 이행 소홀사항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바, 정수관리대상물품의 구입 예산 편성 요구 시 정수책정 미승인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안 편성 완료 전까지 정수책정 승인을 받도록 요구하여 예산안 편성 확정 시 최종 반영하는 등 정수관리대상물품의 구입 예산 편성 전 정수책정 승인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자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주의 요구

제 목 민간에 보조되는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서구

관 계 부 서 ○○과 외 3개 부서

내 용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9조의2(기금운용계획수립의 기준)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은 회계연도별 기금운용계획수립의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매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을 정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안내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의 지방자치단체 기금 제도 개요 4. 기금의 관리·운용, 기금의 집행에 따르면 민간에 보조되는 기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의 세부사항을 규정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르면 해당 기준을 따라야 하는 지방보조금의 종류를 민간경상사업 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등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기금에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등의 목적으로 편성된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지방보조금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감사일 현재(20**. **월) 인천광역시 서구에서는 「인천광역시 서구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을 비롯하여 총 0개의 기금을 관리·운용하고 있으며, 이 중 기금 운용계획의 지출계획 상 민간에 보조되는 과목을 편성하고 있는 기금은 「인천

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이하 “사회복지기금”이라 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양성평등기금」(이하 “양성평등기금”이라 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원 진흥기금」(이하 “문화원진흥기금”이라 한다)이 있다.

1. 보조사업자 선정 시 공모 미실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지방보조금의 교부 신청) 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모를 통하여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 받아야 하며,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4조(지방보조사업자 공모 및 선정) 제1항에 따르면 2개 이상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수행할 수 있는 지방보조사업은 공모를 통해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하도록 하되, 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6개의 사유¹⁾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모 절차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관련 조례에 보조사업자가 규정되어 있는 문화원진흥기금 외 민간에 보조되는 기금은 공모 절차를 통하여 보조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사회복지기금(사회복지분야, 노인복지분야, 자활사업분야)은 감사대상기간(20**.*월 이후) 기금운용계획서 상 민간경상사업보조 및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의 목적으로 편성한 사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사업자 공모 절차 예외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음에도 보조사업 선정과 관련한 공모 절차 없이 특정 단체의 사업계획만을 기준으로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부서에서 계획 수립한 사업을 특정 단체에서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보조사업 운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하였다.

2. 보조사업 실적보고 미흡

1)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각 호 : 1.법령이나 조례에 지원 대상자 선정방법이 다르게 규정된 경우 2.국고보조사업으로서 대상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3.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공모방식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 제출)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지방보조사업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지방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정산보고서 등을 첨부한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실적보고서의 작성 등)에 따르면 실적보고서의 형식, 작성방법 및 항목은 별지 제2호서식으로, 실적보고서에 첨부하는 정산보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민간에 보조되는 기금에 있어서도 지방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 교부통지 시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의 서식을 첨부하여야 하며, 보조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등에는 2개월 이내에 정산보고서를 첨부한 실적보고서를 제출받아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19조(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집행잔액 등 반납)에 따라 집행잔액과 지방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 등을 반납 받아야 한다.

그러나 서구에서는 사회복지기금 및 문화원진흥기금에 있어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교부 통지하며 정산보고서 제출 외 실적보고서 제출에 대한 안내가 없어 보조사업 완료 후 실적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았으며, 문화원진흥기금의 경우 정산보고 시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지출 세부내역 및 지출내역에 대한 증빙자료가 없었음에도 이에 대한 보완조치 등을 시행하지 않아 보조사업에 대한 실적보고 관리에 미흡하였다.

3. 보조사업 운용평가 미실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 및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28조(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사업 완료 후 다음연도 7월 말까지 성과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조사업에 대하여 3년마다 유지필요성 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서구에서는 사회복지기금 및 문화원진흥기금에 있어서 민간에 보조되는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및 유지필요성 평가를 실시하지 않아, 보조사업 운용의 적정성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은

[주의] 기금으로 운용되는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 추진 시 지방보조금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시어 절차에 맞는 보조사업자 선정 및 실적보고서 관리, 성과평가 등을 실시함으로써 보조사업 운용의 공정성과 투명성, 적정성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시정 요구

제 목 트 사업 가시설(거푸집) 시공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서구

관 계 부 서 ○○과

내 용

1. 사업개요

서구 ○○과에서는 20**년 *월 ●●(주)와 계약을 맺고 20**년 *월 “트 공사”를 준공하였다.

2. 관련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변동 및 설계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설계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는 경우 지질·용수 등 공사 현장의 상태가 설계도서와 다를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 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그 밖에 발주기관 등에서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에는 설계 변경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48조(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에 따르면 공사감독자는 시공자가 현지 여건과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공사비의 절감과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등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설계변경 사유서, 설계변경 도면, 개략적인 수량 증감내역 및 공사비 증감 내역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이를 검토·확인하고 검토 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실정보고 하고, 발주청 방침을 득한 후 시공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지적사항

서구 ○○과에서 시행한 ㄷ 사업 설계도에는 산책로 경계석(150×150×1,000)의 견고한 기초 콘크리트 시공을 위한 가시설 거푸집(유로폼) 000㎡과 제방도로 콘크리트 포장을 위한 거푸집(유로폼) 000㎡을 설치하여 시공하도록 계상되어 있다.

그러나, 시공사에서는 현장 여건이 거푸집(유로폼) 설치 공간 부족으로 산책로 및 제방 도로 거푸집(유로폼)에 대하여 설치를 하지 않거나 합판만을 설치하여 시공할 수 밖에 없었다면 현지 여건과 설계도서가 부합 하도록 검토하여 공사 감독자에게 실정보고 하고 발주청의 방침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함에도 실정보고 없이 시공사 임의로 [가시설을 합판만 설치 시공하여 준공계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준공계 접수 시 공사감독자는 시공사가 임의로 설치하여 시공한 합판 거푸집(당초 유로폼)에 대하여 금액 설계변경(약 000천 원)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준공 처리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현장 감사 결과 포장과 경계석 경계 등에 틈이 생기는 하자가 발생하고 있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은

- [시정] ① ㄷ 공사의 현지여건과 설계도서가 부합 되지 않는 가시설(거푸집) 공종에 대하여 약 000백만 원을 환수하시기 바라며,
- ② 앞으로 공사비의 절감과 품질향상을 위하여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한 후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업무연찬 및 직원교육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주의 요구

제 목 표 공사 내 도막형 바닥재 포장 부적정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서구

관 계 부 서 ○○과

내 용

1. 사업개요

서구 ○○과에서는 표 사업구역 내 가로환경을 정비하고 쾌적한 마을환경 제공을 위하여 ‘표공사’를 20**년 *월 (주)■■과 계약을 맺고 20**년 *월에 준공하였다.

2. 관련 법률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표준규격서」에 따르면 도막형바닥재(이하 “바닥재”라 한다.)는 아스콘, 콘크리트 등의 바닥 표면을 도막으로 포장하여 경관 조성 및 강도를 보완하고 미끄럼 방지 위하여 설치하며

균열, 마모, 탈색 및 변색 등의 문제점이 없고 내구성이 우수하도록 설계된 환경 친화제품으로, 자전거도로·보행자도로·테마거리 등에 설치(도포)하는데 한하여 적용한다.

그리고 차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간선도로 등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나 생활체육시설(테니스코트, 농구코트, 배구코트 인라인스케이트장) 또는 벽체에는 적용을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조달청 나라장터 제품 특성 정보에 따르면 바닥재는 기존 자전거도로, 주차장, 보도, 인도, 공원, 산책로, 조깅로 등의 기존 아스콘, 투수콘, 콘크리트 포장 위에 적용하도록 설명하고 있다.

3. 지적 사항

서구 ○○과에서는 ㉠㉠㉠마을 도로 내 디자인 요소가 가미된 아스콘 스탬핑(도막포장) 기법을 활용하여 마을의 특색있는 도로를 정비하고 마을경관을 도모하며, 교차로 부근은 원형 바닥 패턴을 사용하여 차량속도를 감속하고 광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교 사업 정비구역 지정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인천광역시 고시 제20**-***호, 20**-*.**.)」 및 「교 사업 사업시행계획을 고시(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호, 20**-*.**.)」 하였다.

그러나 도시계획 도로를 정비하면서 보도·자전거도로 등에만 적용이 가능한 ‘바닥재’가 아닌 ‘미끄럼방지포장재’ 등 차도 적용이 가능한 적절한 포장재를 선정하였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관련 규정을 검토하지 않고 도시계획시설 000m²에 도막재를 포장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은

[주의]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바닥재가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에 적용하면 안된다는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한 후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업무 연찬 및 직원교육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시정 요구

제 목 ㅎ 정비공사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서구

관 계 부 서 ○○과

내 용

1. 사업개요

서구 ○○과에서는 20**년 **월 □□(주)와 ‘ㅎ 정비공사(1단계) (이하 “정비공사”라 한다)’ 계약을 맺어 20**년 *월 준공하였고, 또한 정비공사 2단계는 20**년 *월 ▲▲(주)와 계약을 맺어 20**년 *월 착공하여 20**년 *월 준공 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 관련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변동 및 설계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으며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는 경우 지질·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그 밖에 발주기관 등에서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에는 설계변경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48조(설계변경 및 계약

금액 조정)에 따르면 공사감독자는 시공자가 현지 여건과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공사비의 절감과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등 설계 변경이 필요한 경우 설계변경 사유서, 설계변경도면, 개략적인 수량 증감 내역 및 공사비 증감 내역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이를 검토·확인하고 검토 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실정보고 하고, 발주청 방침을 득한 후 시공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지적사항

가. 정비공사 경계석 거푸집 설치 소홀

정비공사 설계도서에 따르면 경계석의 위치 고정과 지지력 확보를 위하여 000m에 거푸집(합판0회)을 설치하여 시공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현장 여건이 가시설(거푸집) 설치 공간 부족으로 보도 경계석 거푸집(합판0회)에 대하여 합판만을 설치하여 시공할 수 밖에 없었다면 시공사는 현지 여건과 설계도서가 부합하도록 검토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실정보고 하고 발주청의 방침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함에도 실정보고 없이 시공사 임의로 시공하여 2단계 보도 경계석 시공을 완료하였다.

또한 공사감독자는 거푸집(합판0회)에 대한 설치 여부를 확인하여 미설치 공중에 대하여 감액 설계변경(000천 원) 등을 하여야 함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설계변경을 미 실시 하였다.

나. 보도 정비공사 방초시트 사용 부적정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국토교통부 예규 제237호)」에 따르면 보도포장은 빗물을 포장 하부로 원활하게 침수시킬 수 있는 투수성 구조를 원칙으로 하고 포장의 형식은 블록 포장을 표준으로 하며, 침수된 빗물의 동결 및 융해의 반복으로 인해 보도 포장 파괴가 우려되는 곳, 터널, 지하수위가 높은 곳은 예외로 한다고 되어 있다.

서구 ○○과에서는 정비공사 1, 2단계 시행 시 보도블록 포장을 시공하면서 블록 자체가 투수성을 갖고 강우 시 빗물을 흡수하여 투수 기능을 확보하는 투수

블럭 자재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블럭 포장 밑(기층)에는 1(m²당 000원)을 시공·설치함에 따라 투수 블럭을 통과한 우수를 1이 차단하게 되어 투수 블럭을 포장한 효과가 없을 뿐 아니라, 향후 1에 고인 빗물의 동결·융해의 반복으로 보도포장의 융기 또는 침하로 인한 파괴가 우려 되는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다. 종합안내판 과다 설치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7-3조(자전거도로 안내 표지)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도시 내 주요 거점이나 철도역 등에는 자전거 도로 안내지도나 관광안내판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서구 ○○과에서 자전거 이용자를 위해 설치하는 안내판은 사업 구간 교차로 등 주요 변곡 지점에 방향 안내판 총 00개(1단계 0개소, 2단계 0개소, 설치비 포함 000천 원/개당)와 주요 거점 지역에 종합관광 안내판 총 0개소(1단계 0개소, 2단계 0개소, 설치비 포함 000천 원/개당)를 설치하도록 설계서에 계상되어 있다.

그러나 자전거 이용자 안내판의 주된 목적은 이용자의 편의와 이동로 제시가 주된 목적임을 감안할 때 종합관광 안내판 설치의 주요 거점 지역 시·종점부에 각각 1개소 설치가 적정하고 그 외 설치예정 지역에는 방향 안내판을 설치하여 자전거 이용자들의 이동방향 제시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서구 ○○과는 종합관광안내판 0개소 00백만 원에 대하여(시점부 1단계 1개소 기설치) 종점부 1개소만 설치하고 나머지 0개소는 설계변경(감액 00백만 원)을 통하여 정비공사에 필요한 기타 시설에 활용할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은

- [시정] ①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현지여건 등과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는 공중(거푸집 및 관광종합안내판)에 대하여 감액 설계변경(감액 00백만 원)을 추진하시기 바라며,
- ② 앞으로 공사비의 절감과 품질향상을 위하여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한 후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업무연찬 및 직원교육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시정·개선 요구

제 목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과 관련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서구

관 계 부 서 ○○과 외 5개 부서

내 용

1. 업무 개요

건설공사 발주자로 하여금 공사원가 구성에 있어 경비 항목 중의 하나로 존재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 종류에 따라 일정금액을 공사도급 계약서에 별도로 계상토록 하여 시공자가 공사 중에 안전관리자 인건비, 안전시설비, 기술지도비 등 건설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에 사용토록 강제하는 제도

2. 관련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의 규정에 따르면 건설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총 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인 공사에 대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안전관리비”라 한다)를 도급금액에 계상 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기준 제7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따르면 안전관리비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 장애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발주자는 수급인(계약자)이 안전관리비를 목적 외로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이를 감액 조정 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는 내용은 같은 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 불가내역)에서 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따르면 계약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에 따르면 검사에서 계약상대자의 계약 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하도록 되어 있다.

3. 지적사항

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소홀

서구 ○○과 등 0개 부서에서는 건설공사를 추진하면서 계약상대자가 준공 또는 기성 요청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정산)서’를 제출받아 상기 기준에 따라 사용 여부를 확인하여交通安全시설 또는 공사용 자재 등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청구된 금액에 대하여는 감액조정 하거나 반환을 요구하여야 한다.

그러나 20**년부터 20**년까지 추진한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내역을 확인한 결과 시설공사(토목, 건축, 조경 등)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는 ‘현장 경계 펜스, 차량유도등, 라바콘’ 등交通安全시설물, 공사안내간판 등의 사용 불가 항목에 대한 집행내역(개략 00건 00백만 원)을 감액하거나, 반환을 요구하지 않고 집행하였다.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가이드라인 부재

서구에서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는 안전관리비에 대하여 사용 확인 및 정산 등에 있어 정산 가이드라인이 없어 공사마다 편차 있는 사용내역 등을 시공자가 제출하여도 감액 조정없이 지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서구에서는 20**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내역을 확인한 결과 ‘20**년 ㄱ 정비사업’에 안전화 1켤레를 000원에 구입한 반면 동일년도 ‘20**년 ㄴ 관리사업’에서는 안전화 1켤레를 000원에 구입하는 등 안전관리비에 대한 정산 가이드라인이 없어 시공사가 제출한 사용내역 원안으로 감액 조정 없이 지급하였다.

아울러 최근 3년간 구입한 000개의 안전화 평균 구입비는 000원으로 서구 무기계약직의 안전화 평균 구입비인 000원과 비교 적용할 시 개략 00백만 원의 사업예산을 절감하지 못한 사례도 있다.

또한 안전모에 대하여는 ‘ㄷ 공사’에 개당 000원에 구입한 반면, 동일 년도 ‘ㄹ 공사’에서는 개당 000원으로 구입하는 등 최근 *년간 해당 건설공사에서 안전모를 구입한 갯수는 000개(평균 000원/개당)로 이에 대하여 전자상거래(인터넷)로 구입 시 안전모 적정가인 000원(개당)으로 구매 적용할 수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하지 않아 개략 00백만 원의 사업예산을 절감하지 못한 사실이 있으며

안전 장구 지급에 따른 지급대장 등을 근로계약서,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 하도급 계약서 등과 연계하여 사용내역을 확인 및 정산 하여야 함에도 시공사가 제출한 구매 영수증과 사진만으로 사용내역을 확인하여 공사기간 및 투입인원에 비해 과도하게 사용내역을 제출하여도 감액 조정 없이 지급함으로써 예산낭비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은

[시정]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8조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목적 외로 사용하여 부당하게 지급한 약 00백만 원을 환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개선] 앞으로 안전관리비의 적정사용 여부를 투명하게 확인 정산할 수 있도록 당해년도 건설사업 설계기준(안) 작성에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정산) 확인 가이드를 작성·수록하여 안전관리비 집행(정산) 시 증빙자료 확인에 활용하여 부당 사용 등으로 인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주의 요구

제 목 개발부담금 결정·부과 업무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서구

관 계 부 서 ○○과

내 용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4조(부담금의 결정·부과)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부과기준과 부과 금액의 예정 통지)에 따르면 개발부담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은 개발사업¹⁾의 시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개발이익 중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하는 금액²⁾으로 부과 종료시점³⁾부터 5개월 이내에 결정·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서구 □동 ***-***외 *필지에 지목변경 수반 사업을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⁴⁾를 받아 20**. *. * 준공을 받은 DD에 대하여 20**. *. *까지 개발부담금 000천 원을 부과하였어야 하는데도, 법정 결정·부과일보다 00일 초과한 20**. **. ** 개발부담금을 결정·부과한 사실이 있다.

또한, 이를 비롯하여 서구에서는 20**. *. *부터 20**. *. ** (준공일기준)까지 개발행위허가 준공 등을 받은 총 000건에 대하여 법정 결정·부과일까지 개발부담금 000천 원(총 000천 원)을 결정·부과하였어야 하는데도, 법정 결정·부과일보다 최대 000일을 초과하여 개발부담금을 결정·부과 하였다.

1)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지목 변경이 수반되는 사업(건축물의 건축 등) 등

2) “종료시점지가(부과 종료 시점의 부과 대상 토지의 가액) - 개시시점지가(부과 개시 시점의 부과 대상 토지의 가액) - 부과 기간의 정상지가상승분 - 개발비용(설계비, 공사비 등)”의 20~25%

3) “부과 종료 시점”은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을 말함(같은 법 제9조 제3항)

4) 지목변경(전 → 대지)에 수반되는 사업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은

[주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거나 지연하여 결정·부과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시정 요구

제 목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서구

관 계 부 서 ○○과

내 용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내지 제12조에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개별단위면적당 가격(원/㎡)를 말한다.

지가산정 결정 절차의 중요한 업무인 “토지특성조사”는 연중 상시조사체계를 유지하도록 하고, 토지특성 조사 기간 중에는 공시기준일 현재 토지특성조사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중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일단지는 2필지 이상의 일단의 토지를 의미한다.

그리고 지적공부상 2필지 이상의 일단의 토지가 같은 용도로 이용되고 있고 사회·경제·행정적 측면에서 합리적이며 해당 토지의 가치형성 측면에서도 타당하다고 인정되고, 일반적인 거래도 일단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으므로 개별공시지가조사의 경우에 이를 반영하여 1필지의 토지로 보고 조사하는 것이 타당하다.

감사일 기준 서구 관내의 2필지 이상의 건축물대장을 확인한 결과 서구 ㄴ동 ***-**-** 외 *필지 등 000건이 *필지 이상으로 관리되고 있음이 확인되었고, 서구 ㄷ동 ***-**-** 외 *필지 등 000건의 공시지가가 토지용도 유형별 일단지의 범위인 근생시설, 공장 등 주거용지 및 공업용지

등에 조성된 건축물이 있어 일단지로 사용중에 있음에도 토지특성조사를 소홀히 하여 일단지로 적용치 아니하고 개별공시지가를 부적정하게 결정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은

[시정]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쓰이는 중요자료임을 감안, 감사지적 사항에 대하여 2022년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 조사 시 반영 조치하시기 바라며, 매년 일단지 토지특성 일제조사 등을 통하여 적정한 개별공시지가가 산정될 수 있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시정 요구

제 목 건축물대장 관리업무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서구

관 계 부 서 ○○과 외 1개 부서

내 용

「건축법」 제38조(건축물대장)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건축물대장)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의 소유·이용 및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건축물대장에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 및 건축물의 구조내력에 관한 정보를 적어서 보관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정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감사일 현재 서구 관내의 2필지 이상의 건축물대장 현황은 서구 ㄱ 동 ***-※ 외 *필지 등 000건이 2필지 이상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토지이동 사항을 확인한 결과, 서구 ㅇ동 ***-※외 *필지 등 000건이 토지이동(합병 및 토지구획정리사업 등)되어 지번이 말소 또는 변경되었음에도 건축주 신청주의 원칙이라는 사유를 들어 건축물대장의 지번을 정리하지 아니하고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서구에서는 건축물 소유자의 신청에 의하는 경우 외에 지번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토지이동정리결의서와 토지·임야분할·합병 신청서 사본)가 첨부된 지적공부 소관청의 지적정리통지에 의하여 건축물대장의 지번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음에도 협의 등의 조치를 이행치 아니하여 토지와 건축물이 불일치되는 사항으로 관리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은

[시정] 토지와 불일치 사항으로 관리되고 있는 건축물대장에 대하여 지적부서와
간밀히 협의하여 조속히 정리하시기 바라며, 건축물대장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시정 요구

제 목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업무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서구

관 계 부 서 ○○과 외 2개 부서

내 용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에 따라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그 건축물의 건축주등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 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는 제79조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에서 정한 금액을 부과하여야 한다. 다만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하여야 한다.

또한 같은 법 제80조의2(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는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제1호 내지 제2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까지 위반내용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서구에서는 서구 자동 ***-*번지 건축물 등 000건에 대하여 신규발생

시 이행강제금을 최초 부과한 이후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위반건축물 시정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나, 이행강제금 반복부과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은

[시정]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하시기 바라며, 20**년도 이행강제금 반복부과에 대한 계획 및 조치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앞으로 법령에 따라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반복부과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주의 요구

제 목 민원처리(건축허가·신고)업무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서구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인천광역시 서구 ○○과에서 처리하는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사무는 법령에서 정한 일정 요건에 따라 인가·허가·승인 등을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신청하는 법정민원으로서, 동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원을 신속·정확·친절·적법하게 처리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정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법정민원의 신청이 접수된 때부터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소요되는 처리기간을 법정민원의 종류별로 미리 정하여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와 관련된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민원 사무명은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로서 법정처리 기한은 건축허가 7일(일반)~15일(16층 이상 3만제곱미터이상), 건축신고는 5일로 동 기간내에 민원을 처리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민원문서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제6항에 따라 허가권자는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면 그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8항에 따른 처리기준이 아닌 사유를 이유로 협의를 거부할 수 없고,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에 따라 사전결정 신청일 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개최하여야 하며 허가권자는 협의회의 회의를 개최하기 3일 전까지 회의 개최 사실을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 부서에 통보하여야 하고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 부서는 그 협의회의 회의를 개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동의 또는 부동의 의견을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서구에서는 민원인이 신청한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를 처리함에 있어 담당자가 신속하게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보완 요청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나 민원신청 이후 0일~00일이 경과한 후 보완 요청하였고

이로 인해 관련부서(기관)와의 협의의견 제출 지연 등의 결과를 초래하여 00일 이상(00건)이 경과한 후 건축허가 및 신고가 처리됨에 따라 민원사무 업무처리 소홀로 민원 불편사항과 행정신뢰도 제고에 기여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은

[주의] 관련 법률에 따라 민원업무를 신속·정확·친절·적법하게 처리하시기 바라며,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업무 연찬을 통해 민원불편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주의·개선 요구

제 목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보조금 교부결정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서구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서구”라 한다)는 노후 방지시설 교체로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통한 대기질 개선 및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원을 위하여 국·시비 보조금을 지원받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다.

「대기환경보전법」 제81조(재정적·기술적 지원) 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법 제32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측정기기 부착 및 운영·관리와 그 밖에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나 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환경부, “이하 소규모 지침”이라 한다)」에 따르면 본 지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4·5종 사업장(예산 여건에 따라 1~3종 중 중소기업 지원 가능)과 지역단위 악취개선 시범사업의 지역 내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에 대하여 방지시설 설치 지원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그리고 사업자가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지자체에 제출하면 지자체는 보조금 사업 대상(중소기업 등), 방지시설의 종류 및 설치비용의 적정성 등 검토 및 현장

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승인 여부를 배출 업체에 통보하여 방지지설 설치 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에 방지지설을 설치 완료 및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보조금의 교부 결정)에 따르면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① 법령 및 예산에의 적합 여부, ②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성, ③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④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자금의 일부를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등을 조사하여 지체 없이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서구 ○○과는 20**년, 20**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지설 설치 지원사업 신청 공고”에 지원내용 및 금액, 지원대상, 지원조건·범위, 신청방법 등을 공고하면서 공사원가계산서를 작성하여 방지지설 설치비 산출 내역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규모 사업장 방지지설 설치 지원사업의 신청서를 접수 받았을 때에는 관련 법령과 지침, 사업 공고문에 따라 방지지설 설치비 산출 내역서의 금액 산정 착오 유무를 포함하여 보조금 사업 대상, 방지지설의 종류 및 설치비용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조금 교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서구 ○○과는 ㉠㉠ 등 00개 사업장의 소규모 사업장 방지지설 설치 지원사업의 신청서에 함께 제출한 공사원가계산서의 금액 산정 내역에 “건축, 산업환경설비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의 기타경비(재료비+노무비)의 0.0%를 적용하도록 한 공고문과 다르게 0.0% 또는 0%의 제비율을 적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금액 산정 착오 유무에 대한 검토가 소홀하여 00개 사업장에 000천원의 설치비용을 과다 지급하도록 교부 결정한 사실이 있다.

이에 대해 서구(○○과)에서는 ①공사원가계산서의 경우 ‘건축, 산업환경설비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을 참고 서식으로 제시 ②보조금을 지원 신청 사업장이 전문공사업체를 선정하여 공사를 실시하는 민간영역으로 작성요령에 제시한 원가계산서상 제비율 등은 절대 준용할 것을 강제할 근거가 없음 ③타시도는 물론 인천시, 계양구, 남동구 등을 포함하여 지자체별로 참고서식을 제공하지 않거나 제비율을 달리 적용하고 있어 지자체간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음 ④전문가의 설계서 및

현장심사 등 여러 단계의 심의를 받고 최종 환경부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근거·준용하여 결정한 사항이지 금액산정에 착오가 있는 것은 아님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보조 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환경부)」 등에 따라 추진하는 국·시비 지원 사업으로 보조사업자와 교부권자는 관계 법령 및 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는 공공부문으로 제시된 의견에서 민간영역이라는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

또한 공고문에 작성요령으로 첨부하여 공고한 공사원가계산서에 “건축, 산업 환경설비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의 기타경비 0.0%를 제시하였음에도 이와 달리 0.0% 또는 0%를 적용한 사업장의 경우를 인정하여 보조금을 교부 결정함으로써 공고문을 성실히 반영하여 공사원가계산 후 보조사업을 신청한 대다수의 사업자들은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을 지원받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아울러 인천시를 비롯한 서울시 등 타시도의 경우에도 공사원가계산에 ‘건축, 산업환경설비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을 제시하여 적용하도록 공고한 바 있으며, 이러한 내용을 참고하여 보조 사업의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할 의무는 각 보조 사업의 교부권자에 있다 할 수 있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은

[주의]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보조금의 교부결정 시에는 관계법령 및 지침, 공고문 등에 따라 신청금액을 산출하였는지를 확인하여 적정 금액을 교부할 수 있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선] 보조사업에 적용되는 제비율 등 원가계산내역에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방침 및 공고문 정비, 교부결정 체크리스트 마련 등을 검토하여 개선 방안을 수립·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주의·시정 요구

제 목 ㄱ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운영·관리 미흡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서구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서구”라 한다)는 20**. *. **. 준공되어 운영·가동 중인 ㄱ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에 대하여 20**년부터 20**년까지 각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등에 따라 ■■(주)와 위탁·운영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하는 등 업무를 처리하였다.

1. 입찰참가자격 제한 검토 미비

협상에 의한 계약이란 물품·용역, 지식기반사업 등 계약에 있어서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창의성·예술성·안전성 등이 요구되는 경우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 받아 평가기준을 정하여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거쳐 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협상에 의한 계약은 계약이행의 전문성, 기술성, 창의성 등을 저해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실적제한 등의 방법 등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협상에 의한 계약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8조(공동계약)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7장(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계약의 목적과 성질상 공동계약(공동도급)으로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하면 공동도급을 허용하여야 한다.

그런데 서구 ○○과는 20**년, 20**년 “ㄱ 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관리용역”의 용역 입찰공고에서 실적제한 시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에서 발주한 1년 이상, 이송관로 10km 이상 실적만을 인정하거나 기술인력을 제한하고,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아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보다 나은 제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2. 위탁운영 용역 감독업무 소홀

20**년, 20**년 「ㄱ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위탁관리용역 과업지시서(이하 “과업지시서”라 한다)」에 따르면 수탁자는 착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운영요원의 배치, 시설물의 운영·관리 및 점검 계획 등을 포함하는 운영관리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도급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과업지시서에 따라 수급인은 위탁관리용역 착수시 운영요원들의 근무규정을 제정하여 도급인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 근무규정을 준수하여야 하고, 수급인은 도급인이 통보하는 음식물침출수 관리기준 및 세척수 사용 통제방안을 준수하여야 하며 분기별 이행실적 및 계획을 분기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서구 ○○과는 과업지시서에 따라 위탁운영 업체에 운영·관리하도록 하여야 하고, 착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한 운영관리계획서에 따른 유지관리계획대로 사업을 수행하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그러나 해당 부서에서는 과업지시서에 따라 착수 후 제출하는 운영관리계획서에 이송관로 등 ① 주요 설비에 대한 점검계획 누락에 따른 보완 조치 및 적정 승인 미 통보, ② 운영요원들의 근무 규정 제출에 따른 관리 검토 후 미 승인 처리, ③ 분기별 음식물 침출수 이행실적 및 계획 미 제출 등 용역 감독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3. 주요설비 일상점검 미흡

과업지시서에 따르면 시설물(집하장, 공공투입시설, 관로시설)의 유지·보수를

위해 수급자는 주요 설비에 대한 점검 계획을 포함한 운영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도급자에 제출·승인 받고, 관로점검현황을 월별로 도급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각종 시설의 점검주기는 도급인의 승인을 득한 자동집하시설 운영관리계획서의 시설물별 점검주기를 따르기로 하며, 이송배관의 점검 내용은 부적합한 폐기물 투입으로 인한 이송관로의 막힘 등 사전예방을 위해 이송배관의 일상점검 및 협잡물 제거, 관로 이상 시 조치 및 경과보고 등이 있다.

따라서 서구 ○○과는 수급자로부터 운영관리계획을 제출받아 주요 설비의 점검 계획 등이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승인한 후, 그에 따른 점검주기를 준수하여 일상적인 정기점검의 적정 이행여부를 감독하여야 한다.

그런데 해당 부서는 주요 설비의 점검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이송배관에 대한 일상점검이 집하장별 평균 **%로 미흡함에도 불구하고, 점검계획에 대한 보완요구 및 이행을 지시하지 않는 등 이송배관에 대한 점검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은

[주의] ①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낙찰자 결정기준」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시어 입찰참가자격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② 자동집하시설의 운영지침서 및 과업지시서 등에서 정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설물의 운영·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위탁운영 용역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과업지시서에 따라 제출한 운영관리계획서에 누락된 주요 설비에 대한 점검계획을 보완 조치한 후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 미제출한 운영요원들의 근무 규정과 분기별 음식물 침출수 이행실적 및 계획을 위탁운영 용역사에 제출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주의 요구

제 목 비산먼지 발생 건설공사의 감독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서구

관 계 부 서 ○○과 외 1개 부서

내 용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비산먼지의 규제)에 따르면 비산배출되는 먼지(이하 “비산먼지”라 한다)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및 시행규칙 제57조(비산먼지 발생사업)에 비산먼지 발생사업은 건설업(지반 조성공사, 건축물 축조공사, 토목공사, 조경공사 및 도장공사로 한정한다) 등 11개 사업을 정하고 있으며, 건설업 중 공사면적이 1,000㎡ 이상 또는 총 연장이 200m 이상의 토목공사와 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인 조경공사 등이 이에 해당한다.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제127조(착공 신고서 검토 및 보고)에 따르면 공사감독자는 건설공사가 착공된 경우에는 시공자로부터 유해·위험방지계획서(실착공 전에 제출 가능) 등이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제출받아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같은 지침 제134조(시공계획서의 검토·확인)에 따르면 공사감독자는 시공자로부터 공사시방서의 기준(공사종류별, 시기별)에 따라 안전대책 및 환경대책 등을

포함한 시공계획서를 공사착수 전에 제출받아 이를 검토·확인하여 7일 안에 승인한 후 시공토록하여야 한다.

따라서 건설공사의 감독자는 착공 전에 공사 착공신고서 및 시공계획서에 제출한 환경대책에 대하여 제출받아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에 따른 비산먼지발생사업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신고여부와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적정하게 이행하였는지 확인·승인 및 감독하여야 한다.

그런데 서구 ○○과와 ●●과에서 발주한 “㉠㉠ 정비공사(2차)”등 0개 공사는 총 연장 200m 이상의 토목공사와 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의 조경공사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감독자는 공사 착공신고서 및 시공계획서에 신고여부 및 적정 조치 이행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공사를 착공하여 시행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은

[주의] ①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 건설공사를 착공할 때에는 착공 신고서 및 시공계획서에 환경대책을 제출받아 관계 법령에 따른 신고여부와 비산먼지 발생 억제에 필요한 조치 등을 이행하였는지 확인·승인하는 등 공사 감독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② 향후 공사 착공 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무원들에게 업무 연찬 및 교육을 통하여 주의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주의 요구·권고

제 목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LED조명 교체지원)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서구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인천광역시 서구 ○○과에서는 관내 취약계층(저소득층,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기존 일반조명을 국·시비 지원사업을 통해 소비전력이 낮고 성능이 우수한 고효율 조명기기(LED조명)로 무상 교체하여 구민 이용편의와 에너지이용 효율을 향상시켜 에너지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매년 ‘취약계층 LED조명 교체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1. 개인정보 보호업무 소홀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¹⁾는 개인정보²⁾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정보주체³⁾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1)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영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등),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함.

2)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함.

3)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함.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등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과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등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을 정보주체가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서구 ○○과에서는 매년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LED조명 교체지원) 신청자를 접수하면서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등 서면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구두로 안내 후 접수 처리하였으며,

시공업체에게 LED조명 교체대상자 명단을 제공하면서 성명, 주소,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보안각서’와 ‘개인정보 파기방법’ 징구 등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공사를 시행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2. 에너지복지사업 지원대상자 선정 시, 저소득층 지원확대 검토 필요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중 LED조명 교체지원사업의 주된 목적은 저소득층 등이 경제적인 사정 등을 이유로 에너지효율이 낮은 노후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에너지법」 제16조의2(에너지복지사업의 실시)에 따라 저소득층 및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국·시비 지원을 통해 기존 일반조명을 고효율 조명기기(LED조명)로 무상 교체함으로써 에너지를 적게 소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서구 ○○과에서 20**년부터 20**년까지 시행한 ‘취약계층 LED조명 교체공사’의 추진실적을 확인한 결과, 사회복지시설의 경우에는 관내 총 000개소 중 000개소(00%)를 추진한 반면,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관내 총 000가구 중 000가구

(0%)만을 추진하는 등 사회복지시설에 비해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추진실적이 매우 저조하였다.

또한, 인천광역시 타 자치단체가 매년 저소득층 및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에너지복지사업을 추진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서구의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에 편중되어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서구 ○○과에서는 매년 사회복지시설에 편중되어 LED조명 교체지원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저소득층 지원이 저조했던 점과 사회복지시설에 비해 저소득층에 대한 국비 지원이 많은 점 등을 감안하여 향후 에너지복지사업 지원대상자 선정 시에는 본 사업의 주된 목적인 경제적인 사정으로 에너지 소비여건이 어려워진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검토할 필요가 있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은

[주의]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규를 숙지하여 개인정보 보호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라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 등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고] 향후,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중 하나인 LED조명 교체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 선정 시에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주의 요구·권고

제 목 트지역 공원등 보수공사(단가계약)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서구

관 계 부 서 ○○과(㉠팀, ㉡팀)

내 용

인천광역시 서구 ○○과에서는 트지역 공원·녹지 내 공원 등의 신속한 보수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20**년 *월 **일 ㉡팀이 신설된 이듬해인 20**년 부터 자체 예산을 편성하여 매년 상·하반기로 나누어 ‘트지역 공원등 보수공사(단가계약)’를 시행하고 있다.

1. 동일 공사의 분할 발주 및 수의계약 부적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9조(계약의 방법)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계약을 체결할 때는 일반입찰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7조(공사의 분할계약 금지)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동일 구조물공사 또는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 제2항, 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 단계부터 분할·분리

계약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제1항 각 호에 따른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서구 ○○과에서는 ‘트지역 공원등 보수공사(단가계약)’와 관련하여 분할 발주의 적정성, 특정업체와의 지속적인 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계약업무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공사의 경우 1인 견적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공사내용(시공의 목적물), 장소 등이 동일한 공사를 매년 상·하반기로 분할하여 부적정하게 동일업체와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동식사다리 안전작업지침 준수 필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르면 공사감독관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와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에서 정한 내용과 공사계약 일반조건에서 정한 업무를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51조(안전관리)에 따르면 공사감독자는 시공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그 밖의 관계법규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사다리식 통로 등의 구조) 및 「이동식사다리 안전작업지침(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그림 1]과 같이 보통(일자형) 사다리, 신축형 사다리, 일자형으로 펼쳐지는 발붙임 겸용 사다리(A형)는 오르내리는 이동통로로만 사용(발판 및 디딤대에서 작업금지)하여야 하며, 모든 사다리 작업 시에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일자형으로 펼쳐지는 발붙임 겸용 사다리(A형)의 경우에는 손 또는 팔을

가볍게 사용하는 전구 교체작업, 전기·통신작업 등의 경작업 또는 고소작업대·비계 등의 설치가 어려운 협소한 장소에서만 사용하여야 하며,

사다리 작업높이가 1.2m이상~2m미만인 경우에는 2인 1조 작업, 최상부 발판에서 작업을 금지하고, 사다리 작업높이가 2m이상~3.5m이하인 경우에는 2인 1조 작업, 안전대 착용, 최상부 및 그 하단의 디딤대에서 작업을 금지하며, 사다리 최대길이가 3.5m초과한 경우에는 작업발판으로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서구 ○○과에서는 트지역 공원등 보수공사를 시행하면서 발붙임 겸용 사다리(A형)를 사용하여 작업높이가 2m이상인 공원등의 램프를 교체하면서도 1인이 작업하였으며,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았고 최상부 및 그 하단의 디딤대에서 작업하는 등 「이동식사다리 안전작업지침(고용노동부)」을 준수하지 않아 작업자가 사다리 위에서 추락하는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은

[주의] 「지방계약법」 등 관계법규를 숙지하여 분할 발주의 적정성, 특정업체와의 지속적인 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동일한 공사를 부적정하게 분할 발주하여 특정업체와 수의계약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권고] 현장여건 상 불가피하게 이동식사다리를 사용하여 고소작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작업자가 안전모와 안전대를 착용하여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이동식사다리 안전작업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주의 요구

제 목 표 공원 내 야외무대 정비공사(전기)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서구

관 계 부 서 ○○과(●팀)

내 용

인천광역시 서구 ○○과에서는 유동인구가 많고 접근이 용이한 표 공원 내 야외무대 정비를 통하여 트 지역 내 부족한 문화인프라 확충 및 복합문화공간을 제공하여 주민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시행한 ‘표 공원 내 야외무대 정비공사’와 연계하여 경관조명기기(투광등 및 열주등)의 설치를 위한 전기공사를 병행·시행하였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르면 공사감독관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와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에서 정한 내용과 공사계약 일반조건에서 정한 업무를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 공사감독자의 설계도서 검토업무 소홀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이하 “업무수행지침”이라 한다)」 제124조(설계서 등의 검토)에 따르면 공사감독자는 설계도면, 시방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을 숙지하여 감독하여야 하며, 시공자로 하여금 계약문서와 설계도면, 시방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에 대한 상호 일치여부 등을 검토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서구 ○○과에서는 ‘표 공원 내 야외무대 정비공사(전기)’와 관련하여

설계도면에는 야외무대 가장자리 0개소에 투광등의 조명 제어장치인 서브컨트롤러를 각각 0개씩 설치하는 것을 감안하여 관급자재인 서브컨트롤러를 00개 구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산출내역서에는 서브컨트롤러의 설치수량을 00개소로 산출하는 등 설계도면과 산출내역서간 상호 일치여부를 검토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0개소에 대한 설치품(개소당 000원, 직접노무비)을 부족하게 계상하는 등 공사감독자의 설계도서 검토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2. 주요 자재 공급원 승인업무 소홀

「업무수행지침」 제118조(공사관련 서류 검토·보고), 제131조(시공사 제출서류의 검토)에 따르면 시공자는 공사 시공단계에서 공사감독자에게 주요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을 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시공자가 제출한 ‘주요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를 접수하고 접수된 서류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시공자에게 문서로 보완 지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서구 ○○과에서는 ‘교 공원 내 야외무대 정비공사(전기)’의 설계서인 공사시방서에 시공 전 자재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사의 주요 자재인 전선관, 케이블, 전선 등에 대하여 공사 시공 전에 시공자로부터 ‘주요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를 제출받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는 등 관계법규 및 공사시방서에서 규정한 주요 자재 공급원 승인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3. 준공검사업무 소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7조(검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검사) 제5항에 따르면 검사를 위임받은 자는 검사를 할 때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서구 ○○과에서는 ‘교 공원 내 야외무대 정비공사(전기)’의 설계서인 공사시방서에 준공할 때에는 공사구간 ‘절연저항⁴⁾ 측정표’와 ‘접지저항⁵⁾ 측정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공자로부터 준공검사원을 접수하였을 때에 제출된 준공서류에 이를 첨부하지 않았으나 이에 대한 시정조치 지시 없이 준공처리하는 등 준공검사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은

[주의] ① 「업무수행지침」 등 관계법규를 숙지하여 공사감독자의 설계도서 검토업무와 공사의 품질 확보를 위한 주요 자재 공급원 승인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규를 숙지하여 공사의 준공검사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 등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절연저항”이란 전선을 감싸고 있는 피복 등과 같은 절연물의 저항을 뜻하는 것으로, 그 절연물이 전류의 누설을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나타내는 수치를 말함.

5) “접지저항”이란 땅에 매설한 접지 전극과 땅과의 사이에서 발생하는 전기 저항을 말함.

인천광역시

주의 요구

제 목 ㅎ 주차장 주차타워 설치공사(전기, 통신)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서구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인천광역시 서구 ○○과에서는 ㅎ 인근 주택가의 고질적인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행한 ‘ㅎ 주차장 주차타워 설치공사(건축, 토목, 기계설비)’와 연계하여 [표 1]과 같이 전등설비·전열설비·동력설비의 설치를 위한 전기공사와 방충설비·CCTV설비·주차관제설비의 설치를 위한 통신공사를 병행·시행하였다.

1. 공사의 공정관리업무 소홀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 제43조(공정관리), 제44조(공사진도 관리), 제45조(부진공정 만회대책) 및 「정보통신공사 감리업무 수행기준」 제47조(공정관리), 제48조(공사진도 관리), 제49조(부진공정 만회대책)에 따르면 감리원은 해당 공사가 정해진 공기 내에 설계설명서, 도면 등에 따라 우수한 품질을 갖추어 완성될 수 있도록 매주 또는 매월 정기적으로 공사진도를 확인하여 예정공정과 실시공정을 비교하여 공사의 부진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고,

공사 진도율이 계획공정 대비 월간공정 실적이 10% 이상 지연되거나, 누계공정 실적이 5% 이상 지연될 때에는 공사업자에게 부진사유 분석, 만회대책 및 만회공정표를 수립하여 제출하도록 지시하는 등 정상 공정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검토·확인한 부진공정 만회대책과 그 이행상태의 점검·평가결과를 감리보고서에 수록하여 발주자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 제4조(발주자, 감리원, 공사업자의 기본임무) 및 「정보통신공사 감리업무 수행기준」 제4조(발주자, 용역업자, 감리원, 공사업자의 기본임무)에 따르면 발주자는 감리용역 계약문서에 정한 바에 따라 감리가 성실히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서구 ○○과에서는 0건의 공사에 대하여 공사 업무 전반에 대한 품질을 확보하고 공정을 원활히 수행하고자 시행한 책임감리용역 과업지시서 상에 월 1회 진행되고 있는 공정현황을 월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에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월간 공정현황이 전혀 제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감리원을 지도·감독하지 않는 등 관계법규 및 책임감리용역 과업지시서에서 규정한 해당 공사의 공정관리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2. 공사의 설계변경업무 소홀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 제52조(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에 따르면 감리원은 공사업자가 현지여건과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아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설계변경사유서, 설계변경도면, 개략적인 수량증감내역 및 공사비 증감내역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이를 검토·확인하고 필요시 기술검토 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실정을 보고하고, 발주자의 방침을 받은 후 시공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설계변경 방침결정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단순사항은 7일 이내, 그 이외의 사항은 14일 이내에 방침을 확정하여 책임감리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ㅎ 주차장 주차타워 설치공사(전기)’와 관련하여 책임감리원이 주차장 내 평균조도를 감안한 1층 조명기구 재배치, 가로등 제어반 이설, 엘리베이터 신설에 따른 추가 배관배선공사 등의 설계변경을 위하여 20**. **. **. 공사업자로부터 실정보고서를 제출받아 이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20**. **. **. 발주자에게 보고하였으나,

발주자인 서구 ○○과에서는 관계법규에 따라 단순사항은 7일 이내, 그 이외의 사항은 14일 이내에 방침을 확정하여 책임감리원에게 통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가, 20**. **. **. 되어서야 관련 공문을 접수하여 설계변경을 시행함으로써 실정보고사항에 대한 발주자의 승인 없이 시공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공사의 설계변경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3.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를 위한 관계법규 미 준수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은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예고의 실시 또는 의견청취 등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서구 ○○과에서는 ‘충 주차장 주차타워 설치공사(통신)’와 관련하여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한 시설이용을 도모하고자 설치할 계획이었던 00대의 감시카메라(CCTV)에 대하여 사전 행정예고의 실시 또는 의견청취 등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관계 법규를 준수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은

[주의] ①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 등 관계법규를 숙지하여 공사의 공정관리업무와 설계변경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또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신규 설치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규를 철저히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③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 등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시정 요구·권고

제 목 공영주차장 전용주차구획 설치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서구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인천광역시 서구 ○○과(이하 “○○과”라 한다)에서는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등에 따라 관내 63개소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하여 운영·관리하고 있다.

1.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 미충족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의2제1항에 따르면 법 제7조에 따라 설치하는 노상주차장은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한 면 이상,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4퍼센트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5항에 따르면 제1항 및 제2항에서 산정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대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과에서는 공영주차장 00개소 중 0개 공영주차장에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00면이 부족한 상태로 관리·운영하고 있어 교통약자의 공영주차장 이용 및 편의제공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2.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 설치 미충족

국토교통부에서는 그린 뉴딜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노외주차장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을 총 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 설치하도록 하고, 홍수 등으로 인한 차량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하천구역 및 공유수면 등에 위치한 주차장에 차량 통제를 위한 차단기, 주차장 전체를 볼 수 있는 영상기기 및 차량 대피 안내를 위한 설비 등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에 태양광 발전시설 및 집배송시설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2021. 4. 16. 「주차장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국토교통부령 제843호)하여 같은 날 시행하였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4호에 따르면 노외주차장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이하 “환친차”이라 한다)의 전용주차구획을 총 주차대수의 100분의 5이상 설치해야 하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역별 주차환경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환친차 전용주차구획의 의무 설치 비율을 100분의 5보다 상향하여 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과에서 관리·운영 중인 노외주차장 내 환친차 전용주차구획 설치 현황을 확인한 결과 노외주차장 00개소에서 모두 환친차 전용주차구획 의무 설치 비율을 미충족한 것으로 확인되어, 환친차 전용주차구획 설치 예산 확보 및 같은 규칙 부칙 경과규정에 따라 20**. *. **.까지 환친차 전용주차 구획 의무 비율을 충족하도록 조치가 필요하다.

아울러, 2021. 9. 27. 개정된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내용을 살펴본 결과 「주차장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환친차 전용주차구획 의무 설치 비율과 관련된 내용이 검토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관내 환친차의 등록현황 및 이용실태, 주차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친차 전용주차구획의 의무 설치 비율을 상향하는 등 조치가 필요하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은

[시정] ①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의무 설치 비율을 미충족한 공영주차장에 대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시기 바라며, 위탁·운영 중인 공영주차장에 대하여도 관련규정을 준수하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②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 의무 설치 비율을 미충족한 공영주차장에 대하여 설치예산 확보 및 경과조치 기한 내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시기 바라며, 위탁·운영 중인 공영주차장에 대하여도 관련규정을 준수하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권고] 관내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록현황 및 이용실태, 주차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제14호 단서조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 의무 비율 상향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주의 요구

제 목 공공하수도 사용료(조정)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서구

관 계 부 서 ○○과

내 용

「하수도법」 제65조제1항에 따르면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도를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고,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르면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1]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부과·징수하고, 하수배출량은 제14조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같은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르면 관리청은 제14조에 의한 하수배출량의 인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하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고, 다만 사용자가 하수 배출량을 입증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장치를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토록 할 수 있으며, 계측장치 설치 후 봉인은 관리청이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인천광역시 서구 ○○과에서는 사용자가 공공하수도 사용료 조정(감면)을 신청하면 관련규정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직접 조사하거나 계측장치 설치를 통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사 또는 사용자가 하수배출량을 입증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

하는 경우에는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장치를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토록 하여 하수배출량을 검토하여야 함에도 사용자가 하수도 사용료 조정(감면) 신청 시 제출한 하수배출량 실태조사 용역보고서를 근거로 하수배출량을 인정하여 공공 하수도 사용료를 조정(감면) 처리함으로써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업무처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은

[주의] 공공하수도 사용료 조정(감면)을 위한 하수배출량 검토 시 관련규정에 따라 업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시정 · 주의 요구

제 목 예정가격 작성 시 건설공사 설계기준 활용 미흡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서구

관 계 부 서 ○○과 외 6개 부서

내 용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건설폐기물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발생하는 것만 해당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같은 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발생량 중 위탁처리하는 건설폐기물의 양이 100톤 이상인 건설공사를 발주하려는 경우에는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분리하여 발주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①거래실례가격, ②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③표준시장단가, ④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가격을 기준으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가격, 유사한 물품·공사·용역 등의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과에서는 적정하고 신뢰성 있는 공사(용역)설계를 위하여 매해 연초마다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및 관내 시장조사가격(견적가격) 등을 통하여 건설공사 설계기준(이하 “서구 설계기준”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있으며, 서구 설계기준 내용에는 폐기물 처리단가 및 운반비에 대한 기준이 수립되어 있다.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서구”라 한다)에서는 20**년 *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 000톤(본청 기준: 폐콘크리트 000톤, 폐아스콘 000톤)을 처리하고자 관련법령에 따라 000회에 걸쳐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분리 발주 하였다.

그리고,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예정가격 작성방법을 확인한 결과 서구(본청 기준) 각 부서에서는 원가계산에 의한 작성방법 외에 견적가격, 물가정보가격(기획재정부에 등록한 전문가격 조사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설계서에 계상된 폐기물운반비를 확인한 결과 건설현장에서 중간처리업체까지 운반거리 및 운반차량이 동일함에도 용역별로 운반단가가 다르고, 건설폐기물이 서구 관내 중간처리업체로 운반·처리됨에도 운반거리 산정 시 건설현장과 중간처리업체까지의 거리를 검토하지 않고 견적가격 등을 단가산출근거로 적용함에 따라 폐기물운반비가 과도하게 계상되는 사례들이 확인되는 등 예정가격 작성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 서구에서는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처리하고자 할 경우 ○○과에서 매년 수립하는 서구 설계기준(폐기물 운반비)을 활용하여 적정하고 신뢰성 있는 예정가격이 작성되도록 조치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재정 건전화에 기여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은

[시정] ○○과에서 매년 서구 설계기준을 수립하는 즉시 각 부서에 전파하여 활용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각 부서에서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발주 시 ○○과에서 수립한 서구 설계기준을 활용하시기 바라며, 설계서 작성 시 운반거리 및 운반차량 등 현장에 적합하도록 정확하게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시정 · 주의 요구

제 목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예정가격 작성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서구

관 계 부 서 ○○과

내 용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발생량 중 위탁 처리하는 건설폐기물의 양이 100톤 이상인 건설공사를 발주하려는 경우에는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분리하여 발주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①거래실례가격, ②원가계산에 의한 가격¹⁾, ③표준시장단가, ④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가격을 기준으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가격, 유사한 물품·공사·용역 등의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호에 따라 견적가격은 계약상대자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제출받은 가격을 말한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17호에 따라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 기타 용역은 일반관리비의 비율은 10%를 초과하지 못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이윤율은 용역의 경우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못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과(이하 “○○과”라 한다)에서는 하 주차장 주차타워를

1) 이 경우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은 계약의 목적이 되는 물품·공사·용역 등을 구성하는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계산한다.

설치하고자 ㄱ동 ***-#번지 외 *개소의 건축물 및 지장물 철거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 처리를 위해 ㄱ동 ***-#번지 외 *개소 지장물 철거공사 폐기물 처리 용역(이하 “건설폐기물용역”이라 한다)을 발주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과에서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을 작성하여 발주하였고 예정가격 작성 시 건설폐기물 운반비는 물가정보가격(기획재정부에 등록된 전문가 가격 조사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을 적용하였다.

그런데,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시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관련법령에서 정한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범위 내에서 계상할 수 있으나, 견적가격 또는 물가정보가격을 적용 시에는 그 가격에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이 포함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여 중복으로 계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그러나, ○○과에서는 건설폐기물 운반비(톤당 단가)산출 시 (사)한국건설폐기물수집운반협회에서 산출한 수집·운반비²⁾를 설계내역에 반영하면서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계상하지 않고 예정가격을 작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반관리비 0%, 이윤 00%를 반영함으로써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중복 계상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하고 건설폐기물용역을 발주하였다.

이로 인해 일반관리비 및 이윤이 중복으로 계상된 도급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000천 원의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재정건전화에 기여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

2) (사)한국건설폐기물수집운반협회에서 산출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비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6조, 행정자치부예규 제70호(2016.11.1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 예정가격 산출기준 관련 법령에 의거 산출되었으며, 동 단가는 이윤, 일반관리비가 포함되었음.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은

[시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이중 계상된 일반관리비, 이윤 등 000천 원을 환수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시 관련규정을 준수하시기 바라며, 건설
폐기물 처리용역 발주 시 예정가격 작성방법에 따른 이윤율 등에 대한
업무연찬을 실시하시어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주의 요구

제 목 공원조성계획 변경 결정 행정절차 미이행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서구

관 계 부 서 ○○과

내 용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이라 한다.)제16조(공원조성계획의 입안)에 따르면 도시공원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었을 때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구청장¹⁾은 토지의 이용, 동선, 공원시설의 배치 등에 대한 부문별 계획 등을 포함하여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입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원녹지법 제16조의2에 따르면 이미 결정된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려면 인천광역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군관리계획으로 변경 결정·고시 하여야 한다.

따라서 서구는 공원 리모델링 조성사업 관련 공원조성계획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공원녹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원조성계획 입안, 인천광역시도시공원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도시관리계획으로 변경 결정·고시한 후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서구 ○○과는 노후 공원시설 정비를 위하여 20**년부터 20**년까지 「ㄴ 공사」의 *개 공원 리모델링(정비) 사업을 실시하였다.

서구 ○○과는 *개 공원의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면서 ① 공원 시설 위치 및 면적 ② 공원 진입로 및 산책로 등 동선 체계 ③ 공원시설 내 공작물 종류 및 수량 ④ 녹지 면적 등 공원시설을 변경하였다.

1)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제1조, 제2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장 권한의 「공원녹지법」에 따른 공원조성계획 입안 및 공원 설치·관리 사무를 [별표1]에서 군구·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서구 ○○과는 공원녹지법 규정에 따라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또는 경미한 사항의 공원조성계획을 변경 결정·고시하고 공원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최종 결정 고시된 공원조성계획 조서 및 지형도면과 공원조성현황이 불일치하는 등 관련법령에 따른 공원설치·관리 업무에 소홀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은

[주의] 공원조성계획 변경 결정 없이 공원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에 따른 공원조성·관리 업무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사항에 대한 업무 연찬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시정·주의 요구

제 목 도시공원 및 녹지 점용허가 부적정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서구

관 계 부 서 ○○과

내 용

1. 등록면허세 관련 사항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도시공원의 점용허가), 제38조(녹지의 점용허가 등)에 따르면 도시공원과 녹지에서 다음 각 호²⁾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공원과 녹지를 관리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점용(변경 포함)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지방세법」 제23조(정의) 제2호에 따라 도시공원점용허가와 녹지점용허가는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 등 행정청의 행위에 해당하는 면허의 한 종류로서,

같은 법 제34조(세율) 제1항에 따라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종별 및 지방자치단체 현황별로 구분되고, 시행령 제39조(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에 따라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은 별표 1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35조(신고납부 등) 제1항에 따라 새로 면허를 받거나 그 면허를 변경 받는 자는 면허증서를 발급받거나 송달받기 전까지 제25조제2항의 납세지를 관할

2) ① (도시공원)공원시설 외의 시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② (녹지)녹지의 조성에 필요한 시설 외의 시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③ (공통)토지의 형질변경 ④ (공통)죽목을 베거나 심는 행위 ⑤ (공통)흙과 돌의 채취 ⑥ (공통)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등록면허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는 매년 1월 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제25조 제2항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납기에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매년 그 등록면허세를 부과하고, 면허의 유효기간이 1년 이하인 면허에 대하여는 면허를 할 때 한 번만 등록면허세를 부과해야 한다.

또한, 「지방세법」 제38조(면허 시의 납세확인) 제1항에 따르면 면허의 부여기관이 면허를 부여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35조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납부 여부를 확인한 후 그 면허증서를 발급하거나 송달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38조2(면허에 관한 통보) 제1항 관련 면허부여기관은 면허를 부여·변경·취소 또는 정지하였을 때에는 면허증서를 교부 또는 송달하기 전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기본법」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는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각종의 면허를 받는 때와 납기가 있는 달의 1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52조(면허 시의 납세 확인) 제1항에 따라 면허부여기관이 면허를 부여하거나 면허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납부되었음을 확인하고 면허증서 발급대장의 비고란에 등록면허세의 납부처·납부금액·납부일 및 면허종별 등을 적은 후 면허증서를 발급하거나 송달하여야 한 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서구 ○○과에서는 도시공원점용과 녹지점용을 허가(변경 포함) 시 관련 규정에 따라 면허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면허를 받거나 그 면허를 변경받는 자에게 면허세를 신고 납부하도록 안내하고 면허 부여 등의 사실을 관할 구청장에게 통보하여

면허세의 납부여부를 확인한 후 그 면허증서를 발급하거나 송달하여야 한다.

그러나 서구 ○○과는 000개소의 ○○과 000개소의 녹지를 관리하면서 도시공원 및 녹지 점용허가와 관련하여 등록면허세 부과대상 총 000건 중 000건에 대한 면허 부여 사실을 등록면허세 업무를 담당하는 서구 ○○과에 통보하지 않았으며, 등록면허세의 납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도시공원 및 녹지 점용허가를 처리하는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록면허세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2. 공원, 녹지 점용 변경허가 사항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제38조(녹지의 점용허가 등)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녹지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등 행위를 하려는 자는 공원·녹지관리청에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 하려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제12조 제3항에서는 점용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간 만료 30일 전에 시장에게 그 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점용 또는 사용기간의 연장이 해당 공원 또는 녹지의 관리·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서구 ○○과는 기존의 ○○과 녹지의 점용허가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점용허가변경신청을 받고 이를 검토하여 공원 또는 녹지의 관리·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점용허가 만료일 전까지 변경허가하여야 한다.

그러나 서구 ○○과는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에 대한 변경 허가업무를 처리하면서 점용허가 만료일 기준 최소 0일부터 최대 00일까지 지연처리하는 등 도시공원 및 녹지 점용허가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은

[시정] 지방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도시공원 및 녹지 점용허가의 면허 부여 등의 사실을 관련부서에 통보하여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도시공원 및 녹지 점용허가 시 관련 규정에 따라 면허 부여 등의 사실 통보와 면허세 납부 확인, 변경허가 처리기간 준수 등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사항에 대한 업무 연찬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주의 요구

제 목 축산물 영업자 위생교육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서구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0조(위생교육) 제2항에 따르면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와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처분을 받은 영업자(영업허가가 취소되거나 영업소 폐쇄 명령을 받은 영업자는 제외한다)는 축산물 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종업원은 매년 축산물 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아니한 영업자는 그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교육의 시기 및 방법 등) 제2항에 따라 법 제21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는 6시간, 법 제27조·제28조 또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9조에 따른 처분을 받은 영업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4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한, 같은 법 제47조(과태료) 제4항에 따르면 법 제30조제2항·제3항 및 제5항을 위반하여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영업자로서 그 영업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서구 ○○과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50조의2(위생교육대상자)에 대해 매년 위생교육을 받도록 관리하여야 함에도 위생교육 관리와 과태료 부과 등의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은

[주의]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위생교육 관리와 과태료 부과 등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시정·주의 요구

제 목 공원조성공사 공사감독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서구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인천광역시 서구 ○○과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주민들의 휴식과 정서 함양을 위하여 20**.**.**,~20**.**.**,까지 「ㄷ 조성공사」를 시행·완료하였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40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 의무) 규정에 따르면 공사감독자는 그 감독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은 물론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 제4장 건설공사 감독자 업무 규정에 따라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계약서 그 밖의 관계서류 내용을 숙지하고 그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성실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공사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공사시행 단계별로 확인·검측하고 품질·시공·안전·환경관리에 필요한 감독을 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시행과정에서 설계서가 상이하여 구조물의 구조와 공법의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설계변경과 함께 계약금액을 조정하고 공사가 완료 되었을 때에는 설계도서 및 계약대로 시공이 완료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지침 제6절 기성 및 준공검사 업무 규정에 따라 관계서류를 소속기관 장에게 보고 하는 등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고, 과다 또는 불필요한 공사비의 집행이 없도록 공사감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지침 제148조(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에 따르면 공사감독자는 시공자가 현지역건과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공사비의 절감과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등 설계변경이 필요하다면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이를 검토·확인하고 발주청에 보고 하고, 발주청 방침을 득한 후 시공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 관련규정에 따라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의 변경을 시행하여야 한다.

지침 제162조(준공검사 등의 절차)에 따라 공사가 준공된 때에는 1) 준공검사 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공사현장을 정밀히 확인·점검하여 지적사항을 미리 시정조치 2) 시공자가 제출한 준공검사원을 검토하여 계약대로 시공이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감독조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접수 3) 준공보고서 및 정산설계도서 등을 검토·확인하고 공사목적물이 발주청에 차질 없이 인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서구에서 시행한 ㄷ 조성공사 공사감독자는 공사의 착수, 공사의 시공, 공사의 준공, 공사 준공 후 등 각 단계별로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건설공사 감독자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그런데 서구 ○○과는 ‘ㄷ 조성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ㄱ거푸집(000㎡)으로 설계내역에 반영하고 실제로는 ㄴ거푸집으로 시공하였고, 하수관 하부에 ㄴ 포설(000m)이 반영되었으나 ㄸ로 되메우기 하였음에도 설계변경 없이 준공처리하여 000천 원(제경비포함) 상당의 공사비를 과다 지급하는 등 관련규정의 건설공사 감독자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은

[시정] ㄷ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시공방법 및 자재 변경으로 인한 부당지급액 000천원을 환수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앞으로 건설공사 단계별 시공확인과 준공검사 등 공사감독업무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한 후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업무연찬 및 직원교육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서구 종합감사 결과

[수 범 사 례]

수범사례 1 일상에 편리함을 더하는 ‘소통1번가’

- ❖ 기존의 이용하기 불편하였던 민원시스템, 홈페이지의 사용자 편의성을 증진하고, 모바일 최적화 시스템으로 재구축하여 구민 만족도 제고 및 스마트 행정 구현

□ 배 경

- 지자체 행정 데이터에 대한 낮은 접근성 개선 필요
 - 현재는 모바일 시대이나 서구청을 포함한 대부분의 관공서 홈페이지는 PC 기반으로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이용자 편의성이 매우 낮아, ‘모바일 최적화 웹 기반 공공데이터 제공 플랫폼’ 필요성이 높음
- 복잡하고 답답한 민원시스템에 많은 불편함을 느끼는 주민들
 - 지자체 민원시스템은 대부분 외부의 시스템을 지자체 여건에 맞지않게 그대로 활용함으로써, 주민들은 언제나 복잡하고 불투명한 민원에 불편함을 느낌

□ 사업개요

- 기 간 : 2019.7 ~ 2020.9
- 대 상 : 서구 전 주민
- 방 법 : 웹사이트 개발
- 주요내용
 - 앱을 설치할 필요없이 포털사이트만 검색하면 들어올 수 있으며 쉽고 투명한 민원시스템, 24시간 챗봇 기능을 탑재한 모바일 최적화 공공데이터 플랫폼, **소통1번가**

1 편리한 접근

포털사이트 검색만 하면 들어올 수 있는 웹기반 플랫폼 구축

2 모바일 최적화

모바일 최적 행정데이터 플랫폼, 원터치로 모든 공공데이터 접근

3 민원시스템

간편한 접근, 택배시스템처럼 과정을 알림톡으로 알려주는 민원시스템

4 챗봇

24시간 상담 챗봇, 전국 기초지자체 최초 학습형 인공지능 상담

- 편리한 접근



- 모바일 최적화



· 원터치(플로팅 버튼)로 원하는 정보 한번에 접근



- 내가 원하는 메뉴만 골라서 나만의 메뉴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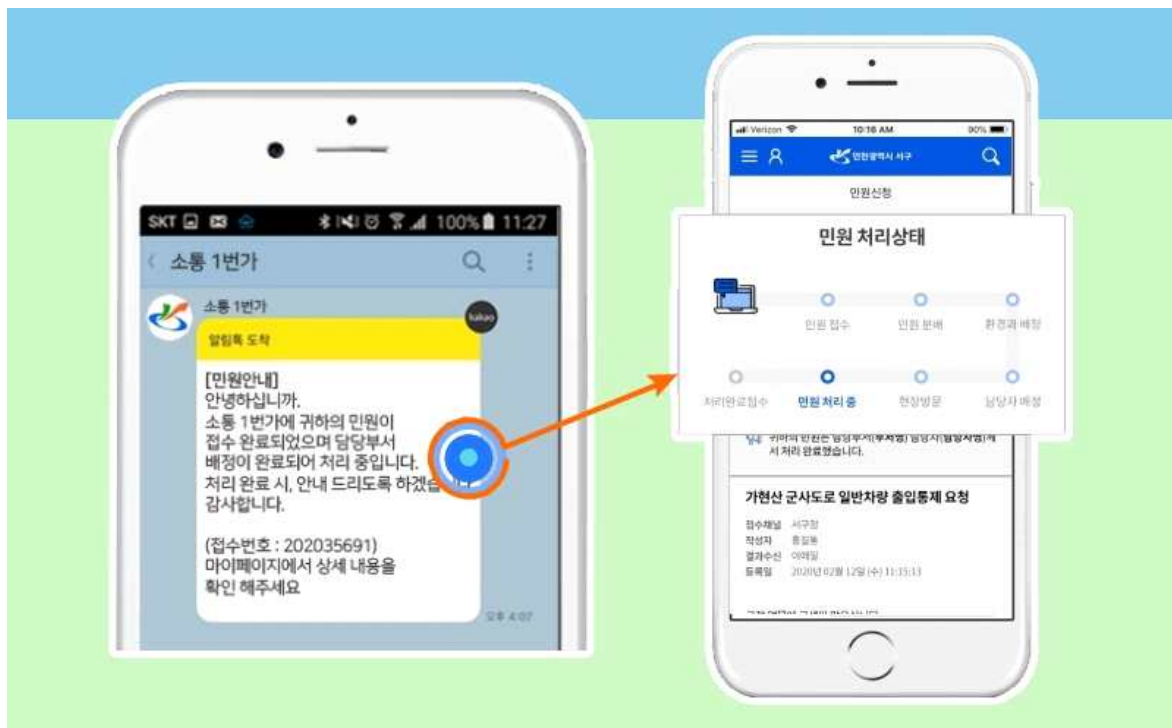


- 간편한 민원신청, 택배배송처럼 민원처리 과정을 안내하는 민원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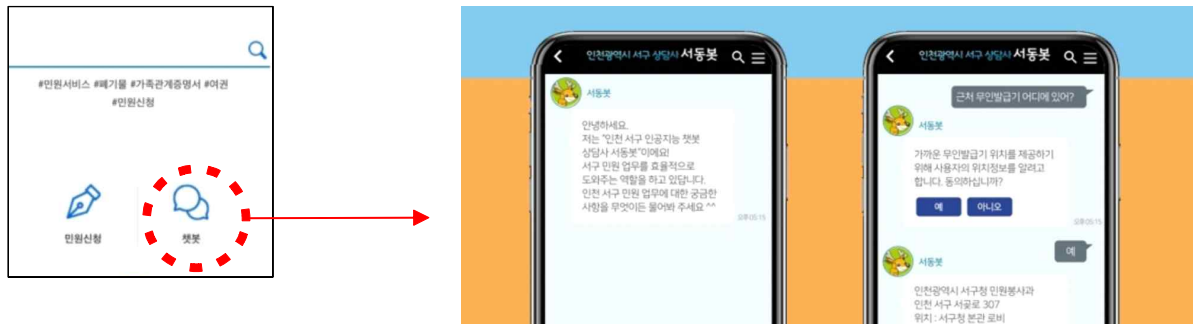
- 넷플릭스와 같은 자동로그인, 민원메뉴 접근성 제고, 자체 서버사용 등으로 기존의 민원신청까지 **최소 10단계이상** 걸렸던 민원신청절차를 **3단계 이하로 축소**



- 택배시스템처럼 민원처리의 모든상황을 카카오톡으로 알려줌



- 24시간 민원 상담 인공지능 챗봇



- 기초자치단체중 전국 최초 학습형 인공지능 챗봇

- 주민 챗봇 상담 중 미답변 및 문제가 있는 답변을 시스템이 자동으로 선정, 수정하도록 서포트하여 챗봇이 지식을 구축하고 주민들이 더 똑똑한 챗봇과 상담할 수 있도록 함



□ 추진사항

- 구축 계획 수립 : 2019.04
- 본 개발 착수 : 2019.07
- 착수보고회 개최 : 2019.09
- 설계단계 감리 수행 : 2020.04
- 준 공 : 2020.09
- 완료단계 감리 수행 : 2020.10
- 완료보고회 : 2020.10
- 정식 오픈 : 2020.11

□ 수범사항

- 2021 웹 어워드 코리아 ‘지방자치기관’ 부문 대상

□ 언론보도사항

시 대 일 보 2021년 12월 31일 금요일 005면 인천

서구 홈페이지 ‘소통1번가’ 플랫폼으로
‘2021 웹어워드코리아’ 지방자치기관 대상 수상

인천 서구(구청장 이재현)는 ‘2021 웹어워드코리아’에서 서구 홈페이지 ‘소통1번가’가 지방자치기관 분야 대상을 수상했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18회차를 맞는 ‘웹어워드코리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사)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에서 주최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 매일경제 등에서 후원하는 국내 최고 웹 평가 시상식이다.

서구는 이번 수상을 통해 ‘소통1번가’가 구민과의 소통을 최우선 가치로 두며 혁신적이고 모범적인 웹사이트 운영사례로 대외적인 인정을 받았다. 아울러 기존 딱딱하고 일방향 정보 제공의 공공기관 홈페이지가 아닌 양방향 소통을 위해 변화를 시도하며 온라인 소통 성과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게 됐다고 전했다.

출범 전부터 구민, 직원, 전문가와 여러 차례 간담회를 진행하며 다양한 시각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해 2020년 11월 오픈한 ‘소통1번가’는 ‘쉽고 투명한 민원 신청 시스템’, ‘모바일 최적화’, ‘인공지능 챗봇 서비스’ 등을 선보였고 올해 11월에는 전국 최초 음성 기반 플랫폼을 선보이며 ‘소통1번가플러스’로 한 단계 도약 후 계속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한편 이번 평가는 11월부터 12월 초까지 인터넷 전문가 평가위원단 3,800여 명, 전문평가위원 등이 콘텐츠, 서비스, 기술, 마케팅, UI디자인, 비주얼디자인 6개 부문 18개 평가 지표 점수를 종합해 우수기관을 선정했다.

이날 열린 수여식에서 이재현 서구청장은 “비대면 소통의 중요성이 나날이 증대되는 가운데 ‘구민과 소통의 문’인 ‘소통1번가’ 수상은 그 의미가 매우 크다”며 “앞으로도 구민과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나가고 구민의 ‘편리미엄’으로 큰 역할을 해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웅렬기자 wkoong114@hanmail.net

수범사례 2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통한 재정민주주의 실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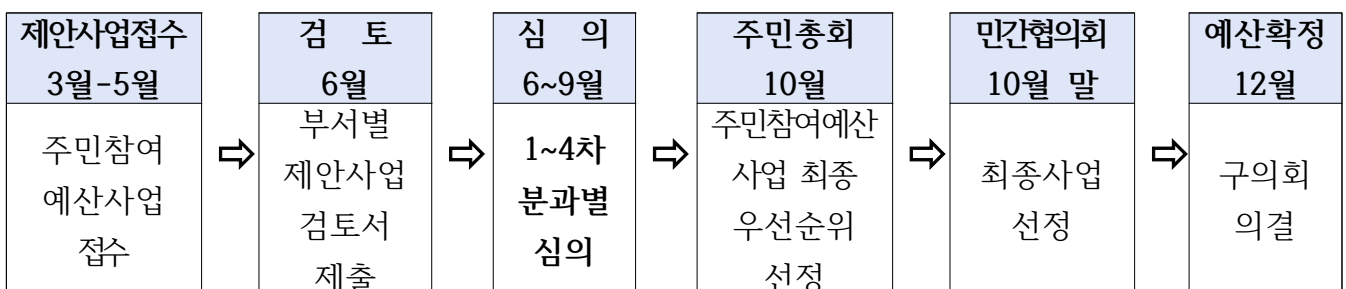
- ❖ 주민참여예산 확대 추진과 관련하여 예산편성 등 예산 전 과정에 주민참여 활성화를 통한 주민의 재정참여를 보장하고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로 주민이 참여하여 이루는 재정민주주의 실현
- ※ 2021년 행정안전부 주민참여예산제 우수 자치단체 선정

□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과정에서의 주민참여 절차)
-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주민참여예산 확대 추진과 관련하여 예산 전 과정에 주민 참여 활성화를 통해 재정운영의 책임성 강화 및 재정민주주의 실현
- 사업기간 : 2021. 1. ~ 12.
- 사업규모 : 111억원 ※2022년 주민참여예산
- 사업유형 : 일반참여형, 주민자치회형, 주민숙원사업, 그 외분야 (마을 공동체지원사업, 지속사업 포함)
- 운영절차



- 주요 사업내용
 - 주민참여예산 예산학교 운영

-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접수 및 심의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지원협의회, 민관협의회 운영
- 주민참여예산 주민총회, 공청회 운영
- 동 주민자치회 2021년 자치사업 실행
- 동 주민자치회 2022년 자치사업 발굴
- 동별 실링 설정 : 구비 30,000천원, 시비 50,000천원(9개동)

□ 추진사항

- 2021. 1월 : 2021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수립
- 2021. 1월~12월 : 2021년 주민참여예산사업 추진
 - 일반참여형 사업 : 46건, 2,192,200천원
 - 주민자치회형 사업 : 42건, 203,103천원
- 2021. 2월 : 주민참여예산 기본교육(10회) 실시
- 2021. 3월~5월 : 2021년 주민제안사업 집중 접수
 - 일반참여형 사업 : 187건, 13,702,794천원
 - 주민자치회형 사업 : 140건, 1,269,323천원
- 2021. 2월~9월 : 2021년 주민참여예산 지원협의회 개최 (1차~3차)
- 2021. 3월 : 제5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공개모집, 공개추첨, 위촉
- 2021. 4월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아동청소년분과 공개모집·구성(15명)
- 2021. 4월~6월 : 주민참여예산 심화교육(3회), 맞춤형 교육(아동청소년 교육, 공무원교육,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임원교육) 실시
- 2021. 6월~8월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분과위원회 심의 (1차~4차)
- 2021. 9월~10월 : 2021년 주민참여예산 온라인 주민투표 실시
- 2021. 10월 : 2021년 주민참여예산 온라인 주민총회 실시
 - 일반참여형 사업 : 92건, 3,655,645천원
 - 주민자치회형 사업 : 120건, 1,068,971천원
 - 주민숙원사업 : 7건, 2,270,700천원
 - 2억이상 구비사업 : 4건, 3,919,000천원
- 2021. 10월 : 2022년 주민참여예산 편성을 위한 민관협의회 개최
- 2021. 12월 : 2021년 행정안전부 주민참여예산제 우수 자치단체 선정
 - 행정안전부장관상 수상, 특별교부세 6,000만원 교부

□ 수범사항

① 주민참여예산 규모 확대

- 2020년 25.9억 → 2021년 111.8억 330% ↑
- 2021년 주민참여예산 (* 2022년 예산)

(단위:천 원)

유 형		사 업 수	사 업 비
일반참여형		92	3,655,645
주민숙원형		7	2,270,700
주민자치회형		120	1,068,971
그 외 분야	마을공동체지원사업	미정	264,000
	2억 이상	4	3,919,000

②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기능 강화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공개모집 · 추첨제도 도입 : 2020.12. 조례 개정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수 : ' 20년 50명 → ' 21년 115명 ↑ 130%
- 분과구성 : ' 20년 4개 분과 → ' 21년 7개분과 ↑ 3개 분과
- 기능강화 : ' 20년 주민제안사업 심의 · 검토 기능 → ' 21년 주민제안사업 심의 · 검토, 주민참여예산사업 모니터링 실시, 구비 2억이상 주요사업에 의견제출 기능 강화

③ 주민참여계층 다양화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시 청년, 청소년,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의 참여 보장 (' 20.12.21. 조례 개정 · 신설)

연도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위원(수)	남녀구성비율(%)		연령별 분포(%)			
		남	여	30대 이하	40대	50대	60대 이상
2020년	50	44	56	1	5	18	26
2021년	115	60	55	27	24	39	25

- 2021년 아동청소년분과 신설

성별		남자	여자
인원			
총 15명		9명	6명

나이 인원	11세	12세	13세	14세	15세	16세	17세
총 15명	3명	1명	2명	2명	3명	0명	4명

- 활동 : 1차~3차 2021년 주민제안사업 심의 추진
- 아동청소년 제안·심의 사업목록 : 15건, 1,266,200천원

- 주민참여예산제 청년계층 활동 활성화

- 제5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청년위원 10% 우선 선발
- 서구 청년정책위원회 연계하여 의제발굴
- 청년층 제안·심의 사업목록 : 4건, 1,918,700천원

④ 예산학교 활성화

- 예산학교 참여자 : 2020년 90명 → 2021년 1,190명 92% ↑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기본교육 이수제 신설
- 주민참여예산 전문기구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와 업무협약으로 체계적·전문적 예산교육 실시
- 교육 운영 시간 다양화 : 평일 오전반·오후반·저녁반, 주말반 개설
- 수준별·맞춤형 교육 실시 : 기본교육, 심화교육, 사업담당자(공무원)전체교육, 아동 예산학교 실시

⑤ 주민참여예산 홍보 강화로 주민참여 활성화

- 온라인 홍보 참여자 수 : ‘20년 2,777회 → ’ 21년 3,556회 11% ↑
- 홍보 수단 다양화
 - 홈페이지, 현수막, 포스터, 유튜브, 블로그, 홍보영상 등 양방향 매체 적극 활용
- 주민참여 활성화
 - 예산학교 수료자 수 : ‘20년 90명 → ’ 21년 1,190명 92% ↑
 - 사업제안자 수 : ‘20년 121명 → ’ 21년 296명 59% ↑
 - 숙의과정 참여자 수 : ‘20년 368명 → ’ 21년 1,270명 71% ↑
 - 주민투표 수 : ’ 20년 3,378명 → ‘21년 20,010명 83% ↑
- 아동청소년 대상 홍보영상 제작, 활용

⑥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위한 주민의견 수렴

- 예산과정에 주민의견 수렴 보장 ('20.12.21. 조례 개정 · 신설)
- 참여인원 : 총1,571명 (온라인: 1,079명, 오프라인: 492명)
- 2021년 주민참여예산제 평가 : 우수 52%, 보통 37%
-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위한 요구사항 : 교육확대 58%, 홍보확대 38%

□ 언론보도사항

○ 방송보도



○ 신문보도

<p>일간경기 2021년 2월 2일 화요일 009면 지역 서구, 참여예산학교 기본교육과정 개설</p> <p>서구는 올해 주민참여예산 제도의 시행에 앞서 지방재정과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높이고자 '2021 참여예산학교 기본교육'을 개설할 예정이다.</p> <p>참여예산학교 기본교육 대상은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자, 서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관내 영업소·사업체 및 비영리 법인·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이다. 특히, 올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재구성을 앞두고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주민은 기본교육을 이수해야 한다.</p> <p>교육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줌(ZOOM) 앱을 통해 이뤄진다. 오는 23·25·27일 3일에 걸쳐 8회차로 진행되며, 일반 강의와 토론식 수업을 병행할 예정이다.</p> <p>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접수하거나 소통1번가 새 소식란에서 '참여예산' 검색 후 서식을 받아 이메일이나 팩스로도 접수할 수 있다. 교육 시간과 상세한 내용은 소통1번가에서 확인할 수 있다.</p> <p>향후 주민참여예산위원 재구성 후 주민참여예산위원을 대상으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전문심화 교육 및 맞춤형 교육이 이뤄질 예정이다. 안종삼 기자</p> <p>참여예산학교 기본교육과정 개설</p>	<p>일간경기 2021년 3월 3일 수요일 010면 지역 서구,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p> <p>서구는 1일부터 오는 5월31일까지 올해 주민참여예산 제안 사업을 공모한다.</p> <p>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의 전 과정에 주민 참여를 활성화해 주민의 재정 참여를 보장하고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제도다. 이 중 제안사업 공모는 예산의 편성과정 중 가장 첫 단계에 해당하는 예산편성 과정에 참가하는 과정이다. 주민 누구나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에 필요한 사업,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생활밀착형 사업,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 등을 제안할 수 있다.</p> <p>다만 관련 법령이나 조례 등에 위반되는 사업, 대규모 시설 투자사업 및 계속사업, 타 기관 소관 사업, 투자 효과가 일부 지역·단체·개인에 국한되는 사업, 개인이나 법인의 사업체 이익을 위한 사업, 동이나 자생 단체 주관으로 매년 진행되는 축제·행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관련 사업 등은 공모사업에서 제외된다.</p> <p>주민참여예산 사업에 공모를 원하는 주민은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내려받은 후 구청 공동체협치과,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안종삼 기자</p> <p>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p>
--	--

현대일보

2021년 5월 17일 월요일 005면 인천
서구-인천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협약

인천 서구는 지난 13일 인천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와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서구는 인천시에서 추진하는 인천시 예산학교 운영과 참여예산 시민네트워크 구축 등에 협력하고, 인천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는 서구 예산학교 운영 기와 컨설팅 및 강사단 지원에 협력하는 내용이 협약서에 담겼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인천시와 서구는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위한 공동 협력체계를 구성해 참여예산 시민공동체 네트워크를 구축할 예정이며, 다양한 계층의 주민 의견을 받

영해 투명하고 공정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이태현 서구청장은 "인천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와 공동 협력체계를 구성함으로써 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주민 관심을 높이고 참여 저변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구는 지난달 9일 제5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위원을 위촉했으며, 분과위원회 활동을 통해 주민 참여예산 사업 제안, 심의 및 검토과정에 들어갈 예정이다.

김원희 기자 kangy8240@naver.com

현대일보

2021년 6월 15일 화요일 005면 인천
서구, 주민참여예산 담당자 교육

모니터링·주민 숙의과정 등

인천 서구는 지난 11일 주민참여예산 제안서의 사업부서 검토과정을 앞두고 주민참여예산 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서구는 앞서 3월부터 5월까지 이뤄진 주민참여예산 사업 집중 접수 기간에 총 191여 건의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접수했으며, 사업 담당자들은 약 2주간 접수된 제안 사업의 사업 검토를 하게 된다.

이번 교육에서 주민참여예산 사업 담당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일반 이해를 포함한 사업 검토 방법과 모니터링과 주민 숙의과정 방법에 대한 교육이 이뤄졌다. 이번 교육엔 60여 명의 사업 시행 담당자가 참가해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높은 관심을 실감할 했다.

한편 서구는 사업부서의 사업 검토가 완료되는 6월 말부터 본과별 1차 심의에 들어가며, 이 과정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은 사업 제안서와 검토서를 보며 사업의 적정성과 타당성 등 속의·토론 과정에 들어갈 예정이다.

김원희 기자 kangy8240@naver.com

주민참여예산 업무 협약

주민참여예산 담당자 교육

서울매일

2021년 6월 30일 수요일 008면 인천

이광식 기자 / 인천 서구(구청장 이재현)는 주민참여예산 주민제안사업 접수 결과 총 194건의 사업이 접수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전년 접수 67건 대비 127건이 증가한 것으로, 주민참여 열기가 한층 뜨거워져 눈길을 끈다.

서구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60일간 주민참여예산사업 집중 접수 기간을 운영한 바 있다.

주민참여예산 공모 사업은 특정 분야에 편중되지 않고 다양한 분야의 제안이 접수됐으며 제안의 수는 환경안전, 도시관리, 경제교통, 자치행정, 기획소통, 복지문화 순으로 많았다.

서구 주민제안사업 194건 접수

관련 부서 사업 실행가능성 타당성 등 검토 진행

이번에 접수된 194건의 제안사업에 대해 관련 부서에서 사업의 실현 가능성, 타당성 등에 대한 심층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서구는 제안된 사업이 접수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전년 접수 67건 대비 127건이 증가한 것으로, 주민참여 열기가 한층 뜨거워져 눈길을 끈다. 주민참여예산사업 제안자와 사업담당자, 주민참여예산위원의 위원이 참여해 제안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숙의 토론을 진행하게 된다.

숙의 과정을 거쳐 주민제안사업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추가심의를 통해 우선순위 사업을 선정하고, 온라인 주민투표와 주민총회를 거쳐 예산안으로 편성되며 서구의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 예산으로 확정된다.

경인종합일보

2021년 9월 17일 금요일 010면 인천

서구

'주민참여예산 온라인 주민투표' 내달 3일까지 실시

인천 서구가 '2022년 주민참여예산사업 선정'을 위한 온라인 주민투표를 오는 10월 3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온라인 주민투표는 예산편성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으로 온라인 주민투표 홍보영상 송출, 사업별 카드뉴스 제작, 주민제안사업 책자 배포, 이벤트 실시 등을 통해 주민의 접근성을 높이고 보다 많은 주민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자 주민제안사업에 스티커를 붙이는 현장투표 대신 온라인을 통해 주민의 소중한 의견을 받는다.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주민참여예산사업과 관련해 집중 공보를 시행한 결과 194건의 주민제안사업

이 접수됐다. 이후 6월부터 8월까지 소관부서 검토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6개 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투표를 이뤄질 총 79건의 사업을 선정했다.

온라인 주민투표는 서구민이면 누구나 모바일과 PC로 서구청 홈페이지 소문1번가에 접속해 참여할 수 있다. 주민들이 제안한 79건의 사업 중 1인당 20건의 사업을 선택하면 된다.

최종 순위는 온라인 주민투표 결과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사 결과를 합산해 결정된다. 그 결과는 오는 10월 15일 오후 3시에 진행되는 '투표! 서구 주민총회'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서구청 유튜브 채널인 서구TV에 접속하면 참여 가능하다.

박현남 기자 / jonghapnews.com

참여예산 사업 194건 접수

주민참여예산 온라인 투표

경인종합일보

2021년 10월 19일 화요일 012면 인천

서구

내년 주민참여예산 사업 선정 '주민총회' 개최



2021. 10. 15(금) 15시

인천 서구는 지난 15일 내년도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확정하는 비대면 온라인 방식의 주민참여예산 주민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주민총회는 주민참여예산 운영 결과보고, 우수 실행 사업 소개, 주민참여예산위원의 활동 소개, 서구청장과의 대화, 2022년도 사업 선정 결과 발표 등으로 진행됐다.

서구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주민참여예산사업 집중 공보를 시행한 결과 187건의 주민제안사업을 접수했다. 이후 6월부터 8월까지 소관부

재정민주주의 촉진인 주민총회를 함께 하지 못하는 아쉬움과 올 한해 활동한 소감을 영상으로 전했다.

서구청장과의 대화시간에는 △민선7기 주민참여예산 성과와 발전 방향 △주민참여예산제에 다양한 계층 참여 방안 △주민참여예산제 발전에 대한 기대를 밝혔다.

이런 총회를 거쳐 확정된 사업은 일반참여형 99건 37.6억 원이며 특

내외일보

2021년 12월 31일 금요일 003면 지역

서구, 행안부 '2021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평가' '우수'

3년간 200억 이상 사업비 편성 등 규모 확대 위원회 강화 '호평'



2021년 주민참여예산제 행정안전부 평가 인천서구, '우수 자치단체' 선정

인천 서구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2021년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평가' 종합성 평가에서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됐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구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1년 주민참여예산제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됐으며,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장을 수상하고 예산·재정·기획·자치행정부에 대해 감사패를 수여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서구는 예산성 과정에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예산·재정·자치행정부에 대해 감사패를 수여할 예정이다. 그 결과로는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된 서구는 3년간 200억 이상 사업비 편성 등 규모 확대 위원회 강화 '호평'을 받았다.

온라인 주민총회

운영평가 우수

인천일보

2021년 12월 14일 화요일 012면 메트로

편성부터 결산까지 민심 반영 '공감 행정'서구 주민참여예산

2012년 첫 시행 후 올해 10년차인 선7기, 전 과정 참여 제도 개편 3년 동안 200억 이상 편성 눈길

창구 다양화로 전 계층 통합 유도 별도 위원회 구성 각계 의견 청취 청년·아동·청소년 사업단 18개

구·막대한 재원, 인원 확보 지원 시종일관 제안자와 끝없는 소통 구청장 "지방자치와 멋진 하모니"



2021. 10. 15(금) 15시

서구는 지난 10월 15일 2022년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확정하는 주민총회를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했다.

기획보도

수범사례 3 내 손안의 작은 기부 플랫폼 「서로도움」

- ❖ 착한소비를 통해 소상공인을 위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캐시백 또는 지역화폐를 주변의 이웃과 나눔으로써 작은 기부를 통해 이웃이 이웃을 돕는 기부문화 확산 선도

□ 추진근거

- 복지정책과-54573(2020.11.05.)

□ 사업개요

- (사업명) 내 손안의 작은 기부 플랫폼 「서로도움」
- (모금주관)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 * 2020. 6. 26. 업무협약 완료
- (운영대행) (주)코나아이 * 2020. 12. 07. 업무협약 완료
- (모금방식) 사례유형별, 개인별, 테마별 모금방식
- (기부방식) 지역화폐(충전금 또는 캐시백)으로 기부
- (모금기간) 연중 모금사업 추진
- (소요예산) 비예산
- (추진비전)

목표	가치소비와 착한기부를 통한 지역 공동체 활성화
추진과제	① 소비가 기부로 이어지는 생활 속 기부문화 확산
	② 주민들의 접근성과 관심을 높이는 기부방식 운영
	③ 기부금 사용의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

- (추진내용)
 - 1차/2차 업무협약
 - ▶ (1차/2차 협약내용) 서구지역화폐 [서로e음] 플랫폼 내 기부기능인 [서로도움] 운영을 위한 상호협력 및 추진체계 구축
 - ▶ (협약기관) 인천광역시 서구,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 (주)코나아이
 - ▶ (협약식) 2020. 6. 26.(금) / 2020. 12. 7.(월)

- 서구 전지역사회(서로소움) 기부가능 운영을 위한 -
『서로소움』 업무 협약서

인원장역시 서구(이하 인원서구)와 인원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인원모금회)는 서구 전지역사회(서로소움) 플랫폼 내 기부가능한 『서로소움』 운영을 위해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하고자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협약은 서구 전지역사회(서로소움) 플랫폼 내 기부 가능한 서로소움 활성화와 관련된 지역공동체 강화를 위해 협력이 필요하고, 협력을 통해 서로소움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협력사항) 양 기관은 아래 각 조항에 상호 협력하며, 그 외 별의 시책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상호 협의에 의한다.

가. 기부금 모집은 인원모금회에서 하며, 모금원 제원은 서로소움 내 기부금 및 복지혜택자에게 지원하도록 한다.

나. 서로소움을 통해 모금된 제원은 원금계원을 원칙으로 하며 경우에 따라 상호 합의에 의해 서로소움 계사로 지급 할 수 있다.

다. 인원서구는 지원에 필요한 사례 및 자료를 발굴하여 선정한다.

라. 인원모금회는 인원서구가 신청한 사례 및 자료에 대해 신속하게 제공한다.

제3조 (협력의 노력 및 발표) 본 협약은 발의제출일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속 유지하며, 향후 필요 기간별 또는 대외활동 변경 시 협약을 개정하지 아니하고 별첨제출 협약을 개정 운영한다.

제4조 (기타사항)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협의 하에 인원서구와 인원모금회 각 시행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존한다.

2020년 6월 26일

인원장역시 서구장 인원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이재현 김재현

『서로소움』 업무 협약식

2020. 6. 26 (금) 인원장역시 서구

www.seoinceon.kr 800X358

인원속의 서구·내 손 안의 기부 플랫폼, 서로소움 『서로소움』이 온다! 내용 | 인원

서로소움과 함께하는 이웃사랑 실천
『서로소움』 사업 추진에 따른 업무협약서

다름 이해 "지구"라는 뜻이다. 그러나 지구에서 "지구"라는 뜻이다. 인원지역사회공동모금회(이하 "모금회")는 인원지역사회 공동체 내 기부가능한 『서로소움』을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이하 "본 협약"이라 함은 이 협약서와 별첨된 부속을 말한다.)

협조사항
본 협약은 인원과 공동체를 함께 하는 모금회 회원의 자발적 참여와 지원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협조사항
본 협약은 인원과 공동체를 함께 하는 모금회 회원의 자발적 참여와 지원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협조사항
본 협약은 인원과 공동체를 함께 하는 모금회 회원의 자발적 참여와 지원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1. "서로소움" 사업은 인원과 공동체를 함께 하는 모금회 회원의 자발적 참여와 지원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2. "서로소움" 사업은 인원과 공동체를 함께 하는 모금회 회원의 자발적 참여와 지원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3. "서로소움" 사업은 인원과 공동체를 함께 하는 모금회 회원의 자발적 참여와 지원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4. "서로소움" 사업은 인원과 공동체를 함께 하는 모금회 회원의 자발적 참여와 지원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5. "서로소움" 사업은 인원과 공동체를 함께 하는 모금회 회원의 자발적 참여와 지원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6. "서로소움" 사업은 인원과 공동체를 함께 하는 모금회 회원의 자발적 참여와 지원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7. "서로소움" 사업은 인원과 공동체를 함께 하는 모금회 회원의 자발적 참여와 지원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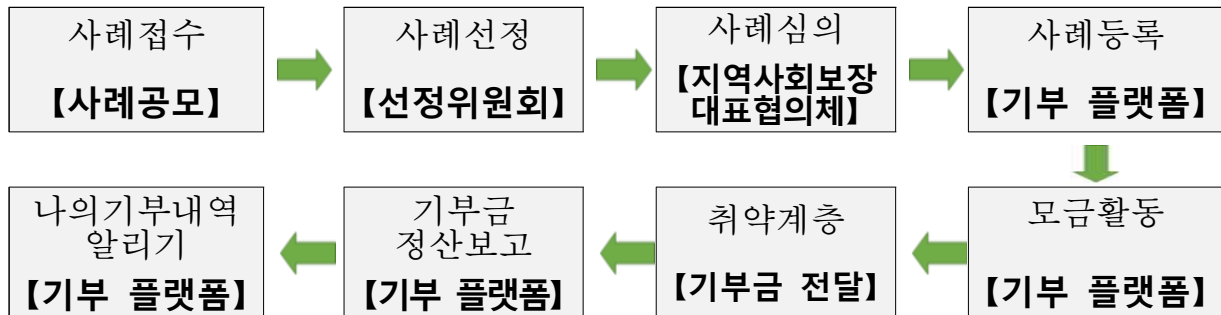
8. "서로소움" 사업은 인원과 공동체를 함께 하는 모금회 회원의 자발적 참여와 지원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9. "서로소움" 사업은 인원과 공동체를 함께 하는 모금회 회원의 자발적 참여와 지원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10. "서로소움" 사업은 인원과 공동체를 함께 하는 모금회 회원의 자발적 참여와 지원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 진행절차 및 위원회 구성

▶ 진행절차




▶ 「서로소움」 사례선정위원회 운영 및 개최

☞ (운영목적) 사례선정의 공정성, 전문성 및 투명성 확보

☞ (인 원) 총 7명

구 분	인 원	구 분	인 원
사회복지 전문가	3명	사회복지공동모금회	1명
교육전문가	1명	지역사회커뮤니티 전문가	2명

- ▶ (역 할) 공모로 접수된 사례 선정 (적합 여부 및 기부유형 결정)
- ▶ (개최시기) 운영상 중요한 논의가 필요한 경우, 접수된 사례 선정 (적합여부 및 기부유형 결정 등)

구 분	운 영 내 용
<p>제1회 서로도움 사례선정위원회 개최</p> 	<p>□ 제1회 서로도움 사례선정위원회 개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 시) 2020. 12. 08.(화) 10:00 ○ (참 석) 6명 ○ (위원장 선출) 정서연(서구노인복지관장) 위원장 ○ (접수된 사례 선정 심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27건중 의료지원 3건 우선 선정
<p>제2회 서로도움 사례선정위원회 개최</p> 	<p>□ 제2회 서로도움 사례선정위원회 개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 시) 2021. 1. 27.(수) 14:00 ○ (참 석) 위원장 外 위원 3명(7명 중 4명 참석) ○ (내 용) 서로도움추진 경과보고 및 안건심의 ○ (회의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례게시방법은 유형별 또는 테마별 게시 - 접수된 개인사례 7건 선정(교육, 의료, 생계)
<p>제3회 서로도움 사례선정위원회 개최</p> 	<p>□ 제3회 서로도움 사례선정위원회 개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 시) 2021. 7. 7.(수) 16:00 ○ (참 석) 위원장 外 위원 4명(7명 중 5명 참석) ○ (내 용) 서로도움추진 경과보고 및 안건 심의 ○ (회의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로도움 하반기 기획사업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기관 : (사)인천시민재단 ▶ 사 업 명 : 돌봄 사각지대 아동을 위한 행복한 반찬 나눔
<p>제4회 서로도움 사례선정위원회 개최</p> 	<p>제4회 서로도움 사례선정위원회 개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 시) 2021. 11. 17.(수) 10:00 ○ (참 석) 위원장 外 위원 3명(6명 중 4명 참석) ○ (내 용) 서로도움추진 경과보고 및 안건 심의 ○ (회의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로도움 연말 따뜻한 겨울나기 기획사업 선정 - 기획사업 2건/ 개인사례 4건 선정

□ 추진사항

- 서구 지역화폐(서로e음) 서로도움 운영 계획(안)수립 2020.6.23.(화)
-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 협약식 2020.6.26.(금)
- 서로도움사례선정위원회 구성 2020.11.26.(금)
- 저소득 개인 지원 사례 공모 공고 2020.11.18(수) ~ 12.3.(목)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코나아이, 서구청 3자 협약 2020.12.7.(월)
- 서로e음 플랫폼 내 서로도움 오픈 2020.12.7.(월)
- 인천 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 2020.12.8.(화)
- 서로e음 플랫폼 내 서로도움 모금개시 2020.12.9.(수)
- 서로도움 1차~6차까지 모금 및 전달완료 2020.12.9. ~ 2021.9.8.
- 서로도움 정기기부 모금 완료 2021.7.1. ~ 2021.11.30.
- 서로도움 7차 ‘따뜻한 겨울나기’ 모금추진중 2021.11.23.~

□ 수범사항

- 1차 서로도움 모금 : 복지사각지대 저소득가구 8가구 지원
 - 생계 · 의료 · 교육분야 모금
 - ▶ (집중모금기간) 2020.12.9.~ 2021.1.31.(54일)
 - ▶ (총 모금액) 12,009,755원, (기부 참여인원) 1,152명
- 2차 서로도움 모금 : 화재피해 사회적 기업 물품구매 지원
 - 기업 생산품 구매로 장애인시설 복사용지 및 롤화장지 지원
 - ▶ (집중모금기간) 2021.3.10.~ 2021.3.26.(17일)
 - ▶ (총 모금액) 2,364,050원, (기부참여인원) 242명
- 3차 서로도움 모금 : 복지사각지대 저소득 12가구 지원
 - 생계 · 의료 · 교육 분야 모금
 - ▶ (집중모금기간) 2021.3.27.~ 2021.5.31.(65일)
 - ▶ (총 모금액) 7,687,147원, (기부참여인원) 826명
- 4차 서로도움 모금 : 국가유공자 중 저소득 지원
 - 저소득 국가유공자 3가구 생계비 지원
 - ▶ (집중모금기간) 2021.6.7.~ 2021.6.30.(24일)
 - ▶ (총 모금액) 750,655원, (기부참여인원) 103명

○ 5차 서로도움 모금 : 행복한 반찬나눔 프로젝트

- 돌봄사각지대에 놓인 지역아동센터 대기 아동 반찬 지원
 - ▶ (집중모금기간) 2021.7.12.~2021.8.31.(51일)
 - ▶ (총 모금액) 7,125,000원, (기부참여인원) 604명

○ 6차 서로도움 모금 : 한가위 정[情]나눔 지원

- 저소득 독거어르신 모듬전 3종세트 120가구 지원
 - ▶ (집중모금기간) 2021.8.9.~ 2021.8.31.(23일)
 - ▶ (총 모금액) 1,285,590원, (기부참여인원) 154명

○ 모금 현황(21년 12월 31일기준)



□ 언론보도사항

보도일	보 도 내 용	언론사
20.12.7	클릭한번에 기부동참.. 서구 서로도움 오픈	경기일보
21.3.16	서구 화재피해 사회적기업 돕기 나서	아시아일보
21.7.14	서구 서로이음 기부 플랫폼 결식 아동에 반찬 나눔	기호일보
21.9.14	추석연휴 나눔 서로도움 눈길, 기획모금사업 100%달성	현대일보
21.11.24	서구 겨울나기 서로도움 23일부터 모금활동 돌입	경인일보
21.11.30	지역화폐 캐시백으로 이웃사랑 서구, 지방자치 정책대상 '최우수'	인천일보

경기일보

2020년 12월 7일 월요일 012면 인천

클릭 한 번에 기부 동참... 서구 '서로도움' 오픈

서로e음에 기부 가능 탑재 생활 속 나눔문화 접근성!

인천 서구가 지역화폐 '서로e음'의 열풍을 공동체와 나눔의 가치를 담아내는 공동체 플랫폼으로 발전시킨다. 구는 서로e음 플랫폼에 기부 기능을 탑재한 '서로도움'을 7일 본격적으로 선보인다고 6일 밝혔다.

서로e음 시즌3의 일환인 '서로도움'은 누구나 지역화폐 애플리케이션(앱)에서 클릭 1번으로 손쉽게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이다. 나눔 문화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기부문화가

확진할 수 있도록 한다는데 그 의미를 담고 있다. 앞서 구는 시즌1 서로e음 지역화폐 도입 후 38만명의 가입자와 9천 800억원이라는 발행액 기록을 썼다. 이어 시즌2에서는 전국 최초의 공공 배달앱인 '배달서구'와 온라인돌봄 남남서구, 온라인서구 등 중소기업과 구민이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이기도 했다.

이번 기부 문화 확산 플랫폼은 이재현 구청장이 시즌1, 2때부터 강조했던 구의 핵심 모델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 지난 8월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서로도움' 업무협약을 하고, 구-모금회-코나이(한글)

자 협약을 통해 사업추진 체계를 완성했다.

서로도움은 서로e음 앱에서 서로도움을 클릭하면 후원 중인 기부사연을 보고 도움을 주고 싶은 이웃에게 기부하기를 누르면 기부할 수 있다. 모금한 금액은 선정 사례자에게 지원하며 인천모금회를 통해 영수증 처리도 할 수 있다.

내년 1월말까지는 1차 모금기간이며, 이 기간 동안 기부금은 선명절 전 대상자에게 전달한다.

이 구청장은 "이제 지역화폐 안에 공동체의 가치를 담아내는 새로운 도전에 나서려한다"며 구민의 참여를 부탁했다. 김경희기자

아시아일보

2021년 3월 16일 화요일 010면 지방

서구, 화재 피해 사회적기업 돕기 나서

전체 직원 90% 취약계층으로 구성... '서로도움' 통해 모금활동 전개

서구의 나눔 플랫폼 '서로도움'이 화재로 피해를 입은 사회적기업에 도움이 되고자 따뜻한 기쁨의 힘을 발휘한다. 이웃이 이웃을 돕는 진정한 나눔이 터치로 이뤄지는 내 손안의 기부를 만나 온정을 퍼트리고 있다.

다양한 아픔을 품은 이웃이 서로도움을 통해 삶의 희망을 찾아가는 가운데 최근에도 가슴을 먹먹하게 하는 이웃의 이야기가 서로도움에 들끓고, 화랑의 불씨를 피우게 했다.

중증 장애인 생산품 사설(복사용지, 화장지)이자 사회적기업인 한국근로장애인협회와 그 주안점으로 현재 직원 중 무려 90%가 장애인들 비록 어려운, 다문화인 등 취약계층으로 구성되어있다. 평소 관내 사회적기업 중에서도 모범사례로 꼽힐만한 경실남 기업으로 주목받는 곳이기도 하다. 그러한 중 안타깝게도

지난 2일 근무시간에 화재가 발생, 화장지 생산공장과 창고가 전소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됐다.

구는 해당 사연을 접하고 사회적기업의 어려움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최대한 빨리 기업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다각도의 행정적인 지원을 검토했다. 더불어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서로도움에 피해 기업 사재를 채우고 모금활동을 시작했다. 모금은 이달 10일부터 30일까지 17일간 500만원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지난해 12월 서로도움 오픈 당시 1호 기부자로 나서며 서로도움 활성화에 앞장선 이재현 구청장 역시 이번 모금에 동참했다. 이와 함께 서구사회복지협의회와 및 서구청 직원들도 모금에 함께하며 따뜻한 손길들이어가고 있다.

서로도움을 통해 모금된 금액은 기업이 물품을 구매하는 것이 곧 기

부'라는 한국근로장애인협회 윤기상 대표의 뜻에 따라, 지역 복지기관인 민들레지역복지에서 한국근로장애인협회의 생산품을 구매, 관내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구는 지난해 12월 초 서로도움에 의뢰서 등을寄해 지금까지 8건을 대상으로 1,200만원의 기부금을 모아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했다.

이재현 구청장은 "우리의 정성을 모아 어려움에 처한 기업에 돕는 것은 그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일자리를 지켜주는 일이고, 나아가 기업에 화해 지역경제가 살아나는 선순환에 참여하는 매우 뜻깊은 일"이라며 "앞으로도 도움이 손길이 필요한 다양한 분야를 발굴해 서로도움을 통한 기적이 일상이 되는 서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배용환 기자

경기일보 20.12.7(월)

아시아일보 (2021.3.16.)

기호일보

2021년 7월 14일 수요일 017면 사람

서구 서로e음 기부 플랫폼 결식 아동에 반한 나눔



인천서구는 서로e음 기부 플랫폼 '서로도움'에서 '동반 시작지대 아동을 위한 행복찬 반찬 나눔' 사업을 정기기부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지역아동센터 30개소 임소 대가자 중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을 선별해 월 3~4회 반찬 및 간식을 구매해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구는 지난달 25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 신청 공모를 진행했고, 접수된 사업은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 타당성 검토 완료 후 '서로도움'사례선정위원회' 논의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사업은 8월1일(수)부터 시작된다.

기부 참여는 서로e음 앱에서 '서로도움' 메뉴를 선택한 뒤 '일시기부'와 '정기기부'를 선택할 수 있다. 정기기부는 사업 종료 시까지 매월 5천 원씩을 기부할 수 있다.

최성철 기자 csc@khihoilbo.co.kr

현대일보

2021년 9월 14일 화요일 006면 인천

추석연휴 나눔 '서로도움' 눈길 서구, 기획 모금사업 100% 달성

결식아동 반찬 지원·흙흙어르신 먹거리 나눔 등

인천 서구는 서로e음 기부 플랫폼 '서로도움'에서 추진한 '행복한 반찬나눔' 사업과 '한가위 정나눔, 마음 따뜻한 전나눔' 사업에 대한 모금을 지난달 31일까지 마감하고 모금액을 전달했다고 13일 밝혔다.

'행복한 반찬나눔' 사업에는 총 604명이 기부해 동참해 7백여만 원을 모금했다. 이를 통해 구는 지역아동센터 수요조사에 시행하고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에게 월 1~2회에 걸쳐 반찬 및 간식을 지원할 예정이다.

명절을 맞아 준비한 '한가위 정나눔, 마음 따뜻한 전나눔' 기획사업도 지난달까지 154명이 동참해 130여만 원을 모금했다. 사업수행을 맡은 김단노인복지

관은 지난8일 독거노인 120가구에 명절 음식을 나누는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앞서 구는 지난해 12월 서로e음 내에 기부 플랫폼 '서로도움'을 마련하고 총 6차례에 걸쳐 저소득 23가구 지원, 화재피해기업 물품구매지원 등 모금사업을 진행했다. 현재까지 총 3,081명이 참여해 3천1백여만 원을 모금했다.

이재현 서구청장은 "3천여 명이 넘는 주민이 기부에 동참하는 등 서로도움은 지역 내 공동체 가치를 대표하는 콘텐츠로 자리를 잡으며 기적을 이어나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곳에 다양한 공동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인천/김종희 기자 kangjh240@naver.com

기호일보 (2021.7.14.)

현대일보 (2021.9.14.)

경인일보

2021년 11월 24일 수요일 011면 지역

서구 겨울나기 '서로도움'

23일부터 모금 활동 돌입

인천 서구가 지역 화폐인 '서로도움'내 기부 기능이 '서로도움'을 활용한 '따뜻한 겨울나기' 모금 활동을 23일부터 시작했다.

서구는 내년 1월20일까지 1천400만 원을 목표로 모금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모금 활동에서 모인 기부금액은 가정폭력 피해 가정 등 저소득층 4가구에 지원될 예정이다. 흙흙노인과 함께하는 한과 만들기와 다문화가정·한부모가정에 떡을 나누는 사업에도 쓰인다.

이재현 서구청장은 "지역사회에 온기를 더해주는 서로도움에 많은 주민이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김주엽기자 kiy86@kyeongin.com

경기일보

2021년 11월 30일 화요일 012면 인천

지역화폐 캐시백으로 이웃사랑 서구, 지방자치 정책대상 '최우수'

전국 최초 기부 플랫폼 선배
주민 참여 3천289만원 모금

인천 서구가 전국 최초로 지난해 선보인 지역화폐 '서로도움'의 기부 플랫폼 '서로도움'이 '제6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정책대상'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29일 구에 따르면 '공동체와 나눔의 가치'를 담은 '서로도움'은 서로e음을 이용하면서 쌓은 캐시백으로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돕도록 만든 플랫폼이다. 구는 기존 서로e음 플랫폼에 기부 기능을 추가해 주민들의 접근을 편리하게 했다. 구는 1년 동안 '서로도움'으로 일시기부 6차례, 정기기부 1차례 등 총 7차례의 기부 사연을 발표했다. 현재까지 서로도움에는 3천328명의 주민이 참여했고, 3천289만원을 모금했다.

서구 지역화폐 '서로도움'은 공공

배달 앱 '배달서구', 기부플랫폼 '서로도움', 최근 '환경 마일리지'까지 다양한 정책을 '시즌제'로 선보이고 있다. 이 같은 혁신과 노력으로 시즌마다 선보인 정책이 모두 대외기관에서의 수상 성과를 냈다.

'서로도움' 출범 당시 1호 기부자로 나선 이재현 서구청장은 "'서로도움'은 혁신과 창의성이 주민의 따뜻한 마음으로 이어진 서구 대표 정책"이라면서 "이번 정책대상 성과는 주민 어려움이 이뤄낸 성과"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겨울 '따뜻한 겨울나기'사업에도 동참해 지역 사회에 온기를 전하는 '서로도움'을 만들어 가는데 함께 해주실 바란 다"고 했다.

한편, 올해 지방자치 정책대상은 사업목표 및 내용의 적절성, 사업의 혁신 및 창의성, 투명성, 지속가능성 등 심사기준 등을 적용해 226개 지방자치단체가 경쟁했다.

김경희기자

경인일보 (2021.11.24.)

경기일보 (2021.11.30.)

수범사례 4 인천 최초, 상위단계 아동친화도시 조성

❖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기반한 행정시스템의 체계적 운영으로, 아동이 권리를 충분히 누리며 성장할 수 있는 인천 최초 유니세프 상위단계 아동행복도시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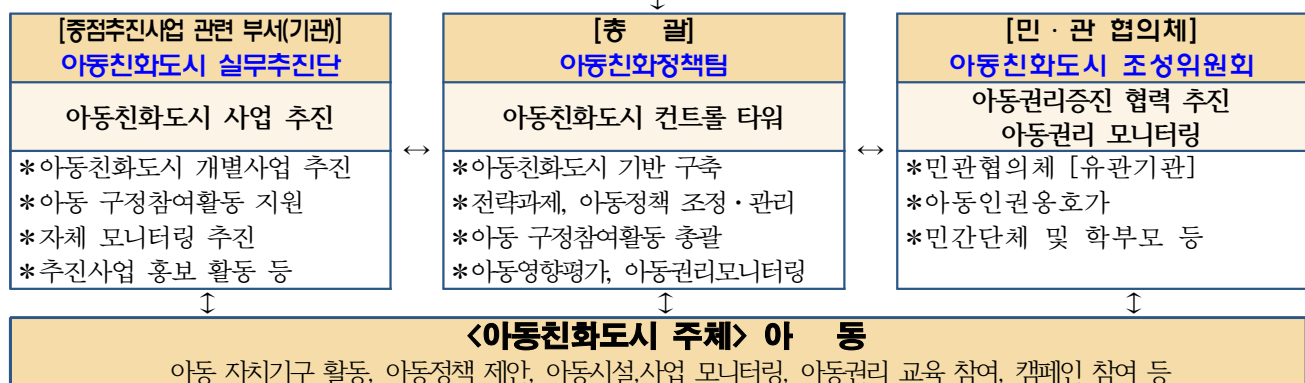
□ 추진근거

- 유엔아동권리협약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 CRC)
- 아동복지법 제4조 제5항 (국가와 자치단체의 책무)
-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차[2017~2020] 서구 아동친화도시 기본계획(2017. 7. 31.)

□ 사업개요

- 기 간: 연중 [2016. 1월 ~ 지속]
- 대 상: 인천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18세 미만 모든 아동
- 사업분야: 아동의 발달주기에 따라 직·간접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가족·보육·문화·여가·체육·건강·안전·복지 등 모든 영역 포괄
- 추진내용
 -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준수, 아동권리 실현될 수 있는 사회 기반 조성
 -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존중하는 아동친화적 행정시스템 구축
 - 아동참여기구의 구정참여활동 지원 강화 및 아동 의견 공론 기회 확대
 -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아동정책 시행 등
- 추진체계

아동이 웃는 도시, 아동과 행복한 서구



□ 추진사항

-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획득 : 2017. 11.
-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개정
- 연차별 아동친화도시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실적 보고 : 2017 ~ 현재
- 아동친화예산서 발행(아동정책예산 분석) : 2016 ~ 현재
- 아동참여기구 어린이참여위원회 구성, 운영 : 2016 ~ 현재
- 아동친화도시 조성위원회 및 아동친화도시 실무추진단 구성 및 운영 : 2017 ~ 현재
- 아동을 위한 독립적 대변인 「옴부즈퍼슨」 운영 : 2017 ~ 현재
-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공동사업 추진 : 2017 ~ 현재
- 제2차(2022~2025)아동친화도시 기본계획 수립 : 2021. 8.
- 인천 최초, 전국 8번째 유니세프 상위단계 아동친화도시 인증 획득 : 2021. 11.

□ 수범사항

- 아동친화도시 행정기반 조성
 - 제1차(2017~2020) 아동친화도시 기본계획에 따른 이행성과 체계 확립
 - 조례 개정, 아동친화도조사, 시민의견수렴, 아동영향평가, 아동친화예산 분석 등 행정기반 조성
- 아동권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아동친화적 행정시스템 구축
 - 아동행복과 “아동친화정책팀”에 아동친화도시 컨트롤타워 권한 부여
 - 민관협의체 “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위원회” 운영
 - 아동친화도시 내부정책 조정기구 “아동친화도시 실무추진단” 운영
 -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을 통한 아동인권 보호 체계 확립
- 아동 요구 실현을 위한 아동정책 발굴·추진
 - 우리구 행정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특화사업 발굴 및 아동 특수성을 고려한 전략 수립
 - 아동친화도 조사, 지자체 일반현황조사 등 사전조사 및 온라인 아동정책 시민참여 100인 토론회, 아동요구 확인조사 등을 통한 의견수렴
 - 아동친화도시 실무추진단, 조성위원회를 통한 추진과제 및 중점추진 사업 선정

○ 구 자체 지속가능한 아동권리 교육시스템 구축

- 아동, 부모, 아동복지시설 등 각 대상별 맞춤형 아동권리 교육
- 공무원 자기주도형 아동권리 상시학습시스템 운영 (주1회)
- 아동대상 아동권리 교육 전문강사(총11명) 양성 및 활동

○ 지역사회 아동권리 인식 확산 활동

- 아동권리 게시판, 인천지하철 내부광고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지역사회 공감대 형성을 위한 아동권리 옹호 캠페인 진행

○ 아동의 참여권 증진

- 서구어린이참여위원회 구성(총 70명) 및 매월 1회 다양한 구정참여활동 지원
- 2018 ~ 2019 아동,청소년 정책참여캠프
- 온라인 참여통로 “서구 아동 전용 플랫폼” 개설 및 운영
- 아동권리 모니터링단 [Good motion] 지원 : 2020년~
- 아동이 주인공인 행복한 축제 아동축제기획단 운영: 2018년~

□ 언론보도사항





경인매일

HOME > 인천

인천 서구, 아동 목소리 직접 듣는 참여의 장 마련

김정호 기자 | 승인 2021.07.06 09:41

가원초 4학년 학생들이 구정에 가장 바라는 건?



어린이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구정에 반영하기 위한 참여의 장. 사진제공=인천서구청

(인천=김정호기자)인천 서구(구청장 이재현)의 어린이들이 구정에 가장 바라는 정책은 무엇일까? 어린이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구정에 반영하기 위한 참여의 장이 마련돼 눈길을 끌고 있다.

서구는 지난 2일 가원초등학교 4학년 11개의 학급을 방문해 구정에 대한 아동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4월 말 가원초 4학년 4반 친구들은 국어 시간에 ‘아이들이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어주세요’라는 주제로 이재현 서구청장에게 직접 손편지를 쓰는 시간을 가졌다. 담임교사인 이대식 선생님은 이 편지들을 전자책으로 엮어 서구청에 접수했다.

서구는 전자책을 받은 후 편지를 금연구역 지정, 쓰레기 무단 투기 방지, 불법 주차 단속 등 내용별로 분류했다.

이어 서부경찰서, LH 루원사업단 등 관련 기관과 부서에 아동 의견 반영을 요청했으며, 총 10가지의 의견 중 6건의 의견에 대해 추진 중이거나 추진될 예정으로 검토됐다.

이후 서구는 지난 2일 서구 아동권리교육 전문강사단과 함께 가원초를 방문해 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한 교육을 진행했다.

또한, 4대 아동 권리 중 참여권과 관련해 4반 친구들이 쓴 편지를 다 함께 다시 살펴보고 이에 대한 관련 기관과 부서의 검토 결과를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재현 서구청장은 영상 편지를 통해 “4학년 4반 친구들의 깊은 생각에 정말로서 자랑스럽고 부끄러움을 느꼈다”며 “늘 시간도 부족할 텐데 살기 좋은 서구를 만들기 위해서 정성스럽게 편지를 써준 친구들에게 진심으로 고마움을 느끼며, 앞으로 서구의 멋진 주인공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이대식 담임선생님은 “아동친화도시에서 자라는 아동으로서 이번 기회에 구정에 직접 참여해 아이들의 자신감이 상승할 수 있는 좋은 경험이었다”며 “아이들이 직접 청장님께 편지를 쓰고, 이에 대해 영상 편지 등 뜻깊은 선물을 받은 좋은 추억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하다”고 밝혔다.

한편 서구는 지난 2017년 인천 최초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후 ‘아동이 웃는 도시, 아동과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서구’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특히 오는 11월 또다시 인천 최초로 아동친화도시 상위인증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저작권자 © 경인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정호 기자

수범사례 5 IoT 실시간 미세먼지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운영

- ❖ 미세먼지 다량 발생 사업장(특별관리공사장, 폐기물중간처리업 등)에 환경부 인증(1등급) 미세먼지 측정기기를 설치 운영하여 현장에서부터 미세먼지 발생을 근본적으로 저감 관리
- ❖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 모니터링을 통하여 국민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기여

□ 추진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비산먼지의 규제)
- 「인천광역시 서구 미세먼지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사업장의 책무)

□ 사업개요

- 사업명: IoT 실시간 미세먼지 감시 시스템 구축
- 사업기간: 2020. 4. ~ 2020. 6.
- 사업내용: 미세먼지 다량 발생 사업장에 환경부 인증(1등급)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운영
 - 설치대상
 - 특별관리공사장
 - 폐기물중간처리업체
 - 측정항목: PM 2.5, PM 10, 온도, 습도, 풍향, 풍속
- 사업비: 비예산(기업체 자율적 미세먼지 감축 동참)
- 측정기 사양 및 운영방법
 - 미세먼지 측정기기 사양 (환경부 성능평가실험결과 정확도 80%이상)

구 분		내 용
측정원리		광산란식
측정항목		TSP/PM-10/PM-2.5/온도/습도 (정확도 80% 이상)
측정범위		0 ~ 1,000 $\mu\text{g}/\text{m}^3$
측정주기		실시간 (1, 5, 60분, 24시간)
데이터 전송		LTE(또는 NB-IoT), WIFI
구조기준	전처리장치	시료채취부 히팅장치 외 (수분제거기능)
	지시·출력부	단위: 중량농도 ($\mu\text{g}/\text{m}^3$) 저장매체(SD카드 등), 유·무선통신
동작습도		0%~95%RH
동작온도		-30~+50℃
함체방수		방진, 방수 (IP45)



- 운영방법

- 각 사업장(공사장)에 설치된 측정기를 통해 미세먼지 농도가 현장 사무실과 서구청 악취&미세먼지 통합관제센터로 실시간 전송되어 표출
- 미세먼지 매우나쁨 수준 [PM 10 : 151이상, PM 2.5 : 76이상] 발생 시
 - ① 담당직원(구청, 사업장)에게 문자 자동통보
 - ② 구청에서 사업장에 재차 유선 확인
 - ③ 현장 즉시 살수 등 미세먼지 저감조치
- 농도가 기준 이내로 낮아지지 않을 경우 현장 출동하여 지도점검 및 개선조치



□ 추진사항

- 설치 대상 사업장 선정
 - 조사기간 : 20. 4. ~ 5.
 - 선정방법
 - 비산먼지(미세먼지) 민원 다수 발생 지역
 - 미세먼지 다량 발생사업장(대규모 공사현장, 폐기물중간처리업)
- 실시간 미세먼지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완료(30개소) : 20. 10.
- 실시간 미세먼지 측정기 지속 설치·운영(57개소 + α) : 21. 11.

□ 수범사항

- 미세먼지 관련 수범사례 제출 : 20. 10.
- 미세먼지 관련 정부합동 안전점검 결과 수범사례 선정 : 21. 3.
- 인천시 미세먼지 원격감시시스템 구축·운영 시책 추진 : 21. 8.

수도일보

2020년 5월 11일 월요일 013면 인천

클린 서구, IoT 실시간 미세먼지 감시 시스템 구축

대형공사장·폐기물중간처리업체, 미세먼지 감측 동참

인천 서구(구청장 이재현)는 미세먼지 다량 배출원에 대한 능동적 대응 방안으로 관내 연면적 1만㎡ 이상 대형공사장 21개소와 폐기물 중간처리업체 9개소가 자발적으로 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해 미세먼지 억제방안을 선제적으로 시행하는 'IoT 미세먼지 감시 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미세먼지 핵심 사업장 6곳과 '미세먼지 저감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이후 다시 한번 서구와 기업체가 '미세먼지 줄이기'에 하나로 뜻을 모은 것이다.

이번 사업은 미세먼지 다량 발생 사업장의 PM10, PM2.5 농도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측정기기(환경부 1등급 인증제품)를 기업체가

자발적으로 각 사업장 부지 내에 설치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할 수 있어 현장에서부터 미세먼지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업체 스스로 미세먼지 억제방안을 선제적으로 시행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측정기기는 각 업체별로 5월 중 설치를 완료하고 테스트 기간을 거쳐 하반기부터 정상 운영할 계획이다. 측정 자료는 '서구청 악취&미세먼지 환경통합관제센터'로 연계, 실시간 모니터링되며 미세먼지 농도가 일정 기준 이상 초과하면 즉시 담당자(사업장, 구청)에게 SMS(문자) 통보돼 살수 조치 등 신속한 현장 관리를 유도하고, 농도가 낮아

지지 않을 경우 구청 관계자가 현장 출동해서 확인·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수집된 업체별 미세먼지 농도는 지역별, 계절별 분석을 통해 관내 도시대기측정망 5곳의 미세먼지 데이터와 연계해 좀 더 세밀한 서구만의 대기질 저감대책 수립 자료로도 활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앞으로 서구는 미세먼지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해당 규모(연면적 1만㎡ 이상) 이상의 신규 대형공사장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서구 미세먼지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 비산먼지 사전신고 단계에서 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토록 권고할 방침이다.

/김광수 기자

인천일보

2020년 10월 26일 월요일 012면 메트로

서구 전국 최초 '미세먼지 모니터링'

폐기물업체·공사장 30곳 자발적 설치 농도 나뉠 때 사업장·구청에 자동문자 민관 협력 신속한 억제조치 효과 기대

인천 서구가 전국 최초 IoT(사물인터넷) 미세먼지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했다.

서구는 그린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전국 최초 민·관 협력 'IoT 미세먼지 모니터링 시스템'을 선보인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연면적 1만㎡ 이상인 대형공사장 21개소와 폐기물처리업체 9개소 등 총 30개소가 자발적으로 '미세먼지 측정기(환경부 인증 1등급)'를 설치하고, 서구는 IoT 기술을 접목한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해 사업장과 공유하면서 미세먼지 억제방안을 선제적으로 시행하게 되는 것이다. 지자체 예산으로 측정기를 설치해 관 주도 관리에 집중했던 기존방식을 벗어나 기업 자발적 참여 모델을 구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사업장(공사장)에서 측정되는 미세먼지(PM



이재현 서구청장이 '서구청 악취&미세먼지 환경통합관제센터'를 방문해 'IoT(사물인터넷) 미세먼지 모니터링 시스템'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제공=인천 서구

10·PM2.5) 농도는 '서구청 악취&미세먼지 환경통합관제센터'로 연계돼 실시간 모니터링된다.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넘어서면 즉시 사업장과 서구청의 담당자에게 SMS(문자)로 자동 통보돼 살수 조치 등 신속한 현장 관리를 유도하고, 농도가 낮아지지 않을 경우 구 관계자가 현장 출동해 확인·조치하게 된다.

서구는 이같은 시스템이 갖춰지면 현장에서

도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 확인이 가능한 만큼 업체들의 적극적인 대응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미세먼지 모니터링 시스템'은 이달까지 테스트를 진행하고 11월부터 정상 운영된다. 수집된 업체별 미세먼지 농도는 지역별, 계절별 분석을 통해 관내 도시대기측정망 5곳의 미세먼지 데이터와 연계, 지역 대기질 저감대책 수립 자료로도 활용된다.

특히 서구는 앞으로 연면적 1만㎡ 이상의 신규 대형공사장과 미세먼지 다량 발생 사업장에 대해 '인천시 서구 미세먼지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비산먼지 사전신고 단계에서 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토록 권고할 방침이다.

이재현 서구청장은 "지난해 '악취·미세먼지 통합 관제센터'개소 이후 기업체들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악취 민원이 당초 목표였던 10%를 훌쩍 넘겨 무려 25%까지 감소했다"며 "이번 사업 역시 큰 효과를 기대하며 민·관 상호협력과 공동대응 방안을 강화해 사업장 미세먼지 발생을 근본적으로 줄이겠다"고 말했다.

/이은경 기자 lotto@incheonilbo.com

수범사례 6 IoT기반 과학적인 악취관리시스템 운영

- ❖ 악취 및 미세먼지 실시간 감시를 위한 IoT(사물인터넷) 기반의 통합 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실시간 대기오염물질 측정차량을 활용한 악취 실태조사와 모니터링 등 과학적인 관리시스템을 운영하여 악취 관리 효율 극대화
- ❖ 과학적인 관리시스템 운영을 통한 사전·신속대응 체계 구축으로 주민 체감환경 및 정주여건 개선에 기여

□ 추진배경

- 우리 구는 주거지역과 공업지역이 혼재되어 있으며 외부 유입인구 증가에 따른 악취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악취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시스템 도입이 필요
- 민원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및 주민 만족도 제고를 위해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환경정보의 측정 및 관리체계 구축

□ 사업개요

- 「악취 & 미세먼지 통합 관제센터」 구축·운영
 - 사업기간 : 2019. 8. ~ 2019. 12.(※ 운영 : 2019. 12. 26. ~)
 - 사 업 비 : 900백만원(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 설치위치 : 클린도시과 사무실 내



- 사업내용
 - IoT(사물인터넷) 기반의 실시간 악취·기상측정시스템 구축
 - 악취 시료자동채취장치 설치를 통한 원격 시료채취시스템 도입
 - 방지시설 가동여부 확인을 위한 전력사용 원격점검기 설치
 - 악취관리지역 실시간 감시를 위한 고성능 대기감시시스템 구축
 - 기상측정시스템을 통한 대기&악취 확산 모델링 프로그램 구축
 - 환경정보알리미 서비스 및 통합관리 운영 프로그램 구축
- 「실시간 대기오염물질 측정차량」 구축·운영
 - 구축 일 : 2019. 11. 28.
 - 차량구성 : 분석장비, 시료채취장비, 기상장비 등
 - 분석장비 : 실시간 이온선택형 질량분석기(SIFT-MS)
 - 측정항목 : 지정악취물질 22종 외 약 1,600여종의 화학물질

□ 추진사항

- 「악취 & 미세먼지 통합 관제센터」 추진사항
 - 2018. 12. : 사업비 확보(수도권매립지환경개선 특별회계 - 9억원)
 - 2019. 04. : 관제센터 구축 관련 클린서구 환경전문가 협의회 개최
 - 2019. 08. : 통합 관제센터 구축 계획 수립
 - 2019. 10. : 통합 관제센터 인테리어 공사 준공
 - 2019. 11. : 현장 측정장비 및 시스템 장비 설치 완료
 - 2019. 12. : 「악취 & 미세먼지 통합 관제센터」 개소식 개최 및 운영
 - 2020. 06. : 대기감시 시스템(CCTV) 재난상황실 연동
 - 2020. 08. : 고성능 대기감시 시스템(CCTV) 1기 추가 설치
 - 2021. 07. : 복합기상 측정기기 1기 추가 설치

○ 「악취 & 미세먼지 통합 관제센터」 구축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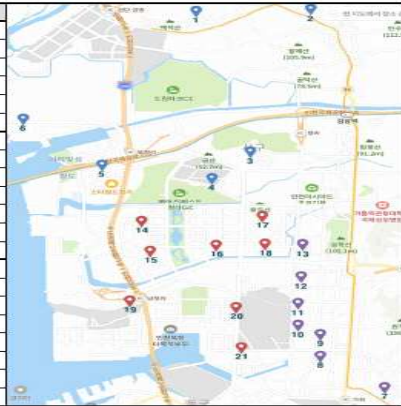
구 분	수 량	기 능
실시간 악취&기상 측정시스템	15대	악취물질(복합악취, H2S 등) 및 기상상태 모니터링
피해지점 악취시료자동채취장치	21대	원격 악취시료 포집
배출구용 악취시료자동채취장치	41대	원격 악취시료 포집을 통한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확인
전력사용 원격 검침기	30개 사업장 (60개소)	방지시설 적정 가동여부 확인
복합 기상측정기기	5대	모델링용 기상 측정 (풍향, 풍속, 온도, 습도, 기압)
대기&악취 확산 모델링시스템	1식	정추적(확산경로 파악) 역추적(악취발생원 추적)
고성능 대기감시시스 템(CCTV)	5대	유색연기 및 먼지 발생 여부 등 환경 감시
환경정보 알리미	23대	도시대기측정소 측정자료 공개 우리 구 주요사업 및 홍보사항 안내

- 측정시스템 등 각종 프로그램 상시 관제를 통한 감시체계 운영
 - 실시간 모니터링 및 상시 순찰활동을 통한 사전 예방적 관리체계 구축
 - 과학적인 악취배출원 추적 및 원격 악취시료 포집 등 신속한 조치
- ⇒ 서구 전역 환경민원을 최우선한 사전·신속대응 체계 확립

○ 주거지역 악취실태조사 실시

- 조사지점 : 관내 주거지역 등 21개소
- 실시기간 : 2020. 1월~(월 1회 실시)
- 조사항목 : 지정악취물질 22종
- 조사방법 : 지점별·이동 간 실시간 대기오염물질 측정차량을 통한 분석
- 활용방안
 - 21개소 지점 및 이동경로에 따른 지정악취물질을 실시간 측정하여 오염도 확인 및 오염물질 발생현황 D/B 구축
 - 확보된 DB를 이용하여 월별·계절별 자료 구축을 통해 악취 변화 추이 확인 및 분석

권역	위 치	소재지	
서구 북부권역 (점단 등)	1	단봉초등학교	단봉로 122(오류동)
	2	점단출장소	점단로502번길 15(마갈동)
	3	경서초등학교	경서로31번길 31(경서동)
	4	서부산업단지관리공단	호두산로 92(경서동)
	5	북인천영업소	경평대로 82(경서동)
	6	SM상선경인러미널㈜	거평로 295
서구 동부권역 (석남 등)	7	가정여자중학교	고래울로28번길 13(가정동)
	8	신명아파트	편지로250번길 34(가좌동)
	9	경남아파트	영죽로 172(석남동)
	10	인철테크파크	거북로 17(석남동)
	11	신광아파트	율도로16번길 28(석남동)
	12	신현여자중학교	새오개로111번길 15(신현동)
서구 서부권역 (정라 등)	13	두리식자재마트	가정동 606-4
	14	정라6단지	비즈니스로182번길 4-18
	15	해원중학교	정라한대로 21(경서동)
	16	도담초등학교	정라커널로 217(경서동)
	17	정라중학교	정라타일로 112(연희동)
	18	조은초등학교	정라에메랄드로 33(연희동)
	19	율도저장탱크	원장동 213-1
	20	모다아울렛	복합로32번안길 50(원장동)
	21	E텍캐미칼	가좌동 602-4



[주거지역 악취 실태조사 지점]

○ 악취배출사업장 악취 무료측정 지원사업

- 대 상 : 관내 악취배출사업장
- 기 간 : 2021년 연중 실시
- 추진방향
 - 실시간 대기오염물질 측정차량을 활용한 악취물질 측정·분석
 - 측정 후 분석 데이터 제공 및 악취발생 현황·원인 파악
 - 사업장 자체 개선 후 요청 시 재측정을 통한 개선효율 확인
- 추진절차



- 추진실적 : 106개소 무료 측정 후 분석결과 제공
- ⇒ 사업자가 악취발생 현황 및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스스로 개선하도록 하여 악취저감방안 마련 등 자율환경개선 의지 고취



□ 수범사항

○ 과학적인 악취관리 시스템 운영을 통한 악취민원 대폭 감소

- 악취민원 : 2018년(1,842건), 2019년(1,408건), 2020년(986건)

⇒ 2018년 대비 46% 감소, 2019년 대비 30% 감소

- 악취측정시스템 및 확산모델링 관측자료를 활용한 악취발생원 파악 등 악취민원 신속 대응을 통해 주민 불만사항 감소에 기여

○ 첨단장비를 활용한 환경관리로 업무 효율성 제고

- 고성능 CCTV 및 전력사용 원격점검기 등 첨단장비를 이용한 비대면 점검 및 실시간 감시를 통해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한 사업장 지도·점검 공백 최소화

- 측정차량을 활용한 주거지역 실태조사 및 사업장별 악취물질 Data를 지속적으로 축적하여 악취개선을 위한 정책자료로 활용

- 전국 자치구 최초 지정악취물질 무료측정 지원사업을 통해 측정비용 절감 등 기업경제와 상생하는 환경행정 추진

□ 언론보도시황



서구, '전국 최초' 자체 악취실태조사 실시

‘실시간 대기오염물질 측정차량’ 활용, 지정악취물질 22종 자체 분석



서구구청장 이재현(가 각종 최첨단 관리 시스템 도입을 통해 악취 없는 ‘클린 서구’를 조성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서구는 지난해 지정악취물질 22종 등 1,600여 종의 화학물질을 분석할 수 있는 ‘실시간 대기오염물질 측정차량’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1월부터 차량을 활용해 각 지역별 악취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처럼 분석차량을 구축해 자체 악취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인천 서구가 전국 최초다.

우선 서구는 악취관리지역 및 악취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21개 지점을 선정해 매월 황화수소, 암모니아 등 지정악취물질 22종에 대해 악취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보다 촘촘한 조사를 위해 각 지점 이동 시에도 실시간으로 지정악취물질을 분석하고 있다.

또한 악취배출사업장의 배출구에서 시료를 포집해서 각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지정악취물질에 대해 분석을 진행하고 있으며,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와는 별도로 오염물질이 상대적으로 높게 발생하는 사업장

에 대해서는 황성탄, 세정수 등 초기 교체를 통해 악취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아울러 주요 업종에 대해서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모든 오염물질을 분석한 후 업종별로 배출되는 물질에 대한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각 지역별 악취실태조사 및 사업장의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축적하고 ‘악취 & 미세먼지 통합 관제센터’의 ‘악취 확산 모델링 프로그램’과 연계하면 악취발생원을 보다 정밀하게 추적할 수 있으며, 악취 민원 현장의 대기질 분석을 통해 악취발생 원인사업장을 파악할 수 있어 신속한 조치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재현 서구청장은 “지속적인 악취실태조사를 통해 서구 모든 지역의 악취발생 현황에 대한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지난해 구축한 ‘악취 & 미세먼지 통합 관제센터’와 연계해 악취발생원을 파악하고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악취 없는 ‘클린 서구’를 조성해나가겠다”고 전했다.

서구 = 김민필 기자

경인종합일보

2021년 1월 11일 월요일 012면 인천

서구, 분석 데이터에 악취 저감방안까지 제시

‘전국 최초’ 실시간 대기오염물질 측정차량으로 무료 악취측정

인천 서구(구청장 이재현)가 새해 초부터 악취를 비롯한 대기질 개선에 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며 ‘클린 서구’ 완성에 박차를 가한다.

먼저 관내 악취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치구 단위에서는 ‘전국 최초’ 실시간 대기오염물질 측정차량(SIFT-MS)을 활용한 악취 무료 측정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이를 통해 악취 발생 원인을 선제적으로 규명하고 원천 차단함으로써 악취와 미세먼지 없는 서구를 더 뚜렷하게 완성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서구는 올해 관내 악취배출시설을 운영 중인 사업자에 대해 각종 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 유량 물질을 측정, 분석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과 동시에 악취 저감방안을 알려줌으로써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악취 물질 발생을 줄여나가는 데 힘을 보탬 계획이다. 지난 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의 효과적인 진행을 위해 작년에 도입한 실시간 대기오염물질 측정차량(SIFT-MS)이 활용된다. 황화수소, 암모니아 등 지정악취물질 22종을 측정할 수 있는 차량이다. 사업장 배출구의 경우엔 악취 시료를 포집한 후 차량에서 분석을 진행하고 사업장 내부 및 외부에서 측정할 땐 현장에서 실시간 측정·분석이 가능하다.

올해는 총 100개 사업장에 대해 무료 측정 및 분석을 진행할 예정이며 연말에 1년간의 성과를 평가한 후 확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그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경우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제도가 의무화돼 있어 먼저 등 대기물질에 대한 자료 확보가 가능했다. 그러나 악취물질에 대한 자가측정 규정은 없어 악취발생량



/서구 제공

의 많고 적음과 심각성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그런 고충을 겪었던 많은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게 됐다. 무엇보다 기존에 행해졌던 사후 단속과 규제에서 벗어나 사업장 스스로 악취발생 현황 및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스스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한 점을 큰 성과로 꼽을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 침체로 오염물질 측정 등 환경개선 투자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체에 경제적 부담 완화 등의 현실적인 도움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현 서구청장은 “민선 7기 들어 열악한 서구의 환경을 개선하고자 ‘클린 서구’를 목표로 전방위적인 대책 마련 및

신기술 도입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 환경도 지키고 기업체의 경제적 부담도 줄이는 ‘일석이조’ 방안에 대한 모색을 지속해 지역경제와 소통하고 상생하는 선진화된 환경 행정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정남 기자 jn@happnews.com

- ❖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체계적인 환경관리를 통해 지속 발전 가능한 환경정책 수행에 기여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 중
- 대 상 :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 내 용
 - 시기별 맞춤형 정기·수시 배출업소 환경관리 계획 체계적 수립 및 추진
 - 유관기관 연계한 배출업소 합동점검 및 원활한 업무 공조 추진을 통한 환경감시 네트워크 구축·운영
 -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 20년, 21년 대면 점검 등의 환경관리 계획 사항 추진의 어려움 있음.

□ 추진사항

- 시기별 맞춤형 정기·수시 배출업소 환경관리 계획 체계적 수립 및 추진
 -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 통합지도점검계획(연간계획) 수립 : 1월
 - 동절기·해빙기 수질오염예방대책 수립 및 추진 : 12월~4월
 - 취약시간대(야간·새벽)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 : 일제점검 3회 외 수시 시행
 - 중점관리대상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특별점검 : 연 3회
 - 지방하천 수질오염사고 대비 자체 방제 훈련 : 연 1회
 -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환경교육 : 연 1회
 - 명예환경감시원 환경 교육 : 연 1회
 - 설(추석) 연휴 환경오염 예방 특별감시 추진 : 1월(2월), 9월(10월)
 - 장마철 대비 배출업소 민관합동 점검 : 6~9월
 -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단속 : 6~8월
 - 국정평가 대비 민·관 합동 점검 : ‘18.4월,10월,11월, ‘19.12월
‘20.11월, ‘21.12월

- 가좌하수처리구역 내 폐수배출사업장 특별점검: '19.2월, '20.1월 '21.4월~
- 폐수 전량 위탁처리 사업장 민관합동 점검 : '18.6월,7월,9월, '19.6월
- 중소형 소각시설 특별점검 : '18.7월
- 불법연료 사용사업장 특별점검 : '18.11월, '19.3월,11월
- 목재가공업체 민·관 합동점검 : '19.10월
- 사월마을 민·관 합동점검 : '19.12월
- 폐수 다량 배출사업장 특별점검 : '18.4월, '19.4월
-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 특별점검 : '18.4월, '19.5월
- 고농도 폐수(T-N) 배출업소 특별관리 : '20.1월, '21.4월~ 진행중
- 폐수처리업체 정밀 지도·점검 : '20.10월, '21.4월 ~ 진행중
- 사월마을 주변 환경개선을 위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특별지도·점검 : '20.11월, '21.10월
- 초미세먼지 위기 정보에 따른 비상저감조치 의무 사업장 지도·점검 : '21.5월

○ 과학적 수질·대기 감시체계 구축 사업장 점검 계획 수립 및 실시

- 이동식 수질감시시스템을 이용한 특별 지도·점검 예정
- 소규모 영세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사업장 IoT 기반 특별 지도·점검 예정
- 1~3종 폐수처리업 수질 TMS 지원 사업장 특별 지도·점검 예정

○ 유관기관 연계한 배출업소 환경감시 네트워크 구축·운영

- 가좌하수처리장 고농도 유입수 정상화를 위한 폐수배출사업장 시·구 합동 점검 : '21.4월 ~ 진행중
- 폐수배출사업장 시·구 합동 점검 : '18.6 ~ 7월, '19.10월, '20.1월, '21.4월 ~ 진행중
- SK인천석유화학 민·관 합동 환경감시단(특별점검) 운영 : '18, '19 분기 1회 (수도권대기환경청, 환경부 시흥합동방제센터, 인천시)
- 인천지검·시 특사경 합동 폐수처리업체 정밀점검 실시 : 3회
- 소규모 영세 사업장 방지시설(사물인터넷:IoT) 설치 지원, 이동식 수질감시시스템 및 1~3종 폐수처리사업장 수질 TMS 지원 사업을 통한 원격 감시체계 활성화

□ 수범사항

- 2021년('20년 실적) 배출업소 환경관리실태평가 기초지자체 '전국 1위' , 우수기관 5년 연속 선정 : 환경부장관 기관 표창
- 2021년('20년 실적) 군·구 행정실적평가 환경행정 업무추진 1위
- 체계적인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환경관리를 추진함으로써 주민들이 원하는 수준의 도시환경조성에 기여
- IoT를 기반으로 한 과학적 수질·대기 감시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24시간 환경감시의 한계점을 보완하여 불법행위 사전예방 및 실시간 수질·대기 감시체계 구축

□ 언론보도사항

경기매일

2020년 11월 23일 월요일 013면 인천

사월마을 주변 환경오염 행위, 매의 눈으로 살핀다

서구,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특별점검 실시



서구(구청장 이재현)는 이달 2일부터 약 10일간 사월마을 주변의 대기, 폐수, 폐기물, 비산먼지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통합 지도·점검 규정에 따라 서구청 환경안전국 3개 부서와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과가 합동으로 진행한 것으로, 마을 주변 사업장에 대해 환경 분야 전반에 걸쳐 대대적인 점검을 벌인 결과 총 10개 사업장을 적발했다.

위반사항은 미신고 대기/소음배출시

설 설치·운영 1건,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운영 1건, 대기자가측정 미이행 1건, 폐기물처리기준 위반 2건, 폐기물처리신고 미이행 1건, 올바른시스템 미압력 및 허위 입력 2건,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기준 부적합 2건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A업체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받을 수 없는 지역에서 미신고 상태로 대기·소음배출시설인 목재가공연마시설을 설치·운영해 적발됐다.

B업체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로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해 적발

됐으며, C업체는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득한 사업장으로 의무사항인 대기자가측정을 실시하지 않은 상태로 조업을 하다가 적발됐다.

서구는 이번에 적발된 위반업체에 대해 관련 규정에 의거 경고, 폐쇄명령,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함과 더불어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 특별사법경찰과에 고발의뢰해 사법조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재현 서구청장은 "사월마을은 환경부에서 실시한 주민건강영향조사 결과 주거 부적합 판정을 받은 지역으로, 우리 구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분야별 환경개선사업, 건강영향조사 사후관리 등 특별관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특별점검은 서구의 확고한 환경개선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청장은 "앞으로도 마을 주변 사업장에 대해서는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이고 주기적인 관리를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민립 기자

서울매일

2020년 9월 22일 화요일 008면 인천

고의적 불법행위 엄중처벌

서구, 추석 연휴 환경오염 예방 특별감시 추진

이광식 기자 / 인천 서구(구청장 이재현)는 추석 연휴 기간 중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등 취약 시기를 악용한 오염물질 불법 배출에 대한 특별점검 및 감시활동을 추진한다.

1단계인 연휴 전(9월 21일 ~ 9월

29일) 기간에는 공장밀집지역 및 주변 하천, 악성 폐수 배출업체, 폐수다량 배출업체, 폐수수탁처리업체 등을 중점감시 대상 지역 및 시설로 선정해 사전 계도를 하고 자율점검을 유도하는 한편, 1개 조 3명의 자체 점검반을 구성해 특별점검을 실

시한다.

2단계인 연휴 중(9월 30일 ~ 10월 4일) 기간에는 환경오염사고 대비 상황실을 운영해 공단 주변 하천 등 오염우심 하천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비상근무를 실시해 환경오염사고 등에 대비한다.

서구 관계자는 "특별감시 기간 중 폐수 무단방류 등 고의적·상습적 불법행위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할 방침"이라며 "환경오염행위 발견 시에는 국번 없이 128번으로 신고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 『서구 자원순환 선진화 시민추진단』 구성·운영으로 발생지처리원칙에 따른 쓰레기 처리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구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협력적 사고와 다양한 구민의견수렴으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주민수용성 확보 및 구민 주도의 폐기물 정책 방향성 제시에 기여

□ 추진근거

- 광역소각시설의 노후화와 대보수 계획으로 인한 민·관 갈등심화
 - 쓰레기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자체 연구용역 「자원순환 선도도시 구축을 위한 통합대책 마련」 연구용역 추진
- 서구민과 지역사회 시민단체들이 쓰레기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서구만의 시민위원회 구성·운영 제안 → 「서구 자원순환정책 주민참여단 운영」
- 「서구 자원순환 정책 주민참여단」을 바탕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서구 자원순환 선진화 시민추진단」을 정식위원회로 구성

□ 사업개요

- 규모: 총 48명(3개 분과로 구성)
 - 거주지역, 성별, 연령별 등 균형있는 안배 및 다양한 계층으로 구성
 - 총 48명(일반시민 15명, 단체 33명)
 - 분과위원회 구성: 위원장(3명), 간사 1명, 총무(3명)
- 주요활동내용
 - 지속가능한 서구만의 자원순환 선진화 정책 추진 등을 위한 여론 수렴 및 정책 제안
 - 시민추진단의 의결을 거쳐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 등에 조사 또는 연구 의뢰

- 의제에 대한 자유로운 형식의 토론회, 세미나, 설문조사 등을 통한 여론 수렴 및 정책 제안

□ 추진사항

일 정	주요내용	비 고
2020. 10. 27.(화)	「서구 자원순환정책 주민참여단」 구성·운영계획 수립	
2020. 10. 28.(수) ~ 11. 4.(수)	모집공고	
2020. 11. 6.(금)	선정위원회 개최	
2020. 11. 9.(월)	추가 1차 선정위원회 개최	
2020. 11. 10.(화)	출범식 및 1차회의	
2020. 11. 17.(화)	제2차회의	
2020. 11. 20.(금)	제3차회의(관내 자원순환시설 현장견학 같음)	
2020. 11. 27.(금)	제4차회의	
2020. 12. 4.(금)	제5차회의	
2020. 12. 10.(목)	제6차회의	
2020. 12. 15.(화)	제7차회의	
2020. 12. 17.(목)	제8차회의(예비검토부지 8곳 현장견학 같음)	
2020. 12. 21.(월)	자원순환 선진화 시민추진단 조례개정	
2020. 12. 23.(수)	제9차회의	
2020. 12. 28.(월)	제10차회의 (쓰레기처리 선진화를 위한 소통토론회로 같음)	
2020. 12. 31.(목)	서구 자체 폐기물처리시설 조성 관련 인천시에 대안 제시 및 자원순환 정책 주민참여단 해산	
2021. 6. 10.(목)	발대식 및 제1차회의	
2021. 7. 20.(화)	제2차회의	
2021. 8. 25.(수) ~ 27.(금)	제3차회의: 각 분과별 개최	
2021. 9. 6.(월)	제4차회의	
2021. 10. 29.(금)	제5차회의	
2021. 11. 29.(월)	제6차회의	
2021. 12. 10.(금)	제7차회의	
2021. 12. 21.(화)	제8차회의	

□ 수범사항

- 「자원순환 선도도시 구축을 위한 통합대책 마련 연구용역」을 통한 정책 제안에 대하여 주민 의견수렴 및 반영 추진
- 서구 자체 폐기물처리시설 조성 관련 인천시 대안 제시
-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주민주도의 적극적인 소통체계 구축
- 자원순환 선도도시 구축을 위한 폐기물 감량, 선진화 및 재활용정책에 대한 주민 소통, 환경권, 주민 수용성 확보
- 서구의 쓰레기 처리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 제안·권고 및 상호협력
- 폐기물 처리 정책에 대한 주민의 이해도 제고 및 공감대 형성, 주민 의견수렴 활동

수범사례 9 서구 지역화폐 서로e음 발행 및 운영

- ❖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을 통해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역내소비를 촉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화폐 기반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개발하여 소상공인 경쟁력과 지역공동체 의식을 강화

□ 추진근거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화폐 발행 및 기금 설치 조례」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5. 1. ~ 지속
- 발행주체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발행방식 : 전자식 지역화폐
- 유통지역 : 인천광역시 서구
-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화폐 민관운영위원회 운영
 - 구성근거 :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화폐 발행 및 기금 설치 조례
 - 위 원 : 15명(위원장 : 이재현 구청장)
 - 위원임기 : 2년
 - 위원장(1명), 공무원(1명), 구의원(2명), 주민대표(3명), 소상공인대표(2명), 지역화폐 전문가(2명), 시민단체(1명), 복지분야 전문가(1명), 마케팅분야 전문가(2명)

□ 추진사항

- 추진개요

준비기('18)	출발기('19)	확산기('20)	정착기('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례제정 - 기금설치 - 위원회구성 - 연구용역 - 의견수렴 - 명칭 및 디자인 공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대행사 협약 - 사용자 모집 - 공공 민간기업 제휴 - 전자식 발행 - 명예홍보대사 운영 - 기간제근로자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콘텐츠확보 · 공공배달서비스 운영 · 온라인몰 운영 - 정책수당 연계 - 지역축제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빅데이터 활용한 맞춤형 소상공인 지원 정책 개발 - O2O 및 B2B 확산 - 공동체활성화 사업 추진

○ 추진내용

구 분	추진일정	추진사업
준비기	2018. 8. ~ 9.	간담회 개최(서구의회, 전문가, 상인회)
	2018. 10. 2.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화폐 발행 및 기금 설치 조례 제정·시행
	2018. 10. 12.	「서구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연구용역 착수
	2018. 11. 1.	주민 설명회 개최
	2018. 11. 13.	지역화폐 민관운영위원회 설치
	2018. 12. 4.	「서구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연구용역 결과 보고회
	2018.11.~12.	서구 지역화폐 명칭 및 디자인 공모
출발기 (시즌1)	2019. 2. 20.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종합계획 수립
	2019. 4. 1.	인천시-서구-코나아이(주) 3자협약 체결 및 명예홍보대사 위촉(21명)
	2019. 4.	홍보부스 운영, 캠페인 활동, 활성화 협약 체결 등
	2019. 4. 23.	서로e음 발전토론회(전문가, 구민 등)
	2019. 5. 1.	서구 지역화폐 서로e음 발행
	2019. 5. 2.	발행 선포식 개최 및 지역매니저 채용(42명)
	2019. 7. 10.	서로e음 발행 1,000억원 돌파
	2019. 8. 27.	서로e음 발전방향 토론회 개최
	2019. 9.	서로e음 설문조사 실시(11,810명)
	2019. 9. 25.	2019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수상
	2019. 10. 31.	2019 중부일보 우수브랜드 만족대상 수상
	2019. 12. 12.	2019 스타브랜드 지역화폐 부문 대상 수상
	2019. 12. 27.	서로e음 시즌2 사업설명회 개최
확산기 (시즌2)	2020. 1. 1.	서로e음 시즌2 사업 개시(혜택*서구, 배달서구, 온리서구·남남서구)
	2020. 1. 6.	서로e음 지역매니저 채용(10명)
	2020. 2. 13.	서로e음 경품이벤트 시행
	2020. 3. ~ 6.	서로e음 지역경제 효과 분석 연구 용역
	2020. 5. 28.	배달서구 본격 출범식 개최
	2020. 7. 8.	서로e음 백서 발행
	2020. 10. 29.	2020 골목경제 회복지원사업 우수사례 행정안전부장관상 수상
	2020. 12. 7.	서로e음 기부서비스 ‘서로도움’ 오픈
	2020. 12. 10.	2020 스타브랜드 지역화폐 부문 대상 수상(2년 연속)
	2020. 12. 13.	서로e음 발행 1조원 돌파

정착기 (시즌3)	2021. 1. 12.	배달서구 주문액 100억원 달성
	2021. 1. 25.	서로e음 시즌3 발전방향 워크숍 개최
	2021. 2. 9.	서로e음 시즌3 TF회의 개최(환경마일리지, 문화나눔미)
	2021. 3. 15.	서로e음 지역매니저 채용(10명)
	2021. 3.	지역화폐 부정유통 일제단속 실시
	2021. 4.	배달서구 설문조사 실시(3,660명)
	2021. 4. 30.	온리서구·남남서구 통합 온라인몰 ‘서로e몰’ 오픈
	2021. 5. 4.	서로e음 발행 1조원 및 2주년 기념 행사 개최
	2021. 6.	서로e음 사연 수기공모
	2021. 6. 14.	서로e음 시즌3 에코카드 출시
	2021. 7. 5.	배달서구 서비스 고도화
	2021. 9. 1.	환경마일리지 걷기 서비스 오픈
	2021. 10. 15.	제17회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 지역경제 부문 ‘배달서구’ 최우수상 수상(국무총리 표창)
	2021. 11. 1.	환경마일리지 자전거 서비스 오픈
	2021. 12. 10.	2021 스타브랜드 지역화폐 부문 대상 수상(3년 연속)
	2021. 12. 28.	지역사랑상품권 우수사례 행정안전부장관상 수상

□ 수범사항

○ 전국 기초지자체 최초 전자식 지역화폐 서로e음 발행

- 전국 최초 지역화폐 정책심의기구 지역화폐 민관운영위원회 구성
- 조례 제정, 전담팀(지역화폐팀) 신설, TF 전략회의 운영
- 명예홍보대사 21명 위촉, 서로e음 지역매니저 42명 채용
- 서로e음 활성화 협약 체결 : 의약단체 5개, 자생단체 9개, 서구위생직능단체협의회 10개
- 서로e음 캠페인 전개 : 홍보부스 2개소 운영, 거점홍보 3회, 길거리홍보 5회

○ 전국 최단기간 지역화폐 발행액 1조원 달성

- 2019. 7. 10. 전국 최단기간(71일)발행액 1,000억원 달성
- 2020. 12. 13. 전국 최단기간(593일)발행액 1조원 달성
- 2021. 12. 26. 기준 서로e음 누적 가입자 수 51만명 돌파

○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한 혜택*서구 사업 추진

- 혜택*서구 가맹점 모집 : 총 3,755개소(2021. 12. 26. 기준)
- 혜택*서구 누적 매출액 : 1,030.6억원
- 혜택*서구 이용자 추가캐시백 지원 : 5,070백만원
- 가맹점 결제수수료 지원 : 770백만원

○ 전국 최초 공공배달서비스 배달서구 운영

- 배달서구 가맹점 모집 : 총 3,401개소(2021. 12. 26. 기준)
- 배달서구 누적 매출액 : 283.3억원
- 소상공인 배달 중개수수료 약 23억원 절감(민간배달앱 대비 8% 절감)
- 배달서구 이용자 쿠폰 발행 : 총 40,628매(총 발행금액 176,978천원)

○ 관내 우수업체 입점 서로e몰 서로e몰 운영

- 서로e몰 가맹점 모집 : 총 199개소(2021. 12. 26. 기준)
- 서로e몰 누적 매출액 : 14.3억원

○ 사례별 기부서비스 서로도움 도입

- 기부사례 : 28개(3,328명 참여)
- 모 금 액 : 총 32,887,197원

○ 환경오염 저감정책 통합 서비스 환경마일리지 도입

- 걷기 : 15,129명 참여 / 1억4,322만 마일리지 적립
- 자전거 : 1,631명 참여 / 250만 마일리지 적립

□ 언론보도사항

○ 지면보도

연번	사업명(기사제목)	수상기관(언론사)	일시
1	소비 역외유출 줄여 '지역경제 공동체' 다잡는다	경인일보	2019.4.15.
2	인천 서구, '서로e음' 발행 선포식	수도권일보 외 15개	2019.5.3.
3	서구, 지역화폐 서로e음 12만명 272억 달성	현대일보 외 13개	2019.6.14.
4	서구 '서로e음' 71일 만에 1천억 돌파	경기일보 외 12개	2019.7.11.
5	화폐? 이젠 '서로e음'이 대세, 질적성장 앞세워 입지 굳힌다	기호일보 외 7개	2019.8.9.
6	서구 지역화폐, 중단없이 '더 단단히' 잇는다	경기매일신문 외 12개	2019.8.26.
7	서구 '지역화폐 서로e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영예	경도신문 외 12개	2019.9.26.
8	서로e음 덕에 소상공인 꿀맛	인천일보	2019.10.14.
9	서로e음 시즌2, 더욱 알차졌다	인천일보 외 7개	2019.12.30.
10	서구 서로e음이 2020명에게 행운을 드립니다	수도일보 외 12개	2020.2.12.
11	인천 서구, 서로e음 할인혜택 최대 22%로 확대	경인종합일보 외 8개	2020.3.16.
12	서구, 전국 첫 공공배달 서비스 배달서구 부르릉	기호일보 외 14개	2020.5.29.
13	'남남서구물' 발전 방안 논의 간담회	현대일보 외 10개	2020.7.6.
14	배달서구 타들어가는 지역상권에 대비	기호일보 외 16개	2020.9.7.
15	지역화폐 새 역사 쓰는 '서로e음'	경기매일신문 외 13개	2020.11.24.
16	인천 넘어 세계로 '서로e음'	경기일보 외 14개	2020.12.8.
17	서로e음, 스타브랜드 대상 2년 연속 차지	일간경기 외 12개	2020.12.14.
18	서구민 잇는 서로e음 1조 발행 '대기록'	경기신문 외 15개	2020.12.17.
19	배달서구' 열풍, 전국 첫 주문액 100억 돌파	경기일보 외 17개	2021.1.14.
20	서구 지역화폐 '서로e음' 사용자 40만 돌파	경인일보 외 12개	2021.2.22.
21	지역화폐 서로e음 사용액 1조 달성 발행 2주년 기념 특별 이벤트 개최	일간경기 외 8개	2021.5.3.
22	2021 '풀뿌리상권 살려내자' 특집기획 지역화폐·배달앱 인기 끄는 인천 서구	디지털타임스	2021.5.27.
23	공공앱 '배달서구' 고도화 작업완료	경인일보 외 8개	2021.7.9.
24	제17회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 최우수상 수상 (착한 소비 이끈 인천 배달서구 전국 으뜸 인정)	행정안전부·한국일보 (기호일보 외 13개)	2021.10.18.
25	인천 서구 '서로e음' 스타브랜드 대상 3년 연속 수상	매경미디어그룹 (매일경제 외 17개)	2021.12.10.

수도권일보

2019년 5월 3일 금요일 005면 경제



인천 서구, '서로e음' 발행 선포식

이재현 서구청장 "소비하면서 소상공인 생각하고 지역 사랑하는 것"

인천 서구는 2일, 서구문화회관에서 내빈과 단체원 및 주민 1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구 지역화폐 '서로e음' 발행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지역경제활성화와 지역 공동체 강화를 위해, 지난 1일 본격적으로 발행돼 사용이 시작된, 서구 지역화폐 서로e음의 조기정착을 위해 개최됐다. 행사는 서로e음 소개, 공동협약, 발행 선포식으로 진행됐다.

식전행사로 능내초등학교의 오케스트라와 해원스타 방송댄스 공연이 있었다. 본 행사에서 전통시장 5개 상인회장 등 30개 단체가 서구 지역화폐 서로e음 활

성화를 위한 공동협약을 체결했다. 발행 선포식에서는 행사 참석자와 지역화폐 민관운영위원회 및 명예홍보대사들이 무대와 좌석을 하나로 연결해 "서구 경제 살리자, 주민과 소상공인 서로e음 하나되자"라는 구호를 외쳤다. 식후행사로 는 시범신청기간 중 서로e음 카드를 신청 및 등록한 대상자 중 1등 1명과 2등 5명에게 서로e음 경품을 증정했으며, 연주단 크라제의 팝페라 공연과 퀴즈이벤트 및 기념촬영이 있었다.

한편, 서구 지역화폐 서로e음은 모바일앱과 선불카드가 결합해,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나 편리하게 사용가능하고

다양한 큰 혜택이 있다. 전국 최고수준의 10% 사용자 캐시백, 30% 소득공제(전통시장 40%), 6천만 원 사용자 경품, 0.5% 가맹점 카드수수료지원 등이다. 무엇보다 주민과 소상공인에게 혜택이 집중돼 있다.

이재현 서구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공동체를 강화하고, 주민과 소상공인을 하나로 이어, 서구를 더 발전시키기 위해 서구 지역화폐 '서로e음'을 발행"했다며, "서구는 민과 관이 하나가 돼 '서로e음'의 조기정착과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윤길상기자 yoon789@sudakwon.com

인천일보

2019년 10월 14일 월요일 002면 종합

서로e음 덕에 소상공인 '꿀맛'

도입 뒤 소비패턴 변화
절반 넘게 매출 늘어
캐시백 기부 동참 의사도
추가혜택 가맹점 홍보 필요

인천 서구 지역화폐 '서로e음' 도입 이후 이용자들이 대형마트보다 소상공인상점을 찾는 등 소비패턴에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소상공인 절반 이상은 매출 증대 효과를 본 것으로 집계됐다.

13일 서구에 따르면 9월11일부터 30일까지 1만1810명(사용자 1만1517명·소상공인 293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서로e음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다.

서구 지역 내, 소상공인 중심으로 운영되는 서로e음은 소비패턴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조사됐다. '대형마트 보다 소상공인 매장에서 소비' 61.52%(7085명), '서구밖 보다 서구안 소비' 50.22%(5784명), '소상공인과 비소상공인 구분소비' 25.03%(2883명), '온라인 구매에서 오프라인 구매' 24.86%(2863명) 등으로 나타났다.

필요캐시백은 '9%' 35.28%, '7%' 25.25%, '6%' 14.21%, '8%' 12.01% 순이었다. 반면 캐시백 적용 한도액은 '70만~100만원이하' 26.35%, '30만~50만원이하' 22.66%, '100만~200만원이하' 17.30% 순으로 많았다. 특히 받은 혜택을 이웃을 위해 돌려주려는 이용자도 많았다. 캐시백 기부의사를 묻는 질문에는 76.90%(8856명)가 동참 의사를 밝혔다.

구분	세부구분	설문대상자	설문응답률	비고
합계	사용자	11517명	100%	
소비패턴변화	대형마트 보다 소상공인매장에서 소비	7085명	61.52%	복수응답가능
	서구밖보다 서구안에서 소비	5784명	50.22%	
	온라인구매에서 오프라인구매	2863명	24.86%	
	소상공인과 비소상공인 구분 소비	2883명	25.03%	
	변화없음	865명	7.51%	
구분	세부구분	설문대상자	설문응답률	비고
합계	소상공인	293명	100%	
매출증대효과	30%이상	17명	5.80%	
	20~30%	17명	5.80%	
	10~20%	24명	8.19%	
	5~10%	42명	14.33%	
	5%이하	52명	17.75%	
	효과없음	141명	48.12%	

그러나 추가 혜택을 주는 혜택플러스 가맹점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이용자가 59.92%를 차지. 효과적인 홍보와 함께 가맹점 모집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소상공인의 경우 서로e음 발행 후 52%가 매출 증대 효과가 있었다. '5%이하' 17.75%(52명), '5~10%' 14.33%(42명), '10~20%' 8.19%(24명), '30%이상'·'20~30%' 등이 각각 5.80%(17명) 순으로 집계됐다. 또 소상공인 73%가 캐시백이 매출에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한 가운데 김포와 인천한 검단, 부평과 인접한 석남·가좌 지역의 캐시백 필요성이 타 지역보다 높았다. 서구 캐시백 혜택을 누리려는 타 지역 이용자들이 많았다는 분석이다. 소상공인 역시 혜택플러스 가맹점에 대해 52.56%가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필요한 혜택에 대해서는 '앱 사용자 위치기반 표시 서비스' 52.90%(1

55명), '혜택플러스 가맹점 표지제공' 40.61%(119명), '혜택플러스 가맹점만을 위한 이벤트 강화' 35.84%(105명) 등이 제안됐다.

이같은 성과에 힘입어 이용자 97%, 소상공인 81%가 서로e음 지속 운영을 희망했다.

서구는 서로e음 활성화로 지난 9월 2019 대한민국 균형발전 박람회에서 '지역산업진흥 유공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을 수상한데 이어 이달에는 김승수 전주시장이 서로e음 벤치마킹을 위해 서구를 방문하기도 했다. 서로e음은 지난달 23일 기준으로 사용자 28만명, 사용액 2772억원 규모다.

이재현 서구청장은 "서로e음은 선순환 지역경제를 목표로 놀랄만한 성장세를 기록 중"이라며 "7% 캐시백을 연말까지 꾸준히 유지하고 5000억원 목표액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은경 기자 lotto@incheonilbo.com

경기매일

2020년 11월 24일 화요일 013면 인천

지역화폐 새 역사 쓰는 '서로e음'



**서구, '제2회 자치분권 포럼'에서 벤치마킹 대상으로 우뚝
지역화폐 서로e음 정책 발표, 놀라운 성장만큼 뜨거운 반응
'이음'으로 지역공동체 유대 강화·자치분권에도 힘 실어**

출시 이후부터 화제를 모으며 전국 지역화폐 기록을 갈아치운 서로e음이 '2020 제2회 자치분권 포럼'에서 정책발표를 통해 놀라운 성장만큼이나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냈다.

전자식 모바일 플랫폼에 기반한 편리성과 탄력적인 캐시백 정책으로 시즌1을 안착시킨 데 이어 전국 최초 공공배달앱인 배달서구와 온라인구물·남남서구를 등 온라인쇼핑몰을 내세운 시즌2까지 연달아 성공시키며 지역경제 활성화 주역으로 우뚝 선 서로e음에 대한 찬사가 이어졌다.

인천 서구(구청장 이재현)는 지난 20~21일 열린 '2020 제2회 자치분권 포럼'에 참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전국 지방정부의 우수 정책 사례 공유와 토론의 장에 함께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9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한 차례 연기됐으며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우려해 당초 기획했던 박람회 형식이 아닌 포럼 형식으로 규모도 축소됐다. 참가 인원 역시 제한된 가운데 세션별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갖춘 채 열렸다.

'자치분권! 국민이 원하는 삶의 방향을 읽다'란 주제로 진행된 이번 포럼에서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기조 강연, 협의회 정기총회, 지방자치분권 아카데미, 4개 소주제별 자치분권 콘퍼런스, 초청대담, 지식포럼 등이 펼쳐졌다.

서구는 위 프로그램 중 기초지방정부의 정책 모델 도출 및 확장 가능성을 모색해보는 자치분권 콘퍼런스에서 이재현 서구청장이 직접 발표자로 나서 '지역공동체 강화를 위한 자치분권의 시작, 서로e음'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전국 최고 역외소비용 ▲높은 소상공인·중소기업 비율 ▲수도권매립지 등 열악한 환경 ▲부족한 인프라 ▲신도시와 구도시의 극명한 차이 등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음'이란 연결고리를 생각해내고 이를 플랫폼에 기반한 지역화폐로 완성하기까지의 과정이 소개됐다.

기존의 관(官) 중심에서 탈피하고자 전국 최초로 민간운영위원회를 구성한 데 이어 지역매너저와 구민홍보대사까지 철저히 민(民) 중심으로 지역화폐를 운영한

결과, 서로e음은 기대를 한껏 뛰어넘는 성과를 달성했다.

사용자 수만 해도 38만1,030명으로 지역화폐 발급 가능 인구(46만 명)의 80%를 훌쩍 넘길 뿐 아니라 발행액은 기초지방정부 지역화폐 발행 역사상 최단기간(1년 6개월) 최고액(9,400억 원)을 기록하기에 이르렀다. 파급효과에 따른 생산 유발과 고용증대 또한 상당하다.

이로 인해 지역공동체 유대 강화에 이어 자치분권 모범사례 구축까지 해냈음을 소개하자 콘퍼런스에 참가한 기초지방정부 단체장들은 열띤 관심을 보이며 벤치마킹을 위한 질문을 설 틈 없이 이어갔다.

이재현 서구청장은 "우리 서구의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의미 깊은 행사에 참가하게 됐다"며 "은 좋게도 서구의 자랑인 서로e음을 널리 알릴 수 있었던 데다 많은 분이 큰 관심을 가져주셔서 뿌듯하다"고 말했다.

덧붙여 "이번 포럼을 통해서 서구가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는 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핵심역량을 다수 발견했다"며 "다양한 성공사례를 분석해 서구에 맞게 적용해나감으로써 '살고 싶고, 머물고 싶은' 서구의 매력을 한층 높여겠다"고 밝혔다.

김민립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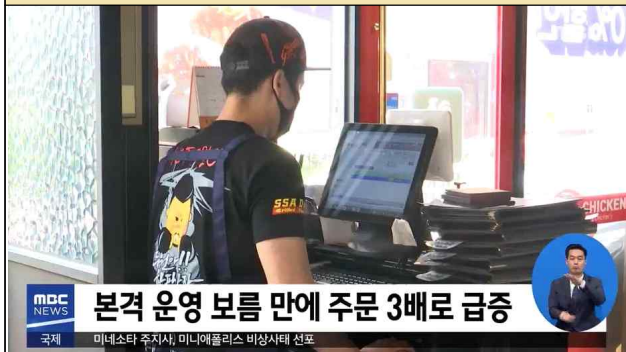
○ 방송 보도



2020. 4. 9. KB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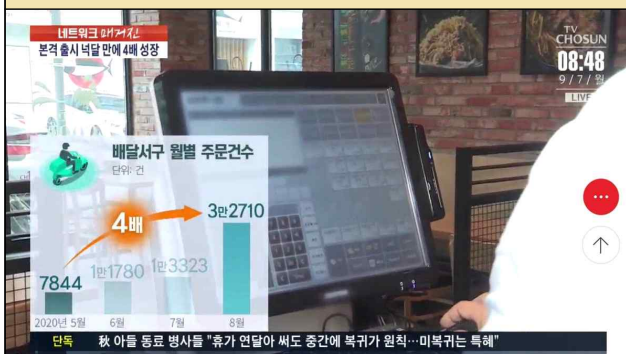
2020. 4. 21. KB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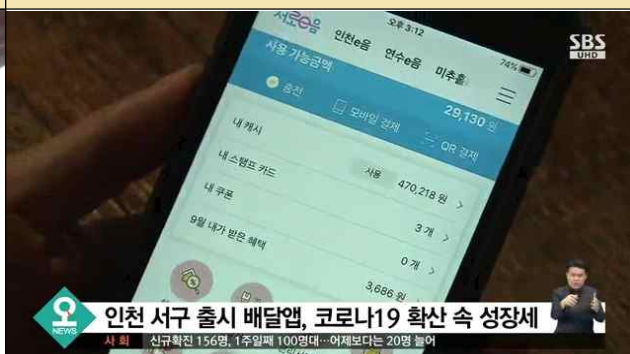
2020. 5. 29. MBC



2020. 8. 7. KTV(한국정책방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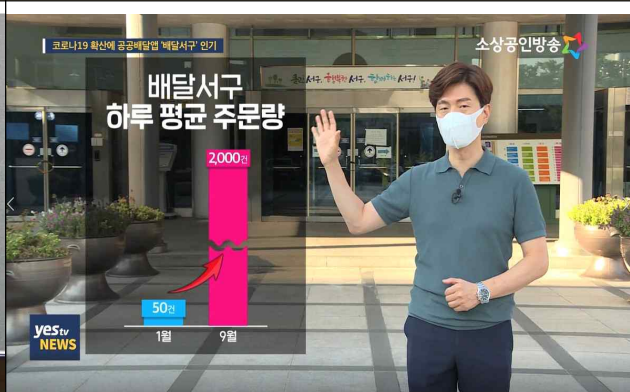
2020. 9. 7. TV조선



2020. 9. 9. SBS



2020. 9. 11. TBN



2020. 9. 14. 소상공인방송



2020. 9. 16. KBS



2020. 1. 14. MBN



2021. 1. 14. KBS



2021. 2. 8. OBS



배달서구 점유율 증가 인터뷰 내용



사업추진 후 실질소득 증가로 이어진 주요 언론 보도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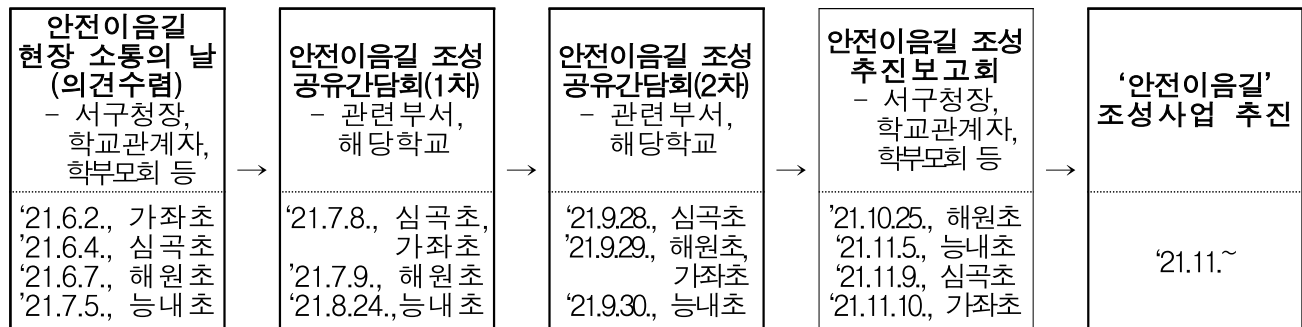
수범사례 10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이음길(路) 조성사업 추진

❖ 어린이 안전 취약지 발굴과 정비를 통해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이음 철학을 반영한 서구형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이음길(路)’ 조성

□ 사업개요

- (사업추진T/F구성)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확보 방안, 사업발굴 협의
 - 유사·중복·상충된 사업 조정 및 협력 강화
- (사업대상발굴) 사업 대상지 현장소통 및 사업 우선순위 선정
- (사업추진내용) 어린이보호구역 시인성 개선, 미끄럼방지시설, 속도저감 시설, 교통정온화시설 등 설치를 통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진입과 동시에 분위기로 어린이보호구역임을 직감할 수 있는 서구형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이음길(路)’ 조성

□ 추진사항



-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이음길(路) 조성 추진계획 수립(2021.5.17.)
- 안전이음길 현장 소통의 날
 - 구청, 학교 관계자(학부모회)가 함께하는 어린이 보호구역 현장점검을 통해 보호구역 내 취약점을 발굴·정비
- 안전이음길 조성 공유간담회·추진보고회
 - 안전이음길 조성사업 추진계획 공유 및 의견교환
- 안전이음길 조성사업 추진
 - 추진대상 : 4개교(가좌초, 심곡초, 해원초, 능내초)

- 사업방식 : 사업예산 규모를 고려하여 1·2단계로 구분 추진
 - ※ 1단계사업(2021.11.) : 옐로카펫, 표지판 설치, 무인교통단속카메라 설치 등
 - ※ 2단계사업(2022.05.) : 아스콘 절삭 후 재포장, 노면도색, 고원식횡단보도, 미끄럼방지포장재 설치 등
- 소요예산 : 529백만원(1단계 218백만원, 2단계 311백만원)

□ 수범사항

- 권역별 현장 소통의 날 운영으로 현장 의견수렴 확대
- 현장 중심 안전점검 추진으로 개선사항 도출
- 기관, 부서별 어린이보호구역 내 각 개별사업의 공유(추진시기, 대상 등)를 통한 연계성 강화

□ 언론보도사항

기호일보
2021년 6월 8일 화요일 017면 사람

어린이 보호구역 제 역할 다하도록 장애물 제거

인천 서구, 안전 이음길 조성 '현장 소통' 학부모들과 위험 요소 찾고 보완책 모색

인천시 서구는 지난 2일부터 7일까지 3회에 걸쳐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이음길(路) 조성'을 위한 현장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현장 소통은 가좌초교, 심곡초교, 해원초교 등 3곳에서 이뤄졌으며 이재현 서구청장을 비롯 교통정책과와 주차관리과, 학교 관계자, 학부모 등이 참여했다.

구는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실태를 조사하고 미흡한 점을 교통안전 정책에 반영하고자 현장 소통을 펼쳤다. 현장점검 결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아이들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한 안전하게 등·하교하려면 어떤 제도적 장치가 보완돼야 할지에 대해 많은 의견이 오갔다.

이재현 서구청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전수 조사를 진행해 학교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를 세밀히 파악해 나가겠다"며 "서구만의 어린이



보호구역 모델을 선보이기 위해앞으로도 학교 관계자, 학부모님과 소통하며 교통안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구는 '어린이 보호구역 최우선, 안전이음길(路) 조성'사업의 1단계 사업을 올해부터 추진하고 향후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에 대해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 방안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다.

최상철 기자 csc@kihoilbo.co.kr

수범사례 11 엠파크 중고자동차 민원처리 협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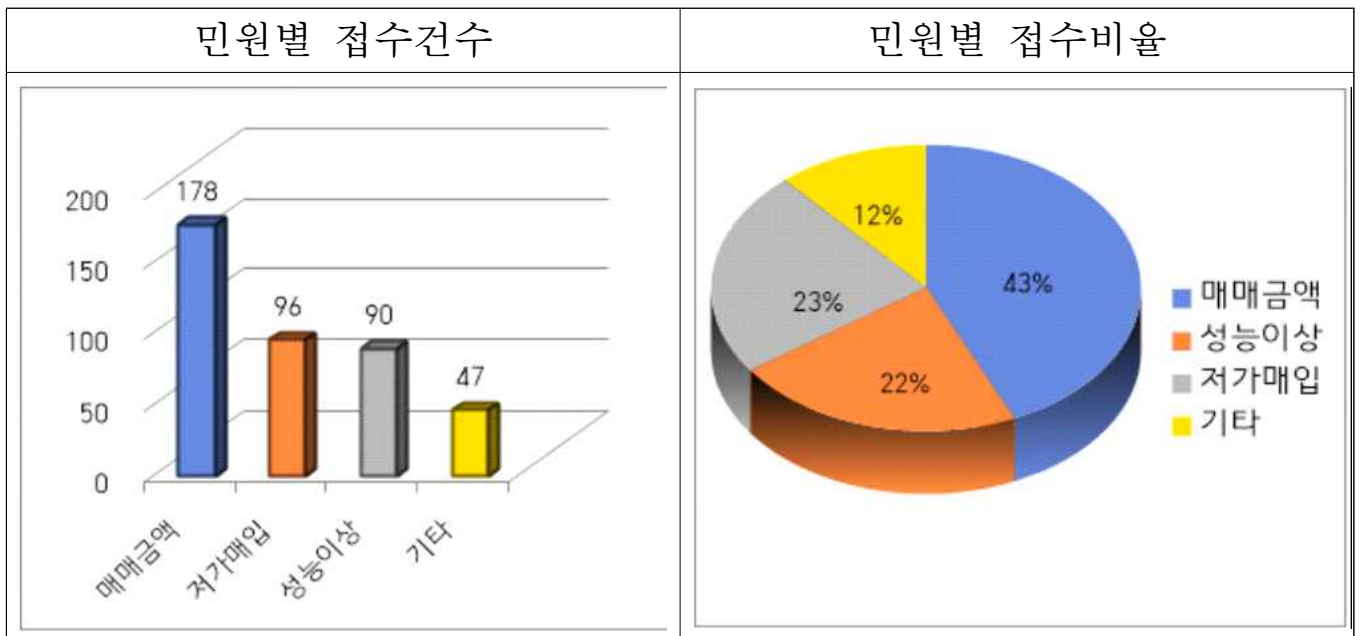
❖ 관련기관(서부경찰서)와 협업하여 신속한 소비자 피해회복 및 위법 행위 사전차단

□ 추진근거

- 자동차관리법 제57조(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의 금지 행위)제1항
- 자동차관리법 제58조(자동차관리사업자의 고지 및 관리의 의무 등)제1항
-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3(자동차관리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제1항, 제2항
- 자동차관리법 제65조(자동차관리사업자의 수수료 등)제3항
- 자동차관리법 제66조(사업의 취소·정지)제1항제7호, 9호
- 자동차관리법 제84조(과태료)제3항제21의2호

□ 사업개요

- 민원현황 분석 (2021. 12. 28. 기준, 411건 접수)



☐ 추진사항

- 과징금 부과 : 27건/ 5,700천원
- 과태료 부과 : 9건/ 3,000천원
- 수사의뢰, 고발 : 5건

☐ 수범사항

- 관련기관(서부경찰서)과 협업하여 신속한 소비자 피해회복 및
위법행위 사전차단

수범사례 12 세외수입과태료 체납정리 강화

- ❖ 자동차 관련 세외수입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체납처분을 실시하는 등, 다각적이고 실효성 있는 징수방법을 개선하여 세외 수입 증대 도모

추진근거

-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9조
- 『국세징수법』 제24조, 제41조~제54조
- 『지방세징수법』 제33조~제64조, 제106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사업개요

- 체납현황

(단위: 백만원, %/ 2021. 12. 22.기준)

구분	부과액 (A)	체납정리실적			미수납액 (A-B)	정리율 (B/A)
		징수액	결손액	정리액(B)		
합계	21,311	2,834	1,120	3,954	17,357	18.6
현년도	2,261	1,223	12	1,235	1,026	54.6
과년도	19,050	1,611	1,108	2,719	16,331	14.3
주요과태료 세목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과태료 - 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 -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 - 자동차등록위반과태료 - 건설기계관리법위반과태료 				

○ 주요 세목별 체납현황

(단위: 백만원, %/ 2021. 12. 22.기준)

구분		부과액(A)	정리액(B)	미수납액(A-B)	정리율(B/A)
합계		20,300	3,238	17,062	16.0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범위반과태료	현년도	974	288	686	29.6
	과년도	14,362	1,991	12,371	13.9
자동차검사지연 과태료	현년도	571	268	303	46.9
	과년도	4,393	691	3,702	15.7

□ 추진사항

- 체납고지서 일제 발송 : 121,858건 / 34,974백만원
 - 5회 발송 (3,5,8,10,12월)
- 부동산, 예금, 자동차 등 압류 : 11,997건/ 3,524백만원
- 소멸시효 완성, 무재산 등에 의한 결손처분 : 3,228건/ 1,120백만원
- 고액체납자 동별 징수담당자 지정
 - 전화독려에 따른 분할 납부 : 169건/ 40백만원

□ 수범사항

- 체계적인 징수 체계 확립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
- 세외수입 분야의 신속한 체납처분으로 징수를 위한 채권 확보
- 과년도 체납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한 체납액 감소
- 징수불가능한 체납에 대해 결손을 통한 체납정리

수범사례 13 위반건축물 예방사례집 발간 및 배포

- ❖ 스마트에코시티 구현과 건축 행정에 대한 구민 이해도를 높여 위반건축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건축법 위반사례를 담은 ‘위반 건축물 예방사례집’ 제작 및 배부

☐ 추진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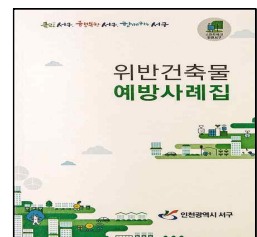
-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
- 『2021년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계획』 (건축과-8379호, 2021.03.10.)

☐ 사업개요

- 그림과 표 등을 이용해 알기 쉽게 제작하여 건축법 위반사례에 대한 정확한 안내 및 홍보로 위반 건축행위 예방을 통한 건전한 건축문화 조성

☐ 추진사항

- 2021. 05. 17. 물품계약 의뢰
- 2021. 05. 24. 물품계약 체결
- 2021. 05. 31. 납품완료
- 2021. 06. 01. 『위반건축물 예방사례집』 배부



* 본청(민원실, 건축과 등) 및 검단출장소, 동 행정복지센터

<위반건축물 예방사례집>

☐ 수범사항

- 구민들의 위반 건축행위에 대한 경각심 유발 및 준법 의식 강화
- 화재 발생 위험을 줄이고 각종 재해 예방 효과
- 주변 미관 개선 효과로 인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기여

□ 언론보도사항

서울매일

2021년 6월 2일 수요일 008면 인천

서구, '위반건축물 예방 사례집' 제작해 총 5300부 배부

이광식 기자 / 인천 서구(구청장 이재현)는 '스마트에코시티' 구현과 건축 행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위반건축물 발생을 예방하고자 건축법 위반 사례를 담은 '위반건축물 예방 사례집'을 제작해 5,300부 배포한다고 1일 밝혔다.

예방 사례집은 위반 건축행위의 종류

와 사례, 적발유형, 관련 Q&A, 행정절차 등을 그림과 표 등과 함께 수록해 구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위반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서구는 사례집을 본청, 동 행정복지센터, 검단출장소 등에 배부해 위반 건축행위 예방을 위한 홍보물로 활용할 예정이다.

서구 관계자는 "건축주들이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생각으로 위반건축행위를 하고 있지만,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시정명령 후 시정이 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등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기돼 재산권 행사 및 각종 인허가(영업 신고 등) 신청 시 제한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뉴스 ① 정확도순 · 최신순

서구, 위반건축물 예방 사례집 제작

인천 서구(구청장 이재현)는 '스마트에코시티' 구현과 건축 행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위반건축물 발생을 예방하고자 건축법 위반 사례를 담은 '위반건축물 예방 사례집'을 제작해 5,300부 배포한다고 1일 밝혔다. **예방 사례집**
서울매일 2021. 06. 01



인천서구, 위반건축물 피해방지 사례집 발간

인천 서구가 발행한 위반 건축물 예방 사례집.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 서구**는 스마트에코시티 구현과 건축 행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위반건축물 발생을 예방하고자 건축
파이낸셜뉴스 2021.06.01 다음뉴스

인천 서구, '위반건축물 피해방지 사례집' 발간 미디어이슈 2021. 06. 01

인천 서구, '위반건축물 피해방지 사례집' 발간 연합시민의소리 2021. 06. 01

인천 서구, '위반건축물 피해방지 사례집' 발간 여성종합뉴스 2021. 06. 01



인천시 서구, '위반건축물 피해방지 사례집' 발간

안정태 기자 | 인천 서구는 '스마트에코시티' 구현과 건축 행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위반건축물 발생을 예방하고자 건축법 위반 사례를 담은 '위반건축물 예방 사례집'을 제작해 5,300부 배포한
미디어투데이 2021. 06. 01

인천시 서구, '위반건축물 피해방지 사례집' 발간 뉴스후 2021. 06. 01

인천시 서구, '위반건축물 피해방지 사례집' 발간 케이에스피뉴스 2021. 06. 01

인천시 서구, '위반건축물 피해방지 사례집' 발간 투데이경제 2021. 06. 01

서구, '위반건축물 피해방지 사례집' 발간

인천 서구(구청장 이재현)는 '스마트에코시티' 구현과 건축 행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위반건축물 발생을 예방하고자 건축법 위반 사례를 담은 '위반건축물 예방 사례집'을 제작해 5,300부 배포한다고 1일 밝혔다. **예방 사례집**
시대일보 2021. 06. 02

서구, '위반건축물 피해방지 사례집' 발간 수도권일보 2021. 06. 01

서구, '위반건축물 피해방지 사례집' 발간 경인신문 2021. 06. 01

수범사례 14 장기 미착공(미착수) 건축물 건축허가(신고) 취소

- ❖ 건축허가(신고)를 득한 후 「건축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미착수 건축허가(신고)의 취소 처분 실시

☐ 추진근거

- 「건축법」 제11조제7항 및 제14조제5항
 - (허가) 허가일로부터 2년(공장은 3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허가취소
 - (신고)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효력 상실
 - * 허가(신고) 미착수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1년 연장 가능
-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등

☐ 추진사항

- 매년 상반기(1월), 하반기(7월)에 장기 미착공(미착수) 건축허가(신고)의 취소 대상 조사·의견청취 및 취소 처분 실시
 - 인천시 종합감사 시 잔여 미착공(미착수) 건축허가(신고) 건수: 0건

☐ 수범사항

- 정기적으로 건축허가(신고)의 취소 관리를 통해 건축행정 건실화에 기여

☐ 언론보도사항

- 보도사항 없음

수범사례 15 찾아가는 공동주택 맞춤형 교실, 인천 최초 운영

- ❖ 공동주택의 관리분야에 대한 단지별 찾아가는 맞춤형 방문교육 실시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등 공동주택 관계자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입주자의 올바른 공동체문화 조성에 기여함

☐ 추진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제17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등 교육)

☐ 사업개요

- 대 상: 관내 의무관리 공동주택 단지의 관계자(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관리주체, 입주자 및 사용자)
- 장 소: 공동주택 단지 내 회의실
- 교육내용: 공동주택관리법령, 관리규약 및 제규정에 관한 사항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직무소양 및 윤리에 관한 사항
기타 단지별 관리 취약분야 및 요청사항 등

☐ 추진사항

- 2021.10월 중 3개 공동주택 단지 실시
- 청라더샵레이크파크아파트, 엘지원당자이아파트, 당하KCC스위첸아파트
- 2021.12월 중 3개 공동주택 단지 실시
- 검단e-편한세상아파트, 대원레스피아2차아파트, 청라29블럭 호반베르디움

☐ 수범사항

- 인천시 자치구 중 최초로 우리 구에서 2021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공동주택 관계자의 자치역량 강화와 입주자의 올바른 공동체문화 조성에 기여함
- 교육시 참여자의 관심과 호응이 많았으며, 만족도 조사결과 신청 단지의 만족도가 매우 높아 향후 교육 대상 단지의 확대 필요

○ 2021.09.12. ~ 09.13. : 내외일보 등 다수 일간신문 게재

○ 2021.11.02. ~ 11.03. : 시민일보 등 다수 일간신문 게재

○ 2021. 12. 6. ~ 12. 7. : 인천일보 등 다수 일간신문 게재

- 206 -